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88-1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2022~2026)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88-1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2022~2026)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Contents

I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개요	1
	1. 수립배경	3
	2. 수립대상 기관 및 정책	3
II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추진성과	5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 주요 통계	7
	2. 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10
III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19
	1.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21
	2. 기관별 소관 정책과제 추진계획	27
	- 법무부·대검찰청	29
	- 교육부	127
	- 보건복지부	133
	- 고용노동부	149
	- 여성가족부	159
	- 법원행정처	183
	- 경찰청	205
	- 방송통신위원회	241
	- 지방자치단체	259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I
—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개요



① 수립배경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2~'26년) 수립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장관)의 심의를 통해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2~'26년)」 마련

□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립대상 기관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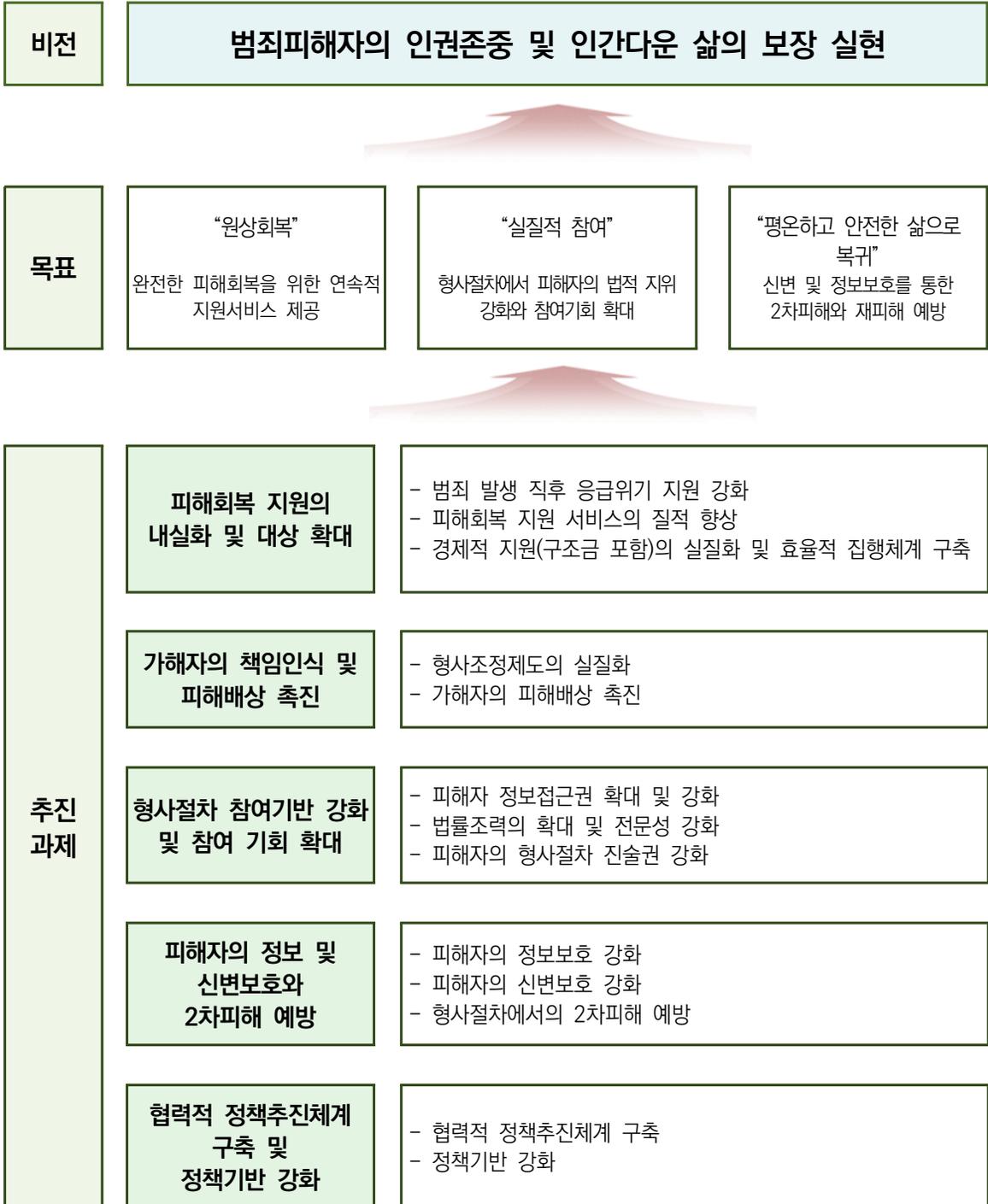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10개 기관(6부, 1처, 2청, 1위원회)
 -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대상정책 및 과제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2~'26년)」에 따른 13개 정책과제 및 34개 세부추진 과제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II —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추진성과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 주요 통계

□ (법무부·대검찰청) 강력범죄피해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강화

-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경제적 지원*	건수	1,762	1,719	1,599	
	금액	13,013	13,482	12,718	
심리 지원(건)**		66,993	72,398	90,945	
법률 지원(명)***		28,691	42,630	42,983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등 지원실적

** 심리적 지원 : 스마일센터 지원실적(심리지원, 사회적 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지원)

*** 법률적 지원 :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실적(단위 : 명)

□ (교육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대 및 상담자 직무 역량 강화

※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연중, 시·도교육청별 자율 운영)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 아동학대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	2020	2021
아동학대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아동학대 건수	30,045	30,905	37,605

● 학대피해 아동 인프라 구축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9	2020	2021
아동보호전문기관	68	71	81
학대피해아동쉼터	73	76	105

□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및 권리구제 지원

● 체불청산 지원 현황('22. 12.말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응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응자
지원인원	5,291	102,153	2,678	3,080
지원금액	366	5,003	143	189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2020	2021	2022.6	비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797,542	845,211	409,228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상담소, 보호시설, 1366,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978,412	857,449	484,691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현장기능강화)	148,427	154,888	66,15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현황	170,697	188,083	126,103	
합계	2,095,078	2,045,631	1,086,173	

● 여성폭력 피해자 만족도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만족도	90	91.5	91.8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만족도	93.7	94.1	94.3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만족도	90.84	92.07	92.4	

□ (법원행정처)

- 형사절차 상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증인지원제도 시행

- 증인지원관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3. 1.	비고
증인지원관 인원	80	83	82	122	

- 증인지원실 구축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3. 1.	비고
특별증인지원실	58	58	58	59	- 2022. 3. 개원한 남양주지원 설치 완료 - 의성지원 제외 전국법원 설치 완료
일반증인지원실	17	19	20	24	- 2022년 하반기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설치 완료

- (경찰청)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및 심리적·경제적 지원연계로 보복·재범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실적〉

(단위 : 건)

구분	긴급단계 심리상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리적·경제적 지원 연계	회복적 경찰활동	범죄피해평가
'22년	8,202	29,372	24,327	1,203	1,690

2 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 (법무부·대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지속 강화 및 형사절차상 보장된 권리 보장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 지침」 개정으로 간병비, 취업지원비 지원범위 확대 및 금액 상향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실무운영 지침」 개정, 『범죄피해구조금 업무 편람』 발간으로 구조금 지급 업무 개선
-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현안 등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광주 철거건물 피해자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지원, 국방부와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군 성폭력피해자 지원,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 사회현안에 대해 타부처와 협업하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실시
- 스마일센터 이용자에 대한 성향 분석, 대상자별 사례관리, 상담자로 DB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다량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행사의 성공적 개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공익영상 제작 및 옥외광고’ 등 다양한 행사 개최와 다양한 콘텐츠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전국적 확대 및 배치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선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변호사를 '22. 4.~9. 3회에 걸쳐 총 12명 신규 채용 및 배치
 - * 배치지역 : 서울중앙, 서울서부, 경기 남양주, 부천, 수원, 성남, 평택, 경북 김천, 부산서부, 광주, 전남 순천, 전북 군산 등 12개 지역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제도 도입·신설 및 실태조사 정례화·의무화

- 피해자 법률지원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기간 직권연장 규정 신설 등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편 연구 실시
 - 국선변호사의 실무상 피해자 법률조력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및 범죄별, 피해유형별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 진술조력인 배치 기관 확대
 - 진술조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상근 진술조력인 3인 추가 배치('22.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22. 5.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22. 9. 서울지방경찰청 희망센터)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22. 1. 28.)으로 장애인의 경우 기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로 진술조력 지원 대상을 확대
-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네트워크 형성('22. 6. 경상도, '22. 12. 예정)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및 역량 강화('22. 11.)
 - 월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 등 논의('22. 연중)
-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신변보호 조치에 이전비 내용 추가 및 성폭력피해자 등 권리 및 지원 안내서 실질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지원 업무처리 지침(미성년자의 경우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 신설)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22. 2.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신설 통한 원스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 범죄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부터 일상회복 시까지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장 위한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팀' 신설

- '22. 4. 및 11. 한국피해자학회와 학술회의 공동 주최(2회)하여 한국 피해자 보호 지원의 현황과 과제·입법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해외 동향 파악 및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보호 방안 등 논의
-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통지 방안 개선
 - '22. 5. 형사조정을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 시 피해자에게 처분결과(기소중지)만 통지되었으나, 형사조정을 사유로 기소중지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통지 내용 수정하는 등 통지방안 개선
 - '22. 7. 피해자에게 사건결정결과 문자통지가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22. 5. 변사사건 접수단계에서 피해자지원 의뢰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피해자지원 의뢰가 가능하도록 변사사건 접수 화면에 '범죄피해자 상담·지원 의뢰서' 탭 신설 등 범죄피해자 신속 지원 강화
- '22. 6.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대응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며 종합적인 보호지원 강화 지시
 -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정 및 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피해자 지원
- 일선 청 장애인 전용조사실 구축 추진
 - '22. 10개 검찰청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30개 검찰청 장애인 보조기구 상시 배치
 - ※ '23. 8개 검찰청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및 30개 검찰청 장애인 보조기구 배치추진 예정
- 업무 전문성 제고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제정('22. 4.) 및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발간('22. 5.)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및 형사조정가이드북을 일선 청에 배포하여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 '22. 연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교양 하기위해 일선 검찰청 지도 점검 실시
- '22. 연중. 2회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범죄피해자실무과정 집합교육 실시

- '22. 12. '범죄피해자지원 Q&A 및 우수사례집' 발간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실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쟁점 위주로 질의 및 답변, 우수사례 등 설명을 통해 일선청 피해자지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Q&A 및 우수사례집 발간
- '22년 9개 과정(12회), 법무·검찰 공무원 386명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교육

□ (교육부)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기관 확대 및 상담인력 직무역량 강화 추진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의 상처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상담인력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실시('22.7.~10, 2,833명)
 - ※ 연도별 현황 : ('20) 139개소 → ('21) 158개소 → ('22) 303개소
- 전문상담인력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22.7.~10, 2,833명) 및 위기사안별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위기사안9종 : 학교부적응 4종(또래관계, 교사-학생 관계 개선, 비폭력대화, 게임과몰입), 학교폭력 2종(피해, 가해), 정서문제 3종(자해, 트라우마, 우울·불안)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피해 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지속 추진

- 민간수행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27명('22.9.7기준)을 배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법률 자문 등 지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지원
 - 장기결석, 예방접종·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아동안전 확인,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확대,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 , 방문형 가족회복프로그램 도입('22~)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보호시설) 확충

구분	'19년	'20년	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예산기준)	68	71	81
학대피해아동쉼터(예산기준)	73	76	105
아동학대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아동학대 건수	30,045	30,905	37,605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

- 상담 및 사업장 감독을 통한 노동법 관련 범죄피해 예방* 지속 추진
 - * <상담> '22.12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실적 922,766건
 - * <사업장 감독> ('20년) 15,797개소 → ('21년) 22,252개소 → ('22.12월 기준) 27,180개소
↳ '20, '21년은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감독 실시
- 피해근로자에 대지급금 등 체불 청산 지원,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직자 취업 알선 등 지속 추진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여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 * ('21.12월 기준) 188,083건 → ('22.12월 기준) 234,560건, 전년 대비 25% 증가
 - 디지털성범죄 맞춤형 지역특화상담소 확대('21 7개→'22 10개) 및 피해촬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과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 지원 시스템 연계 추진('22.9월~)
-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권익 보호 확대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마련 및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우선 지원하여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 * 스토킹 상담·보호 현황 : ('21) 5,367건 → ('22^{잠정}) 9,850건

-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행안부 협조)

* '22.8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공포

-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성폭력 피해자의 맞춤형 피해 회복을 지원

* 성폭력 상담소 상담 실적 : ('22.6월) 139,273건 / * 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실적 : ('22.6월) 76,276건

- 법원이 아닌 아동친화적 공간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법원행정처 협업)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총 52건 65명 실시(~'22.12월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특례 및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3.23. 개정, '21.9.24. 시행)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 없이도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先 삭제 지원하여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 ('21.12월 기준) 33,437건 → ('22.12월 기준) 34,860건, 전년 대비 4.3% 증가

□ (법원행정처)

- 증인신문 외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제도 홍보(연중)

- 피해자 진술권에 대하여 증인지원관, 안내문, 리플릿 등을 통하여 안내

- 증인지원관·증인지원제도 지속 실시

- 모든 법원에 성폭력 범죄피해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 등의 특별증인 및 강력사건이나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 등 취약증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제도 지속 실시

- 특별(취약)증인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제도 지속적 확대

- 2022. 9. 기준 전국 16개 지방법원 및 6개 지원에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 2022년 하반기 청주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추가 설치 진행 중

- 2021년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법원의 일반증인지원 건수는 월 평균 59건
- 2022년 1~8월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법원의 일반증인지원 건수는 월 평균 40건
- 2022년 10월 증인지원제도 안내동영상 USB 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 배부
-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연중)
 - 피해자변호사·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등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과 동석
 - 비공개 증인신문·차폐시설·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 법원 청사 내 화상증언실 이용하여 영상증언 실시(연중)
 - ⇒ 법원 청사에 영상재판을 위해 설치·이용 중인 화상증언실 이용하여 영상증인신문 시행 중, 특별증인지원 서비스 제공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연중)
 - ⇒ 법원 청사로 출석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출석하여 영상증언을 실시
 - ⇒ 2022. 4. 11. 시범사업 시행
 -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16개 시·도, 전국 34개소 해바라기센터로 전면 확대 실시
 - 찾아가는 영상법정(연중)
 - ⇒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활근거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희망하는 공간에 증인지원관·영상재판담당자가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찾아가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장비 구비 완료, 증인의 위치와 환경이 노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기능 보완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형사재판 관련 법원내부 전산망에서 피해자 증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하여 특수 제작된 접착식 메모지 및 비실명처리 프로그램 이용하여 2차 피해 방지(연중)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 연수(2022. 3.) 및 증인지원관 교육(2022. 1.) 실시 및 증인지원관 워크숍 실시(2022. 8.)

□ (경찰청) 긴급단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로 피해자 중심 경찰활동 정착

- (인프라 확충) △ 안전조치 수요 과다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증원(+70명, 총 259명)
△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증액('22년 61.7억 → '23년 78억 / +16.3억)
- (안전조치 강화) △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경고하는 '지능형 CCTV' 도입(11월)
△ 성능·편의성이 개선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 도입(3,700대 → 10,000대 / 12월)
- (긴급단계 피해자 지원) △ 심리전문인력 활용 위기개입상담(8,202건) △ 중대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팀 운영* △ 피해자 상담 전용공간 운영 확대(3개소→6개소)
* △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22. 1월) △ 울진·삼척 산불('22. 3월) △ 대구 법조타운 방화('22. 6월) 등
- (관계기관 협업) △ 치료비·생계비·심리치료 등 경제적·심리적 지원연계 24,327건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범죄피해가정 아동 지원제도 연계 75명(1.8억) 등
- (형사 절차 참여 강화) △ 회복적 경찰활동*(200→230개서) △ 범죄피해평가**(208→230개서) 운영 확대로 실질적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도모
* 회복적 경찰활동 : 가해자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한 근본적 문제가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주관 가·피해자 대화모임 개최, 재발방지·관계회복 등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 범죄피해평가 : 살인·성폭력·스토킹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종합 평가하여 수사서류에 첨부, 가해자 구속·양형에 반영

III

—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Ⅲ.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1.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법무부·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23. 연중)
 - 결혼이민자 등 구조금 지급 대상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정부) 국회 논의 지원 등 개정 추진 지속
 -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가해자 재산조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정부) 국회 논의 지원 등 개정 추진 지속
-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의 대상 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을 통한 내실화 추진
-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강화 및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강화 등 형사절차상 보장된 범죄피해자의 권리 강화 방안 지속 추진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바뀐 수사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 지원 도모
- 전국 60개 지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련된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강화 및 지원 서비스 확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용역 추진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원스톱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 신설 추진
 -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건발생 초기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확대 지속 추진
 - 국선변호 및 진술조력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속적 확대, 배치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결과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추진(스토킹범죄 등)
- 진술조력인 인력 운용개선 방안 마련
 -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용 제고, 권역별 인력 배치를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의 혜택이 지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진술조력인 평가 관련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술조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 지원 도모

□ **(교육부)** 학생 범죄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학생 범죄피해자 대상 민간 지원기관 지원 및 해당 기관 소속 전문상담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전문상담인력 대상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연중, 시·도교육청별 자율 운영)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및 학대피해아동 사회 안전망 구축 지속 추진

-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구축 강화

- 연령, 성별,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년) 81개 → ('22년) 95개 수준 → ('25년) 120개 목표

- 학대피해아동쉼터 : ('21년) 105개 → ('22년) 141개 수준 → ('25년) 240개 목표

-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범피기금) 예산 복지부 일반회계로 통합('22년)

-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 개선

-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 범죄 예방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상담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 대상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 실시

- * ('20년) 15,797개소 → ('21년) 22,252개소 → ('22.12월 기준) 27,180개소

- ↳ '20, '21년은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감독 실시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급 지급, 업무상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서비스 지원

- 피해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상담 안내 등 고용서비스 지원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및 여성·아동 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제고 및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확대, 관계기관 연계·협력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노력 지속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등 스토킱피해자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 3년 주기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23년)

□ **(법원행정처)**

-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노력
-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증인지원제도 확대 및 강화
- 개정 공탁법 시행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
- 양형심리모델의 확대 실시 및 양형조사제도에서의 당사자의 신청권·참여권 보장 활성화
- 범죄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 **(경찰청)** 피해자 안전 및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단계 보호·지원 강화 지속 추진

- **(안전조치 고도화)** △ 고위험 사건 신속·집중 대응 △ 민간경호서비스 도입(수도권 시범운영) △ 고위험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확대 등 안전조치 강화로 추가피해 방지
- **(경찰 단계 긴급지원)** 범죄피해 직후 △ 심리전문인력 위기개입상담 △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 현장정리 △ 응급지원물품(담요·구급약·위생용품) 제공으로 심리 안정 도모
- **(심리적·경제적 지원연계)** 법무부·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치료비·생계비·심리치료 등 지원제도 연계 허브 역할 수행,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언론, 대중매체 등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관련 방송심의 강화
- 방송사업자 자율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의사례 배포 및 교육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정보 유출 신속심의·차단 및 관련 통신심의 강화
-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유포차단·삭제 등 24시간 상시 심의체계 공고화
- 디지털성범죄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및 연계를 통한 공조체계 구축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Ⅲ.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2.

기관별 소관 정책과제
추진계획

법무부·대검찰청



법무부·대검찰청

① 그간 추진 성과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확대 설치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 '10. 7. 서울 송파구에 최초 설치,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2년 기준 전국 16개 스마일센터에서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실시

〈스마일센터 설치 및 지원 현황〉

구분	'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설치 지역	서울 동부	부산	인천·광주	대구·대전	춘천·전주	서울 서부·수원	의정부	청주·울산	창원	제주	목포
전체 개수	1	2	4	6	8	10	11	13	14	15	16
지원 실적	518	3,599	6,772	17,064	28,931	43,750	62,388	77,001	74,556	66,993	72,398

-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지원
 - 검찰 직권 절차 도입, 긴급지원결정 신속화, 절차 간소화, 생계비 지원 요건 완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금액
2018	246	10,175,045
2019	305	11,516,296
2020	206	9,567,057
2021	191	9,792,147
2022	189	9,502,935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

(단위 : 천원)

연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합계
2018	건	744	472	319	87	175	1,797
	금액	2,603,161	255,876	676,816	109,040	507,366	4,152,259
2019	건	773	434	306	90	205	1,808
	금액	2,617,162	249,268	594,457	99,037	733,400	4,293,324
2020	건	632	387	302	68	167	1,556
	금액	2,004,767	149,880	598,040	77,200	615,897	3,445,784
2021	건	586	388	319	84	151	1,528
	금액	2,086,714	228,171	683,553	111,052	581,238	3,690,728
2022	건	487	453	249	76	145	1,410
	금액	1,809,197	219,834	499,100	97,200	589,858	3,215,189

-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형사절차 정보 제공,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 등 형사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지의사 확인		121,537	124,356	161,155	199,030	242,044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통지 등		780,033	961,396	990,972	1,155,361	1,529,808

- 보복 우려가 있는 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보호시설(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 강화

〈 신변보호 실적 〉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위치확인장치 지원		44	47	32	30	18	15
이전비		195	138	149	189	177	193
신원관리카드(가명조서)		95	117	109	104	245	226
피해자보호시설(보유 중)		6	4	5	4	4	4

-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형사조정제도의 전문화, 내실화
 -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이 형사 분쟁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 공증과 연계, 그 수수료를 지원하여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민, 형사 통합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형사조정위원 전문 교육 강화 등 내실화 도모

< 형사조정 현황 >

(단위 : 건)

연도	구분	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률(%)
2017		118,113	101,801	59,424	58.4
2018		117,014	99,176	57,061	57.5
2019		118,311	100,520	56,946	56.7
2020		77,514	66,425	34,296	51.6
2021		60,217	50,173	28,550	56.9
2022		70,878	59,969	36,719	61.2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강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 및 진술조력 제공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

구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건수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합계
2019	25,487	2,226	27,713
2020	26,007	2,684	28,691
2021	38,446	4,184	42,630
2022	39,161	42,983	42,983

②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 과제 현황

- 총 과제수 : 32개
- '23년 시행계획 반영 과제 수 : 32개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계	32	32	-
1-1.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2	2	-
1-1-①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	○	-
1-1-②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	○	-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3	-
1-2-①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	○	-
1-2-②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	○	-
1-2-③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	○	-
1-3.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3	3	-
1-3-①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	○	-
1-3-②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대상 확대	○	○	-
1-3-③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경제적지원(구조금)의 집행 체계 개선	○	○	-
2-1.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2	2	-
2-1-① 형사조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	○	-
2-1-②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	-
2-2.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2	2	-
2-2-①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
2-2-②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	-
3-1.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2	2	-
3-1-①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	○	-
3-1-②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	-
3-2.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3	3	-
3-2-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	-
3-2-②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	○	-
3-2-③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	-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3-3.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2	2	-
3-3-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	○	-
3-3-②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	○	-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2	2	-
4-1-②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	○	-
4-1-③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	-
4-2.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2	2	-
4-2-①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	○	-
4-2-②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	○	-
4-3.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3	3	-
4-3-①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	○	-
4-3-②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방해 방지대책 마련	○	○	-
4-3-③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	-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3	3	-
5-1-①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	-
5-1-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	○	-
5-1-③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 지원 영역의 발전 모색	○	○	-
5-2. 정책기반 강화	3	3	-
5-2-①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	-
5-2-②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	○	-
5-2-③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	-

3 2023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국회 예·결산 심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비율이 낮은 점이 지적되고 있어, 구조금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 필요
※ '2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총액 826억 중 구조금은 약 105억으로 13%에 불과
-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 및 피해자 정보 공유, 유기적 협력관계 수립 등 다양한 정책 과제 개발 필요
- 특히, 여성 대상 범죄,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대상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필요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비율 현황(2016~2021)〉

(단위 :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연평균 증가율
비율	84.6	83.1	83.6	84.2	80.4	-1.1

* 2022년 통계는 2023. 12. 말 『2023 범죄분석』책자 발간 이후 산출 가능

-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2)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대폭 확충 및 직접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벌금 전입비율 상향(6→8%)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충
-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현안 등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광주 철거건물 피해자 지원) 피해 현장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지원단을 파견하여 긴급생계비(2,160만원), 법률상담, 심리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 지원

- (군 성폭력피해자 지원) 국방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군 내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연계한 법률적·경제적·의료적 토털지원 서비스 및 스마일센터와 연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관계 구축
- 스마일센터 이용자에 대한 성향 분석, 대상자별 사례관리, 상담자료 DB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강력범죄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전문성 향상
 - (경제적 지원 확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속 확대 및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심리적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비,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계비·학자금,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장례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확대로 범죄피해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스마일공익신탁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직원 및 국민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한 추가 지원 실시
 - (전문성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110명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불특정 상황에서의 종사자 업무처리 능력 개선
- 범죄피해자 인식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대국민 홍보 전개
 - (다링캠페인) 2022. 6.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다링캠페인'을 전개, 적극적 홍보 및 워크온 걷기챌린지 도입 효과로 참가자 증가
 -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22. 11. 29. 범죄피해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고, 범죄피해자 중심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에 대한 새로운 전기 마련
 - (스마일센터 홍보) 서울시 관리 옥외 전광판 및 지하철 모니터에 스마일센터 홍보 영상 송출(6월), 문체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주요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36곳)

및 국가·지자체 운영 전광판(80여개)을 통하여 스마일센터 홍보 영상 송출(10월), 서울 및 수도권을 운행하는 시내·광역버스(15대) 외관에 스마일센터 홍보 배너 부착(10월)

- (기타 홍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홈페이지’ 구축을 토대로 한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상시 운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책자 및 리플릿 제작 배포(3월), 전국 1,000여 개 병·의원 키오스크 광고(4~5월), 공익영상 제작 및 KTX·SRT 및 서울역 디스플레이 광고(12월), 다음·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한 공익영상 광고(12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전국적 확대 및 배치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선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변호사를 '22. 4.~9. 3회에 걸쳐 총 12명 신규 채용 및 배치
 - * 배치지역 : 서울중앙, 서울서부, 경기 남양주, 부천, 수원, 성남, 평택, 경북 김천, 부산서부, 광주, 전남 순천, 전북 군산 등 12개 지역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제도 도입·신설 및 실태조사 정례화·의무화
- 피해자 법률지원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기간 직권연장 규정 신설 등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편 연구 실시

- 국선변호사의 실무상 피해자 법률조력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및 범죄별, 피해유형별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 진술조력인 배치 기관 확대

- 진술조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상근 진술조력인 3인 추가 배치('22.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22. 5.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22. 9. 서울지방경찰청 희망센터)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22. 1. 28.)으로 장애인의 경우 기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로 진술조력 지원 대상을 확대

-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네트워크 형성('22. 6. 경상도, '22. 12. 예정)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및 역량 강화('22. 11.)
 - 월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 등 논의('22. 연중)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 지원 강화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15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관받아 직접 지원 실시
 - '21. 8. '피해자 직접 지원 제고 방안' 마련 및 일선 청 시행 후 검찰의 직접 지원 강화 방안 지속 추진
 - '22.4.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대회 공동 주최(2회)
 - '22. 연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교양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지도 점검 실시
 - '22. 연중. 2회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범죄피해자실무과정 집합교육 실시
 - '22. 12. 피해자지원 Q&A 및 우수사례집 발간
- **범죄 발생 초기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 '22.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자 지원팀' 신설 및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 ※ 범죄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부터 피해회복 시까지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 '22. 5. 변사사건 접수단계에서 피해자지원 의뢰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피해자지원 의뢰가 가능하도록 변사사건 접수 화면에 '범죄피해자 상담·지원 의뢰서' 탭 신설 등 범죄피해자 신속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 제공 강화**
 - '22. 5. 피해자에게 사건결정 결과 통지 시 형사조정외의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 내용 추가하여 통지하는 등 안내문구 개선
 - '22. 7. 피해자에게 사건결정결과 문자통지가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등 피해자 알권리 강화

- '22. 10.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 내 스크린을 이용한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 '22. 12. 검찰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검찰의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
- 아동학대,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22. 연중. 일선 10개 지검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및 30개 검찰청 장애인 보조기구 배치, 일선 청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한 실질적 피해자 지원 도모
 - '22.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제정 및 '22. 5.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발간
 - ※ 신속·정확한 피해자지원을 위해 담당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 청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 '22.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T/F를 발족하였고, 연내 사례집 제작 후 일선 청에 배포하여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3)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직접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
 -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정부) 국회 논의 지원 등 개정 추진 지속('23. 연중)
 -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정부) 국회논의 지원 등 개정 추진 지속('23. 연중)
- 구조금 사실조회 규정 개정 등 구조금 확대를 위한 절차 개정
 -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가해자 재산조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정부) 국회논의 지원 등 개정 추진 지속('23. 연중)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으로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을 위한 여유자금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으로 생계비 등 지원 액수 상향, 신청 기간 연장 등 직접 지원 강화
-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경제적 지원 연계 강화
- 범죄발생 초기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네트워크 지속 추진
 -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하여 범죄 발생 초기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
- 경제적 지원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지원 활성화 지속 추진
 - 경제적 지원의 대상 확대, 지원금액 상향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 실질화 및 내실화
 - 경제적 지원의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피해자 지원 우수청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보장된 알권리 보호를 위해 지원 정보 제공 강화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방안 마련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방안, 신변보호 방안, 2차 피해 예방 방지 대책 등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형사조정 진행 방식의 다양화,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강화 등으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및 원스톱범죄피해자 솔루션 구축을 위한 5개 지검 피해자지원과 신설 및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증원 추진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확대 지속 추진
 -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지속적 확대, 배치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결과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검토(스토킹범죄 등)
- 진술조력인 인력 운용개선 방안 마련
 -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용 제고, 권역별 인력 배치를 통해 진술조력인의 제도 혜택이 지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진술조력인 평가 관련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술조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4 정책과제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1-1-1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역량 강화

2) 추진 내용

- 피해 발생 시 검·경이 협력하는 핫라인 구축,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신속·정확한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 전국 60개 지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련된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강화

3) 추진 경과

- '15. 9. 범죄피해자 긴급 경제적 지원 제도 마련·시행한 이래 신속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관련 지침 개정 등 다양한 방안 지속 추진
- '21. 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국 청 피해자 전담검사 화상회의 개최
 - 직권개시, 위원장 단독 결정 등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지원 당부
- '21. 8. 전국 피해자지원 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사건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 당부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 지원 방안 마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시스템 확대 및 강화

- 범죄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및 조기정착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지속 추진
- '22. 연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교양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지도점검 실시

점검일자	대상 청	점검일자	대상 청
3.29.(화)~3.30.(수)	서울남부지검	7.5.(화)~7.6.(수)	대전지검
4.12.(화)~4.13.(수)	광주지검	11.1.(화)~11.2.(수)	부산지검
5.24.(화)~5.25.(수)	수원지검	11.22.(화)~11.23.(수)	서울중앙지검

- '22. 연중, 2회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범죄피해자실무과정 집합교육 실시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범죄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부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급 청 '원스톱 범죄피해자지원팀' 신설 및 조기정착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지속 추진
- '23. 연중, 일선 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지도 점검
- '23. 연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 지원 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 체계 구축
- '23. 연중, 응급상황 발생 시 검찰의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활용방안 제고 및 홍보 강화 방안 추진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 지원 방안 마련 및 구조 공조시스템 지속 운영

⑤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823
담당자	7급 이도업	이메일	-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역량 강화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적기에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

3) 추진 경과

- '15.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정·시행
 - 피해자 직접지원비 창구 일원화, 긴급 경제적 지원 절차 신설,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심리적 치유지원 강화, 검찰 직권 절차 도입, 절차 간소화,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대형 화재 사건 시 전담팀 파견하여 경제적·법률적 지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단체·전문가 연계한 맞춤형 지원 등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방안 지속 추진
- '15. 12.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 완료
- '18. 1.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발족하여 중요·응급사건에 대해 전국 16개 스마일센터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
- '20. 12.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발간
 - 법무부는 2년 단위로 각 정부 부처의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지역별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담은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제공
- '21. 7. 아동학대 사건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선 청에 유관기관 간담회 및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활성화 지시

- '21. 8.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중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건'으로 선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으로 지원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사건초기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22.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및 원스톱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 범죄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부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및 피해자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피해자지 지원 도모
- '22. 5. 변사사건 접수단계에서 피해자지원 의뢰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피해자지원 의뢰가 가능하도록 변사사건 접수 화면에 '범죄피해자 상담·지원 의뢰서' 탭 신설
 - 직권개시절차를 통한 장례비,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도모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사건초기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23. 연중. 피해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재중 또는 업무시간 외 수신전화 자동응답 및 문자 제공 서비스' 도입 추진
- '22. 연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기관·단체·전문가 연계한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23. 연중. 5개 지검 피해자지원과 신설 및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증원 지속 추진하여 원스톱 통합지원 강화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방안 지속 마련
- '23.~'24.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자 지원 체계 방안 계속 마련
- '23.~'2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근성 강화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강화
- '23.~'24. 스마일센터 응급의료 지원 체계에 따라 24시간 지원 상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476 02-2110-3823
담당자	6급 강성민 7급 이도엽	이메일	powerksm@korea.kr -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의 생업,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으로 이동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심리지원을 기피하는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 전문적인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화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심리치료가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의 연계 체계 강화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일센터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구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3) 추진 경과

- '10. 7. 서울동부스마일센터를 최초 설립하여, 현재 전국 16개 지역 스마일센터에서 강력사건 범죄피해자와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 치료 등의 전문서비스 제공
- '14. 1.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개시한 이래 유관기관 세미나 개최, 간담회 개최, 심리치료 자문위원단 발족, '범죄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매뉴얼 제정·시행, 출장비, 검사비 등 심리치료 부대비용 실비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20. 12.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화를 위해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실시

- '21. 3. 목포스마일센터를 개소하여 목포 지역에 심리치료 전문서비스 제공
- '21. 연중. 검찰청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활성화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일센터 방문 상담 실시
 - 신체 불편, 직업, 원거리 등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대전·춘천 스마일센터에서 방문 상담 실시
- '22. 3. 「스마일센터 운영매뉴얼」을 개정하여 심리치료, 법률지원, 응급 지원체계 등 피해자 지원 절차 구체화
- '22. 3. 법무부장관, 대전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상황을 점검
- '22. 연중. 스마일센터 이용자에 대한 성향 분석, 대상자별 사례관리, 상담자료 DB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22. 연중.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22.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및 원스톱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 범죄피해 양형자료 조사보고서에 심리상담, 종합 지원내역 기재토록 개선
- '22. 연중. 검찰청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활성화 지속 추진
- '22. 10. 대중교통 내 스크린을 이용한 심리치유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일센터 방문 상담 지속 실시
- '23. 연중.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정상 가동
- '23. 연중.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속 추진
- '23. 연중. 「검찰청 범죄피해 심리지원단」 운용 실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

- '23. 연중.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지속 추진
- '23. 연중.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료 필요성 및 전문시스템 홍보 강화
- '23. 연중. 온라인 심리상담 및 치료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일센터 실적 등 각종 통계 관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연구 실시
- '23.~'24.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와의 협력체계 지속 구축 및 전문화 제고 방안 계속 추진
- '23.~'24. 범죄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활성화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476
담당자	6급 강성민	이메일	powerksm@korea.kr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자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피해자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대상 확대

2) 추진 내용

-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으로 범죄피해자 취업 지원비 지원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회적기업(카페, 화원, 공방)에 범죄피해자 또는 가족 취업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적인 생활의 터전 마련

3) 추진 경과

- '21. 2. 제도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인적 지원 요건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취업 지원 지침 개정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취업지원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전파 및 참여 유도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취업지원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견 수렴 및 반영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823
담당자	7급 이도엽	이메일	-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여성대상 범죄, 노인대상 범죄, 살인 등 피해 유형별, 대상별 맞춤형 피해회복 지원

2) 추진 내용

-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방안 마련 및 강화

3) 추진 경과

- '14. 10.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15. 5.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일선 청 배포하였고 '21년에는 17개 언어로 확대하여 배포
- '16. 연중.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실시
- '19. 4.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피해자는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하는 등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 '19. 4. 살인 사건 등 강력 사건 영장전담검사 또는 변사 전담검사가 피해자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중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 사건'으로 지정·관리 및 즉시 피해자지원실로 인계하여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마련
- '21. 9.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중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건'으로 선정하여 사건초기부터 종합적으로 지원
-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일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치료비, 생계비 및 학자금 등 경제적지원 및 법률지원 등 종합 지원 확대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학교폭력 피해자·보호자 대상으로 경제·심리·법률 지원 제공
- 범죄피해자별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유형별 지원사례를 검토하여 범죄피해자별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 방안 지속 추진
- '21. 10. 국민을 위한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 T/F 발족 및 '22. 3. 매뉴얼 발간
 - 맞춤형 피해자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담당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 청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 '22.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및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및 인력 배치
 - 범죄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 '22. 연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10개 검찰청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및 30개 검찰청 장애인 보조기구 배치, 일선 청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 '22. 연중. 2회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범죄피해자실무과정 집합교육 실시
 - 일선청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피해자 특성 및 유형별 피해자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관 및 절차, 실무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별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유형별 지원사례를 검토하여 범죄피해자별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 방안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 지원에 특화된 센터 육성(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과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통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배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별 지원체계 마련
- 학교폭력 피해자·보호자 대상으로 경제·심리·법률 지원 제공
- '23. 연중. 8개 지검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및 30개 검찰청 장애인 보조기구 배치 예정
- '23. 연중. 2회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범죄피해자실무과정 집합교육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피해자 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체계 마련 지속 추진
- '23.~'24. 학교폭력 피해자·보호자 대상으로 경제·심리·법률 지원 제공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476 02-2110-3824 02-2110-3823
담당자	6급 강성민 6급 원지영 7급 이도엽	이메일	powerksm@korea.kr vvvup1@korea.kr -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금액 실질화

2) 추진 내용

- 법무부에서는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단계적 상향 검토
 -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 정도 검토
 - 국내 유사 제도와의 비교, 해외 제도 검토
- 대검찰청에서는 경제적 지원금 현실화 등 추진
 - 합리적 산정기준에 기반한 경제적 지원금 현실화
 - 경제적 지원 집행체계 개선

3) 추진 경과

- 구조금 상한액 지속적 상향

구조금	~ '08	'09	'10	'15	'22. 현재
유족구조금	10,000,000원	30,000,000원	45,516,900원	78,818,080원	162,276,576원
장해구조금	6,000,000원	30,000,000원	45,516,900원	78,818,080원	135,230,480원
중상해구조금		('10. 제도 신설)	45,516,900원	78,818,080원	135,230,480원

- 구조금 지급액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 48개월, '14.12.)
- 긴급 구조금 지급액수 확대(예상 구조금 금액의 1/3 → 1/2, '17. 2.)
- 친족간 범죄에도 구조금 감액 없이 전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15. 4.)
- 치료비 및 장례비 지급 상향
 - '16. 치료비 연 1,200만 원 총 3,000만 원 한도 실비지급을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실비지급으로 상향

- '19. 장례비 지급 상한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
- '19. 어린이집, 유치원생에 대한 학자금 신설(학기당 30만 원)
- '21. 8. 치료비, 구조금 등 신청 시 생계비, 학자금 등을 추가 지원 적극 검토 지시
- '21. 8.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사건 시 긴급한 생계유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생계비에 대하여 적극 지원 검토 지시
- '21. 8. 화상 치료 또는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등 장기 또는 다액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 특별결의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적극 검토 지시
- '21. 11. 수사 및 공판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지원 누락사례 점검 및 적극 지원 검토 지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 지침」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상한 증액 및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 신설('22. 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22. 3.)
 - 「범죄피해자지원 체크리스트」를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비치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지원 제도를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함
- 구조금 지원 액수 실질화 지속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평균노임단가를 지속 반영해 연도별로 구조금 상한액 상향 지속
- '22.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및 원스톱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 범죄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내역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자 맞춤형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의 실질화 도모
- '22. 5. 변사사건 접수단계에서 피해자지원 의뢰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피해자지원 의뢰가 가능하도록 변사사건 접수 화면에 '범죄피해자 상담·지원 의뢰서' 탭 신설

- 직권개시절차를 통한 장례비,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도모
- '21. 10. 국민을 위한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 T/F 발족 및 '22. 3. 매뉴얼 발간
 - 실질적인 피해자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범죄피해자 담당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 청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 '22. 연중.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업무 노하우 공유 등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일선 검찰청 지도 점검 실시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생계비, 장례비 등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 간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 의견 수렴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유사 제도 연구('22.~'24.)
 - 사회보장적 급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조금 확대 방안 마련
-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상한 상향 방안 지속 검토('22.~'24.)
- 구조금 지원 액수 실질화 지속('22.~'24.)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평균노임단가를 지속 반영해 연도별로 구조금 상한액 상향 지속
- 경제적 지원 실질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지속 추진('24.~'25.)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645
담당자	4급 반준성 7급 하태균 7급 이도엽	이메일	greenray@spo.go.kr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제도 간 역할 분담과 관계설정을 통해 경제적 지원 대상 피해유형과 피해자유형에 대한 재검토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 상호보증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 피해자에게만 지급되던 구조금을 적법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에게까지 구조금을 확대 지급

3) 추진 경과

- 구조금 지급대상 지속 확대
 - 장애구조 대상 확대 1~6급 ⇒ 1~10급('10. 5.)
 - 가해자 불명·무자력 요건 삭제('10. 5.)
 - 장애구조금 지급범위 확대(장애 10등급 → 14등급, '17.12.)
- 구조금 지급 대상을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0. 11.)
 - * 외국인에 대한 구조금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을 요하나,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급
- '20. 11. 국회 제출된 정부안에 대한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 의원실 설명('21. 8.)
- 치료비, 구조금 등 신청시 생계비, 학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21. 8.)
-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사건에서도 긴급한 생계유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생계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21. 8.)

- 화상 치료 또는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등 장기 또는 다액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적극 검토('21. 8.)
- 구조금 지급 대상을 과실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1. 11.)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7. 국회 제출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설명
- '22. 8.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시 예산 확보 방안 민주당 보좌진 설명
- '22.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지시
- '22. 8.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의율하고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철저 지시
- '22. 9.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및 불법동영상, 사진 삭제 차단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지원 지시
- '22. 연중.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업무 노하우 공유 등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일선 검찰청 지도 점검 실시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경제적 지원 대상 적용 대상 확대 및 4주 미만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한도 상향 검토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지속 추진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645
담당자	4급 반준성 7급 하태균	이메일	greenray@spo.go.kr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속도 개선
-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심의기구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 지원 속도 개선
- 범죄피해자와의 밀접한 접촉을 강화하고, 향후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인력재배치 등 경제적 지원 심의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 '19.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침 개정을 통해 위원장 직권개시, 긴급결정 권한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집행체계 마련
- '20. 이전비의 경우 계약서 정도만으로도 우선 선집행하고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등 신속한 이전비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 생계비, 장례비, 긴급 치료비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근무일 내 지급이 원칙이나, 가급적 신청 익일까지 위원장 직권으로 신속한 지급을 실시하도록 일선 청 지시('21. 8.)
- 심의회에서 지급 결정이 났으나, 청별 배정된 기금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청별 소요 예정 예산을 취합하여 법무부 인권구조과에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금 예산 재배정 신청하여 일선 청 배정하는 등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21. 10.)

- 범죄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부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 직접지원 제고방안 시행('21. 11.)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2. 11.)
 -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서 양식에 '본인정보 제공동의' 항목 신설하여 신청인이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인 동의 시 검찰청 피해자 지원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제출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 본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본인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와 피해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위한 근거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 '22.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및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및 인력 배치
 - 범죄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부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질 높은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 '22. 연중.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및 원스톱범죄피해자 솔루션 구축 위한 5개 지검 피해자지원과 신설 및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증원 추진
- '22. 연중. 경제적 지원의 서비스 속도 개선, 법적 근거 강화, 심의기구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지속
 - 긴급 지원 제도 적극 시행 및 심의회 일원화 방안 검토 지속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주거지원 신청서 양식 개정을 통한 신청 절차 간소화
 - 주거지원 신청서 양식에 '본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항목 추가하여 신청인 편의 도모
- '23. 연중.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속도 개선 방안 마련 지속 추진

- '23. 연중.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및 원스톱범죄피해자 솔루션 구축을 위한 5개 지검 피해자지원과 신설 및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증원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5.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심의기구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등 서비스 속도 개선 방안 마련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645
담당자	4급 반준성 7급 하태균	이메일	greenray@spo.go.kr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형사조정 진행 방식의 다양화,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강화 등으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2) 추진 내용

-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일선 청으로부터 매 분기별 형사조정 사례를 제출받아 형사조정 진행 과정 및 조정 참여 당사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우수사례 선정
- 형사조정 진행 방식의 다양화
 - 형사조정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조정, 휴일조정, 출장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 진행
 -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대면접촉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지역별, 청별 실정에 따른 비대면조정(전화조정, 화상조정) 병행 실시
-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 2015년부터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검 권역별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제한으로 온라인 교육 진행
 - 형사조정위원별 전문 분과 제도를 도입(의료, 노동, 소년 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사건을 배당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 도모

3) 추진 경과

- '14. 1.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 대책 지시
- '15. 1. 형사조정 공증 연계 및 그 수수료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시
- '16. 2.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지속 추진 요청

- '16. 9.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 '17. 3. 형사조정 조기 활용 확대 방안 시행
- '17. 3. 형사조정 시 피해자 보호방안 업무처리 지시
- '17. 12.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책자 제작·배포
- '18. 10.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증보판 제작·배포
- '19. 11. 고검 권역별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 '20. 3. KICS 피해자지원시스템 전산화 구축(형사조정위원 관련 정보 등록, 조정수당 자동 계산 등)
- '20. 6. KICS 형사조정절차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 구현
- '20. 7. 형사조정절차에서의 2차 피해 예방 방안 마련 시행
- '20. 8. 형사조정위원 대상 양성평등 온라인 교육 수강 의무화 지시
- '20. 11.~12. 형사조정위원 온라인 기초 교육 실시
- '21. 6.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 '21. 8. 2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 '21. 10.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개선방안 시달
- '21. 10.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 '21. 10.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개정(대검 예규 제1245호)
- '21. 11. 형사조정 우수 청 선정
- '21. 11.~12. 형사조정위원 온라인 심화교육 실시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2. 21년 4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 '22. 5. 형사조정 가이드북 발간(2019-2021년 대검 선정 우수사례 중심)
- '22. 5.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 '22. 5.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배포 및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

- '22. 8. 2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 '22. 9. KICS 형사조정 사건유형 기능개선
- '22. 연중. 분기별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 '22. 9. 형사조정 우수사례 전파 및 형사조정 적극 의뢰 요청
- '22. 11.~12. 형사조정위원 온라인 기초교육 실시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형사조정 우수사례 및 우수 청 선정
- '23. 연중.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 '23. 연중. 형사조정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화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7.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강화 등으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3
담당자	6급 이경석	이메일	prose96@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형사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

2) 추진 내용

- 형사조정 대상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개정
 - 관련 규정(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소사건 및 재산범죄 이외 일반 형사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

3) 추진 경과

- '09. 10.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정
- '10. 4.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형사조정 근거 규정 신설
- '10. 8.~'17. 6.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5회 개정
- '21. 10.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개선 방안 시달
 - 형사조정 적합사건 유형 선정, 비대면 조정(전화조정, 화상조정) 등 조정방법 다양화
- '21. 10.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개정(대검 예규 제1245호)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5.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배포 및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
- '22. 9. KICS 형사조정 사건유형 기능개선
- '22. 9. 형사조정 우수사례 전파 및 형사조정 적극 의뢰 요청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2. 연중. 형사조정 대상 범죄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추진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7. 형사조정 대상 범죄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속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3
담당자	6급 이경석	이메일	prose96@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배상명령제도의 저조한 활용도 개선 및 활성화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의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및 방식 개선
 - 범죄피해자 조사 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고지하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와 기소 후 검찰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때 사용되는 서식에 포함된 배상명령 안내 내용을 수정하여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검찰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시 배상명령 안내서와 신청양식을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3) 추진 경과

- '10.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제도 안내 규정 신설
- '19. 배상명령 대상사건 구공판시 자동 통지되도록 KICS 기능 개선
- '20. 배상명령 관련 피해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KICS 기능 개선(검찰사건번호 추가, 검찰 콜센터 대표번호 추가 등)
- '21. 1. 배상명령 안내 문자에 기존 검찰사건번호에 더해 법원사건번호 추가하여 자동 발송 되도록 기능 개선 의뢰
- '21. 6. 법원행정처 형사기획담당관실 협조요청에 따른 배상명령 안내 문자 발송 내용 수정
 - 각급 법원 주소 정보 및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 추가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재산범죄 이외 다른 범죄에 배상명령이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실증적 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추진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등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지속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형사재판 화해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2) 추진 내용

-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홍보 및 안내 강화
 -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서와 안내서 개선하여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를 피해자에게 쉽게 안내하는 방안 검토
 - 사건처분 시부터 공판절차 내 피해자에게 해당 제도를 실효적으로 통지하는 방안 검토

3) 추진 경과

- '06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이하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사건처분 시부터 공판절차 내 피해자에게 해당 제도를 실효적으로 통지하는 방안 검토 중
- '22. 연중.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서와 안내서 개선을 통한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를 피해자에게 쉽게 안내하는 방안 검토 중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형사재판 상 화해제도를 피해자에게 쉽게 안내하는 방안 협의 모색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형사절차상 보장된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 받을 권리 실질화
- 가명조서 작성 후 형사사법포털에서의 신원정보 관리 체계화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2) 추진 내용

-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 사건 진행 상황 관련 정보에 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적시성 개선
- 가명조서 작성 후 관리체계 개선
 - 피해자가 가명조서 작성 후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검토하여 관리절차와 기준 마련

3) 추진 경과

- '14. 3.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 '1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된 이후, 범죄유형별(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로 특화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서' 제공, 법률용어 순화 및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안내서 내용 개선, 리플렛, E-Book 안내서(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정보 제공권 강화 방안 지속 추진
- '19. 11. KICS 상 가명조서 피해자 연락처 입력 관련 기능개선 추진
- '20. 5.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철저 지시
- '20. 1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홈페이지' 마련하고, '21. 1.~12. 키워드 검색광고 등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상시 정보 접근 가능 체계 구축

- '21. 1.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피해자에게 통지
- '21. 1. 배상명령 안내 문자에 기존 검찰사건번호에 더해 법원사건번호 추가하여 자동 발송 되도록 기능 개선 의뢰
- '21. 4.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문자로 통지할 수 있는 기능 신설
- '21. 6. 법원행정처 형사기획담당관실 협조요청에 따른 배상명령 안내 문자 발송 내용 수정
 - 각급 법원 주소 정보 및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 추가
- '21. 10.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 '21. 11.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침 별지 양식인 “성폭력사건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각 지침 상 규정된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3. 피해자 의사확인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피해자 연락불능 사유로 의사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1번 항목을 ‘연락불능’으로 선택한 경우 2~8번 항목도 ‘연락불능’으로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
- '22. 3. 피해자지원시스템 피해자 의사확인 및 지원의뢰 관리 화면 개선
- '22. 5. 피해자에게 사건결정 결과 통지 시 형사조정외의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 내용 추가하여 통지하는 등 안내문구 개선
- '22. 7. 피해자에게 사건결정결과 문자통지 자동 발송 기능 개선하는 등 피해자 알권리 강화
- '22. 12. 검찰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검찰의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QR 코드 및 Q&A 포함)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공 방안 지속 추진
- '23.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사법포털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검토 추진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보장된 정보제공 받을 권리 강화 방안 지속 추진
- '24.~'27.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사법포털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검토 지속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823
담당자	7급 이도엽	이메일	-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02-3480-2303
담당자	7급 노태종 6급 이경석	이메일	ntj6839@spo.go.kr prose96@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피고인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피해자의 열람·복사권 강화

2) 추진 내용

- 수사·공판절차 내 피해자의 열람·복사권을 규정한 관련 지침 및 현황 점검하여 피해자의 열람·복사권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 '21. 1.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피해자에게 통지
- '21. 4.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문자로 통지할 수 있는 기능 신설
- '21. 11.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침 별지 양식인 “성폭력사건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각 지침 상 규정된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5. 피해자에게 사건결정 결과 통지 시 형사조정인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 내용 추가하여 통지하는 등 안내문구 개선
- '22. 7. 피해자에게 사건결정결과 문자통지가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하는 등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알권리 강화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피해자의 소송 계속 중인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권 확대 방안 지속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법원과 피해자의 소송 계속 중인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권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력 보장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2) 추진 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 관리·감독체계 개선
 - 일부 불성실한 국선변호사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신설)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지역별 대상 범죄 발생건수 및 비전담 변호사 수 등을 고려하여 전담변호사 배치,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 전문화교육 개편(기초·심화과정 구분)으로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제고 노력
- 피해자 변호사 공판절차상 권한 강화
 -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사법포털 상 사건조회 및 형사절차 단계별 통지 방안 추진

3) 추진 경과

- ('10. 12.)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구 명칭)' 제도 도입
- ('12. 3.)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13. 6.)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지원대상 확대
- ('13. 7.)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시행

- ('14. 9.)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로 지원대상 확대
- ('16. 1.) 국선전담변호사 확대(15명 → 17명)
- ('18. 5.)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시행
- ('19. 3.) 국선전담변호사 확대(17명 → 21명)
- ('20. 4.) 국선전담변호사 확대(21명 → 23명)
- ('20. 1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 ('21. 3.)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시행으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정 시행
- ('21. 6.)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21. 10.) 수사·재판절차별 필수업무 지정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시행
- ('21.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실시
 -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기관 연구용역 의뢰, 실시
- ('21.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강화, 실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2.) 기존 보수기준 중 일부 보완,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시행
- ('22. 4. ~ 9.) 3회에 걸쳐 국선전담변호사 총 12명 확대, 배치
 - * 서울중앙, 서울서부, 남양주, 부천, 수원, 성남, 평택, 김천, 부산서부, 광주, 순천, 군산
- ('22. 5.)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 국선변호사 평가제 및 선정기간 직권연장 규정 신설 등
- ('22. 6. ~ 9.)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편 연구용역 실시
- ('22. 8. ~ 9.)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실시
 - * 기본·심화과정 구분 1, 2회차 완료(총 414명 수강), 10월 중 3회차 실시 예정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1.)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실시, 결과 분석
- ('23. 1.~3.)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23. 1.~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총 8명), 신규 채용 및 배치
- ('23. 상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검토
- ('23. 하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 ('23. 하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권역별 간담회 실시
- ('23. 연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검토(살인 등 강력범죄)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속적 확대 추진
- ('24.~'25.)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실적, 보수청구·지급, 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전화번호	02-2110-3651
담당자	4급 김건수, 7급 김성일	이 메 일	f16370@korea.kr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4
담당자	8급 임미라	이 메 일	mira5875@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과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을 통하여 진술조력인의 사기 진작과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장애인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2) 추진 내용

- 진술조력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 법률개정 등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진술조력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설문조사 실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근 진술조력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 추진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기관 다양화 및 처우개선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해바라기센터 외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경찰청 운영 희망센터 등 배치 기관 다양화
 - 아동학대사건 신고가 급증하여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인 진술조력인의 활용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상근 진술조력인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적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안 마련
-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 및 진술조력을 위한 수사 환경 구축
 - 수사기관 내 아동 및 장애인에 적합한 조사환경 마련(영상녹화, 속기록 작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아동 및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진술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수사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3) 추진 경과

- ('1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아동학대범죄까지 확대
- '14. 10.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16. 1.)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소에 진술조력인 상근 배치
- ('16. 7.~10.) 진술조력인 12명 신규 양성
 -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기본교육(45시간), 기본 실무교육(50시간), 심층 실무교육(45시간)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양성과정 진행
- '16.-'17. 법무연수원 '여성·아동·발달장애인 수사전문가'과정 개설
- ('17. 1.)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11명, 해바라기센터)
- ('17. 2.)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술조력인 홍보 영상 송출(유튜브, 서울메트로 등)
- '17. 경력 3년 이상 검사 대상「여성아동발달장애인 수사전문가과정」 개설
- ('18. 1.)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12명, 해바라기센터)
- ('18. 1.) 진술조력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진술조력인 참여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 경찰 및 검찰에 송부
- ('18. 7.~10.) 진술조력인 13명 신규 양성
- ('18. 10.) 상근 진술조력인 진술조력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실시
- ('18. 11.) 진술조력인 제도 홍보 브로슈어 배포(아동학대 예방의 날)
- ('19. 4.)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12명→15명, 해바라기센터)
- ('19.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대상 진술조력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19. 6.)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법원 대상 진술조력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19. 11.) 상근 진술조력인의 진술조력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및 소진방지를 위한 워크숍 실시
- ('20. 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적극 활용 등 협조 안내 실시(경찰청,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전국 해바라기센터)
 - * 죄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피해자 국선변호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파장 및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결정
- ('20. 3.) 상근 진술조력인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형) 신규 1명 배치
- ('20. 7.~12.)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
- ('20.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개정)으로 진술조력인 선정 대상이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2020. 10. 1. 시행)
 -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 아동학대범죄사건의(기존) 피해자 + (신규) 참고인, 증인
- ('20. 10.) 진술조력인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원입법) 통과, 정부 이송
- ('20. 12.)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 검찰, 경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총 607개소, 총 42,480부 배포
- ('21. 3.)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근무환경 점검, 의견 수렴 실시 후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신규 배치
- ('21. 4.) 상근 진술조력인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1. 8.) 아동학대 피해자를 진술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조사·심리 관련 피해아동보호의 공백 방지
- ('21. 7.~12.) 진술조력인 15명 신규 양성(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비중 확대)
- ('21. 9.) 상근 진술조력인 처우개선을 위해 실적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안 마련

- ('21. 10.)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등 진술조사 가이드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 수사매뉴얼 제작 T/F 발족
- ('21. 10.~11.)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1·2차) 실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1.)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으로 지원대상 확대
* 검찰, 경찰, 해바라기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총374개소, 총 12,000부 배포
- ('22. 1.)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관련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22. 2.) 상근 진술조력인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1인 신규 배치
- ('22. 5.) 상근 진술조력인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1인 신규 배치
- ('22. 6.) 비상근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실시(경상도 권역)
- ('22. 7.~12.)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진행 중)
- ('22. 9.) 상근 진술조력인 서울지방경찰청 희망센터 1인 신규 배치
- ('22. 11.)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1·2차) 실시
- ('22. 연중) 상근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회의 매월 실시
- ('22. 연중) 홍보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아동·장애인 피해자 및 수사기관 등의 진술조력인에 대한 인식 향상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급격히 증가
* '22. 9. 기준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2,851건, 장애인 대상 범죄 지원 신실

〈진술조력인 지원실적('22. 9. 기준)〉

구분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대상	합계
지원건수	1,245	1,581	25	2,851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진술조력인 평가 관련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술조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23. 연중) 진술조력인 상근 배치 확대

-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배치 장소를 마련하여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 ('23. 연중)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 다양한 지역 기반 및 경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인력의 질적·양적 향상 추진
- ('23. 연중) 진술조력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사례관리회의 실시
- ('23. 연중) 진술조력인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23. 연중) 진술조력인 업무매뉴얼 정비
- ('23. 연중)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진술조사 교육 신설 등 적합한 수사 환경 조성 지속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상근 진술조력 인력 증원 및 재배치를 통해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술 조력 강화
- ('23.~'24.)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지속 추진
- ('23.~'24.)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진술 조사에 적합한 수사 환경 조성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전화번호	02-2110-3140
담당자	5급 김희중 7급 김채린	이 메 일	heejong4@korea.kr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 메 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을 위한 인력풀의 양적·질적 향상 및 전국적인 지원체계 구축

2) 추진 내용

- 정부부처, 민간단체,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 검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 피해자 지원을 실질화 할 수 있도록 조력대상 및 범위 확대, 인력 및 예산 확보,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 (‘10. 12.)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구 명칭)’ 제도 도입
- (‘12. 3.)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13. 6.)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지원대상 확대
- (‘13. 7.)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시행
- (‘14. 9.)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로 지원대상 확대
- (‘16. 1.) 국선전담변호사 확대(15명 → 17명)
- (‘19. 3.) 국선전담변호사 확대(17명 → 21명)
- (‘20. 4.) 국선전담변호사 확대(21명 → 23명)

- ('20. 1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 ('21. 3.)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시행으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정 시행
- ('21. 6.)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21.10.) 수사·재판절차별 필수업무 지정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시행
- ('21.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실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기관 연구용역 의뢰, 실시
- ('21.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강화, 실시

〈진술조력인〉

- ('1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아동학대범죄까지 확대
- ('16. 1.)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소에 진술조력인 상근 배치
- ('17. 1.)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11명, 해바라기센터)
- ('18. 1.)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12명, 해바라기센터)
- ('19. 4.)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12명→15명, 해바라기센터)
- ('20. 3.) 상근 진술조력인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형) 신규 1명 배치
- ('20.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개정)으로 진술조력인 선정 대상이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2020. 10. 1. 시행)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 아동학대범죄사건의(기존) 피해자 + (신규) 참고인, 증인

- ('20. 10.) 진술조력인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원입법) 통과, 정부 이송
- ('20. 12.)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 검찰, 경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총 607개소, 총 42,480부 배포
- ('21. 3.)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근무환경 점검, 의견 수렴 실시 후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신규 배치
- ('21. 4.) 상근 진술조력인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1. 8.) 아동학대 피해자를 진술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조사·심리 관련 피해아동보호의 공백 방지
- ('21. 7.~12.) 진술조력인 15명 신규 양성(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비중 확대)
- ('21. 9.) 상근 진술조력인 처우개선을 위해 실적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안 마련
- ('21. 10.)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등 진술조사 가이드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 수사매뉴얼 제작 T/F 발족
- ('21. 10.~11.)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1·2차) 실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피해자 국선변호사>

- ('22. 2.) 기존 보수기준 중 일부 보완,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시행
- ('22. 4.~9.) 3회에 걸쳐 국선전담변호사 총 12명 확대, 배치
 - * 서울중앙, 서울서부, 남양주, 부천, 수원, 성남, 평택, 김천, 부산서부, 광주, 순천, 군산
- ('22. 5.)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 국선변호사 평가제 및 선정기간 직권연장 규정 신설 등
- ('22. 6.~9.)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편 연구용역 실시
- ('22. 8.~9.)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실시
 - * 기본·심화과정 구분 1, 2회차 완료(총 414명 수강), 10월 중 3회차 실시 예정

〈진술조력인〉

- ('22. 1.)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으로 지원대상 확대
* 검찰, 경찰, 해바라기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총374개소, 총 12,000부 배포
- ('22. 1.)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관련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22. 2.) 상근 진술조력인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1인 신규 배치
- ('22. 5.) 상근 진술조력인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1인 신규 배치
- ('22. 6.) 비상근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실시(경상도 권역)
- ('22. 7.~12.)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진행 중)
- ('22. 9.) 상근 진술조력인 서울지방경찰청 희망센터 1인 신규 배치
- ('22. 11.)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1·2차) 실시
- ('22. 연중) 상근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회의 매월 실시
- ('22. 연중) 홍보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아동·장애인 피해자 및 수사기관 등의 진술조력인에 대한 인식 향상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급격히 증가
* '22. 9. 기준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2,851건, 장애인 대상 범죄 지원 신설

〈진술조력인 지원실적('22. 9. 기준)〉

구분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대상	합계
지원건수	1,245	1,581	25	2,851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피해자 국선변호사〉

- ('23. 1.)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실시, 결과 분석
- ('23. 1.~3.)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23. 1.~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총 8명), 신규 채용 및 배치
- ('23. 상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검토
- ('23. 하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 ('23. 하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권역별 간담회 실시
- ('23. 연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검토(살인 등 강력범죄)

<진술조력인>

- ('23. 연중) 진술조력인 평가 관련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술조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23. 연중) 진술조력인 상근 배치 확대
 -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배치 장소를 마련하여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 ('23. 연중)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 다양한 지역 기반 및 경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인력의 질적·양적 향상 추진
- ('23. 연중) 진술조력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사례관리회의 실시
- ('23. 연중) 진술조력인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23. 연중) 진술조력인 업무매뉴얼 정비
- ('23. 연중)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진술조사 교육 신설 등 적합한 수사 환경 조성 지속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인력 증원 및 재배치를 통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술 조력 강화
- ('24.~'25.)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전화번호	02-2110-3852
담당자	5급 김희종	이메일	heejong4@korea.kr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4
담당자	8급 임미라 7급 노태종	이메일	mira5875@spo.go.kr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공판절차 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필요

2) 추진 내용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보석의 심문 절차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규정은 없어 일정한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나 보석 심문 절차 등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할 필요

3) 추진 경과

- '15년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는 방식의 의견진술을 도입
- 성폭력사건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 이외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변론종결 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견진술(피해자 진정서 등 추가 제출)
- '20. 5. 피해자의 사생활보장,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보장,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한국피해자학회·대검찰청 춘계학술회의 개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방안 지속 추진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공판절차 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강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피해자 의견진술권 강화 방안 마련 지속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의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영향평가 활성화 및 활용방안 마련

2) 추진 내용

- 검찰의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하여, 범죄피해가 형사절차 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범죄피해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 '17. 2.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 시행
 -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One-Stop 피해자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양형자료로 활용하는 등 피해자 피해상황 및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시행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및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및 인력 배치
 - ‘원스톱 범죄피해자지원팀 신설’ 하여 수사·공판에 필요한 피해자 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한 범죄피해양형자료조사보고서 작성 및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카드를 이용한 맞춤형 지원 방안 강화, 범죄피해자지원 네트워크 운용 전담 인력 배치
- '22. 연중. 5개지검 피해자지원과 신설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증원 추진 중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각급 청 ‘원스톱 범죄피해자지원팀’ 지속 추진, 5개지검 피해자지원과 신설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증원 추진을 통한 범죄피해자 영향평가 활성화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형사절차 전반에서 범죄피해자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및 제도화 방안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2) 추진 내용

- 수사기관·언론기관·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를 위한 사례중심의 구체적 가이드 라인이나 업무매뉴얼 마련

3) 추진 경과

- 제3차 기본계획의 이행 기간 중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
- 언론기관을 위해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아동학대사건보도 권고기준’ 등이 마련
- '21. 11. 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을 위한 합동 토론회 참석, 성범죄 보도 등 관련 기준 논의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1. 10. 국민을 위한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 T/F 발족 및 '22. 3. 피해자지원 매뉴얼 발간
 -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 2차 피해 사례 유형화, 2차 피해 방지 등 업무 매뉴얼 작성하여 일선 청 배포
- '22. 연중.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범죄피해자실무과정 집합교육 2회 실시
 - 일선청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정보보호 및 신변보호, 2차 피해 예방

- '22. 연중. 언론 및 대중 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방지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지속 추진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언론 및 대중 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방지 등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지속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언론 및 대중 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방지 등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1) 추진 목적**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

2) 추진 내용

-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도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대상 범죄 및 처벌 대상인 행위 주체 확대 검토
- 범죄에 따라 상이한 처벌 규정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및 개선

3) 추진 경과

- 해당 없음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국회 계류 중인 관련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논의 지원
 - * 누구든지 피해자의 성명과 가정폭력범죄 관련 사건명을 출판하거나 방송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1건(임호선, 11265호)
-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의무 도입 검토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가정폭력처벌법」 상 언론보도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 문헌 및 해외입법례 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법 개정 입법 논의 지원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후속조치 논의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전화번호	02-2110-3564
담당자	검사 이정아	이메일	jessica@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신변보호조치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공백 방지

2) 추진 내용

-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신변보호조치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

3) 추진 경과

- '12. 8. 범죄피해자 증인 신변보호 강화 특별지시
- '12. 11. 피해자 증인 신변보호 활성화 방안 통보
- '15. 7. 범죄피해자 법정동행 지원 관련 업무철저 지시
- '16. 1.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활성화 지시
- '16. 2.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대상자 적극 발굴 지시
- '16. 8. 이전비 지원대상 적극 발굴·지원 지시
- '19. 11.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19. 12.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신형 교체 지급
- '20. 5.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철저
- '20. 5.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 '20. 6.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적극 안내 협조 요청
- '20. 10. 일선 청 피해자지원 담당관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제한으로 온라인 교육 진행

- '21. 8. 일선 청에 피해자 직접 지원 제고 방안 시행
- '21. 10.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 관련 업무 지침 개정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 운영 지침도 함께 개정
- '21. 연중. 일선 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지도점검 실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일선 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지도점검 실시
- '22. 4. 피해자지원 매뉴얼 책자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지시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신변보호조치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27.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신변보호조치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3
담당자	6급 이경석	이메일	prose96@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신변보호 관련 인력 확보 및 경찰 등과의 업무협조로 형사절차 내 신변보호조치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2) 추진 내용

- 형사절차 내 신변보호조치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
 -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교폭력 관련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확보
 - 일선 청에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및 피해자지원 담당수사관 등 전담인력 배치, 신원관리카드 검사 지정 운영
 - 연 2회 피해자지원 담당수사관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교육 실시

3) 추진 경과

- '12. 8. 범죄피해자 증인 신변보호 강화 특별지시
- '12. 11. 피해자 증인 신변보호 활성화 방안 통보
- '14. 3.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 '15. 7. 범죄피해자 법정동행 지원 관련 업무철저 지시
- '16. 1.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활성화 지시
- '16. 2.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대상자 적극 발굴 지시
- '16. 3.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정
- '16. 8. 이전비 지원대상 적극 발굴·지원 지시
- '19. 11.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19. 12.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스마트위치) 신형 교체 지급
- '20. 5.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철저
- '20. 5.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 '20. 6.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적극 안내 협조 요청
- '20. 10. 일선 청 피해자지원 담당관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제한으로 온라인 교육 진행
- '21. 8. 일선 청에 피해자 직접 지원 제고 방안 시행
- '21. 10.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 관련 업무 지침 개정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 운영 지침도 함께 개정
- '21. 10. 일선 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지도점검 실시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일선 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지도점검 실시
- '22.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자지원팀' 신설 등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및 인력 배치
- '원스톱 범죄피해자지원팀' 신설 하여 수사·공판에 필요한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인력 확보
- '22. 연중. 5개지검 피해자지원과 신설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증원 추진 중
- '22. 4. 피해자지원 매뉴얼 책자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지시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5개 지검 피해자지원과 신설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증원 지속 추진
- '23. 연중. 일선 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지도점검 추진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7.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지속 추진

- '24.~'27. 일선 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지도점검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3
담당자	6급 이경석	이메일	prose96@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추진 내용

- 검찰 인권보호관의 2차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3) 추진 경과

- '08.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하면서 2차 피해 방지 규정 신설
- '17. 3. 형사조정 시 피해자 보호 방안 업무처리 지시
 -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회부 및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 방지
- '18. 10.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신변보호 방안 시범 실시
- '19~'20. 연중. 성범죄에 대한 형사조정 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정 등 2차 피해 방지 적극 실시
- '20. 4. 디지털성범죄의 불법동영상 관련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배포
- '20. 5.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철저 지시
 - 가명조서 작성된 경우 고소사건에서도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금지 등
- '20. 6. 디지털성범죄의 불법동영상 유포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
- '20. 7. 형사조정절차에서의 2차 피해 예방 방안 마련
 - 형사조정 회부 시 피해자 동의, 형사조정 진행시 피해자 보호조치 등
- '20. 11. 2020년 여성범죄 2차 피해 방지 온라인 교육 실시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 '21. 11. 수사, 공판 등 검찰사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연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일선 청 지도점검 실시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있어서 가명조서 작성 실태 점검 및 형사조정 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정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
- '21. 6. 대검 예규인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하여, 인권보호관이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개선에 필요한 실태·통계 조사, 인권교육, 인권보호수사구칙 위배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수사구칙」 제70조에 따른 인권보호에 관련된 사항 점검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1. 10. 국민을 위한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 T/F 발족 및 '22. 3. 피해자지원 매뉴얼 발간
 -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 2차 피해 사례 유형화, 2차 피해 방지 등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 청 배포
- '22. 연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일선 청 지도점검 실시
- '22. 연중. 2회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범죄피해자실무과정 집합교육 실시
 - 일선청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대상, 신변보호 및 2차 피해방지, 법정동행 및 법정모니터링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방안 지속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 방안 지속 추진 및 관련 모니터링 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수사·재판단계에서 역고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2) 추진 내용

- 수사·재판단계에서 역고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 역고소 사건에 대해 원사건을 담당한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 '18년 법무부·대검찰청은「성폭력 수사매뉴얼」개정을 통해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함
- '21. 7.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발족하여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역고소 남용 방지 강화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연구 중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역고소 남용으로 인한 2차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대한 일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역고소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역고소 남용 방지 방안 강화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역고소 남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2차 피해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 실시
-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2) 추진 내용

-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3) 추진 경과

- 검찰의 경제적지원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상시)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대검 D-NET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의 불법동영상 유포차단·삭제 지원 강화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2. 9.말 기준 2,690건, 1억 2천만원의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실시
- 스마일센터를 통해 '22. 9.말 기준 4,287건의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법률홈닥터를 통해 '22. 12.말 기준 76건의 무료 법률상담 실시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2. 12.말 기준 602건의 법률상담, 221건의 소송구조 제공
- '22. 9.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및 불법동영상, 사진 삭제 차단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22. 12. 범죄피해자지원 Q&A 및 우수사례집 발간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실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쟁점 위주로 질의 및 답변, 우수사례 등 설명을 통해 피해자지원담당자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신속하고 충실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도모
- '22. 연중. 디지털성범죄 수사 관련 충실한 사법통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전문 심리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민사 법률지원 등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보다 신속하면서도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등 검토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검찰 경제적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476 02-2110-3824 02-2110-3823
담당자	6급 강성민 6급 원지영 7급 이도엽	이메일	powerksm@korea.kr vvvup1@korea.kr -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3
담당자	7급 노태종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참여 부처의 실무 담당자간 범죄피해자 정책관련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정례 협의체 마련 및 협조 체계 강화
- 각 부처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의견대립 시 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권한 실질화 방안 검토
-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3) 추진 경과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 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참여부처 실무 담당자간 정책 및 정보공유를 통해 5년 단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발간
 - 법무부는 2년 단위로 각 정부 부처의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지역별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담은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제공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범죄피해자실무위원회 개최

- 교육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교류하고 정책을 공유하여 「'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 '22. 12.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개정판을 발간하여 정부부처의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지역별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제공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법무부 및 각 중앙부처간 협의를 통해 부처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의견대립 시 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권한 실질화 방안 검토
- 교육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교류하고 정책을 공유하여 「2024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법무부 및 각 중앙부처간 협의를 통해 부처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의견대립 시 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권한 실질화 방안 검토 지속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476 02-2110-3823
담당자	6급 강성민 7급 이도엽	이메일	powerksm@korea.kr -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범죄피해자 지원 협력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굴

2) 추진 내용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피해자보호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자 대상 교육 관련 자료 공유,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문성 제고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발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적 협력 방안 검토

3) 추진 경과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무부 소관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등에 의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 재정적인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 시행
- 검찰청에서는 관내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죄피해자지원 담당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담당자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 방안 논의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 차관급·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에 대해 검토

- '22. 12.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개정판을 발간 및 읍·면·동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함으로써 지역별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제공 강화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4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에 대해 검토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보호실무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한 조율
- 연도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476 02-2110-3823
담당자	6급 강성민 7급 이도엽	이메일	powerksm@korea.kr -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와 민간피해자지원기관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방안 검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창구 마련 검토
- 민간 피해자지원기관 발전방안 연구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민간 피해자지원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 연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결과 및 차년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민간 피해자지원기관에 대한 미시적·거시적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서 민간 기구의 다양한 지원 역할 모델 개발
- 민간 피해자 지원 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행정적·인력적 지원 확대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

3) 추진 경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금 전입비율을 상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 확보
※ 전입비율은 4%('11년~'12년) → 5%('13년~'14년) → 6%('15년~'20년)
- 스마일센터 관련 지속적인 매뉴얼 개발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발전 방안 모색
- 매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및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개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스마일센터 이용자에 대한 성향 분석, 대상자별 사례관리, 상담자료 DB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연구용역 실시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 '21년에는 「스마일센터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용역 실시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정상 가동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 의견 반영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및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개최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발전 방안 모색
- '23.~'2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 의견 반영
- '23.~'2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 전문성 훈련 지속 실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476 02-2110-3746 02-2110-3823
담당자	6급 강성민 6급 홍송이 7급 이도엽	이메일	powerksm@korea.kr hufs82@korea.kr -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관련 주요 행정통계의 생산, 산출 및 공표
- 범죄피해자 관련 지속적 연구 실시

2) 추진 내용

- 피해자의 실태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주기적 실태조사 추진을 통한 범죄피해자 관련 주요 행정통계의 생산, 산출 및 공표
- 범죄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지원 현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지속적 실시

3) 추진 경과

- '08년 대검찰청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를 설치하면서 이후 각 청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통계를 통계시스템,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각 청에서는 대검 지침인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및 법무부 지침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에 의거 매달 초 각 청별 구조금 실적 및 경제적 지원 실적을 검찰통계시스템 및 피해자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청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19년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연구」, '20년 「법률구조제도 일원화를 위한 입법 모델 연구」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1. 하반기부터 일선 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통계 관리 실태 점검 및 통계분석을 통한 집행과정 개선사항 발굴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대검 지침 및 법무부 지침에 따라 각 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통계 관리 독려 등 관리 철저
- '22. 연중. 일선 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통계관리 실태 점검 및 통계분석을 통한 집행과정 개선사항 발굴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일선 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통계관리 실태 점검 및 통계분석을 통한 집행과정 개선사항 발굴
- '23. 연중. 피해자지원시스템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구체화 및 산출방법 연구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일선 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통계관리 실태 점검 및 통계 분석을 통한 집행과정 개선사항 발굴 지속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642
담당자	7급 이도엽	이메일	
소관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5
담당자	7급 노태중	이메일	ntj6839@spo.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관리 체계 개선
- 기본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2) 추진 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질적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실효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 기본계획 상 각 기관별 정책 진행 상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및 보호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차년도 계획 수립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3년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자료조사('22. 10.~11.)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주요 정책 심의('22. 12.)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한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관리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870 02-2110-3476
담당자	5급 박종범 6급 강성민	이메일	99eyefocus@korea.kr powerksm@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 보호지원 민간 종사자 양성·육성체계 마련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제공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종사자의 역량 강화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 보호지원 민간 종사자 양성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유형별·피해회복 단계별 전문화된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선
-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도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무·검찰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실시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주기적 교육을 시행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 검토
-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현실적 보조금 지급 및 행정 지원 등 간접적 지원 방안 검토

3) 추진 경과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함
- 스마일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트라우마 인식 향상 등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매년 검사, 검찰수사관 등 법무·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진술조력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
- 스마일센터 연합 사례회의 실시
 - '22. 11.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14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합사례회의 실시
- 검사 및 검찰수사관 대상 법무연수원 교육 실시
 - 신입검사 통합교육 등 검사 및 검찰수사관 대상 교육과정 5개 과정(7회)에서 223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교정직 공무원 대상 법무연수원 교육 실시
 - 신규 교정직 7·9급 등 교정직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5개 과정(6회)에서 261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도 및 공감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스마일센터 전문역량 개발교육 실시
- 법무·검찰 공무원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피해자 이해도 제고 교육 실시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4.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23.~'24. 스마일센터 전문역량 교육 실시
- '23.~'2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이해도 증진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한 관련 공무원 대상 법무연수원 교육 지속 실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476 02-2110-3823
담당자	6급 강성민 7급 이도엽	이메일	powerksm@korea.kr -
소관부서	법무연수원 기획과	전화번호	043-531-1574
담당자	7급 정영인	이메일	inthem95@korea.kr

목차



교육부

① 그간 추진 성과

②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 과제 현황

- 총 과제수: 2개
- '23년 시행계획 반영 과제 수: ('22년) 1개 → ('23년) 1개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계	1	1	-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	-
5-1-①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	-
5-2. 정책기반 강화	1	1	-
5-2-③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	-

3) 2023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최근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언어폭력·신체폭력·집단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및 지원체계의 점검 필요

2)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간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치유·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피해학생전담지원 기관 확대*
* 피해학생전담지원 기관 : ('20) 139개소 → ('21) 158개소 → ('22) 303개소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인력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심리 이해 및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실시
 - 전문상담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실시('22.7.~10.) 2,833명
 - * 연수내용 :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등 피해학생 상담개입을 포함한 심리치료 및 심리검사 분야 50개 운영

3)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학생 범죄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범죄피해자 대상 민간 지원기관 지원 및 전문상담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 지속 추진

4 정책과제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5-2-3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 도모

2) 추진 내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정책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3) 추진 경과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간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치유·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피해학생전담 기관 확대('05.~현재)
 - 피해학생전담지원 기관 현황 : ('20) 139개소 → ('21) 158개소 → ('22) 303개소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실시('22. 1.~12. 시·도교육청별 자율운영)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의 상처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확대**
 - ※ 연도별 현황 : ('20) 139개소 → ('21) 158개소 → ('22) 303개소
-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종사자의 역량 강화
 - 전문상담인력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22.7.~10, 2,833명)** 및 **위기사안별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위기사안9종 : 학교부적응 4종(또래관계, 교사-학생 관계 개선, 비폭력대화, 게임과몰입), 학교폭력 2종(피해, 가해), 정서문제 3종(자해, 트라우마, 우울·불안)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학생 범죄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학생 범죄피해자 대상 민간 지원기관 소속 전문상담인력 직무 역량 강화 추진(연중)
 -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생 범죄피해자 대상 민간 지원기관 소속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실시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종사자의 역량 강화 연수 지속 실시
-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전화번호	044-203-6973
담당자	교육연구원 김현아	이 메 일	khyunah@korea.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① 그간 추진 성과

- 국가책임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하고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즉각분리제도 도입을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실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인프라 확대 등
 - (조사공공화) 민간수행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27명('22.9.7기준)을 배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법률 자문 등 지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지원
 - 장기결석, 예방접종·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아동안전 확인,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확대,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 , 방문형 가족회복프로그램 도입('22~)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보호시설) 확충

구분	'19년	'20년	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예산기준)	68	71	81
학대피해아동쉼터(예산기준)	73	76	105
아동학대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아동학대 건수	30,045	30,905	37,605

②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 과제 현황

- 총 과제수 : 4개
- '23년 시행계획 반영 과제 수 : 3개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계	3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2		
1-2-①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		
1-2-③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5-1-①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5-2. 정책기반 강화	1		
5-2-③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3 2023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여러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응체계 대대적 정비 추진
 - *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20.10~)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 추진('23.9~)
- 다만, 지속적인 중대 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우려 증대와 보다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대한 요구 증가
 - 아동학대 대응체계 지속 보완뿐만 아니라, 신고 전 위기 아동 발굴 및 개입, 회복지원 등 아동보호 안전망 강화 요구 증대
- 또한 아동학대 발생 신고 및 판단건수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아동 훈육 등의 명목으로 부모(학대 행위자의 82.1%)에 의한 가정 내 아동학대 지속 발생
 - * 아동학대 판단건수(단위 : 만) : ('18) 2.5 → ('19) 3.0 → ('20) 3.1 → ('21) 3.7

2)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학대예방)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선제 지원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 *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44종 정보 활용, 예 : 어린이집 장기결석, 건강검진·예방접종 미 실시 등)를 활용해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리아동을 선정,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 점검
 - (실적) 총 43만명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해 20,944명 복지서비스 연계, 351명 아동학대로 신고('18. 3.~'22. 10.)
 - (만3세 아동 전수조사) '22년 만 3세('18년생)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24,756명) 진행 중('22. 10.~'22. 12.)
- (학대조사 공공화)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아동학대 국가책임 강화
 - (인력확충)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27명 배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법률자문 등 지원

- (대응인력 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 신규자 기본교육, 기 배치자 보수교육 및 대응인력 합동교육(전담공무원-경찰-아보전 종사자) 실시(연중)
- (인프라 확대) 지역별 접근성, 학대피해아동 특성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지속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83개소(전년 대비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10개소(전년대비 +12개소) 운영 중('22.10월 기준)
 - 장애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호·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6개소)
- (회복지원)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학대를 방지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지원 강화
 -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기능 회복 등 심층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17개) 내 심리지원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고난도 심리상담 지원
 - 시·도 단위 광역 전담의료기관('22.8개소)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치료 업무 수행
- (인식개선) 긍정양육 문화 및 체벌금지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3편 제작, '긍정양육 129원칙' 지속 확산
 - * 공중파 TV광고 450회, 인터넷 유튜브 등 600만회 이상, 긍정양육 리플릿 배포(40만부, 8월~), 민간협업 제품출시(우유 880만팩, 아동음료 10만팩 등), 카드뉴스(3편 제작), 카카오톡 스티콘(3만개) 배포, 긍정양육 BI 제작(11월)

3)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위기아동 조기발굴) 지자체 중심 위기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내실화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모형 고도화 및 방문 조사 체크리스트 개선
 - 위기 아동 발굴 시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 확인 강화
- (피해아동 회복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정책 지원 본격화 및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내실화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광역) 확대('22.8개소 → '23.17개소)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의 전문적인 심리서비스 제공 강화
- (인프라강화)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계기 대응인력, 보호 인프라 지속 확충 등 아동학대 예산 투자 확대
 - 연령, 성별,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년) 81개 → ('22년) 95개 수준 → ('25년) 120개 목표
 - 학대피해아동쉼터 : ('21년) 105개 → ('22년) 141개 수준 → ('25년) 240개 목표
 -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범피기금) 예산 복지부 일반회계로 통합('22년)
- (재학대 방지 대책 마련) 학대피해 아동 고위험 가정 점검 및 사례관리 강화
 - 원가정 보호 아동 대상 '방문형 가족 회복방지 프로그램* 지속적 확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 '22년 신규 시범사업 실시(978가정 선정, '22.10월 기준), '23년 1,200가정으로 확대
- (인식개선)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④ 정책과제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1-2-①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①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 설치하여 지역 심리치료 연계, 보호·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을 설치하여 시·도 전반의 전문적인 심리진단·치료 등으로 지역별 심리치료 역량 강화
 - 고난도·고위험 사례에 대한 심리치료를 직접 수행하고, 관할 내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인력에 대한 교육자문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 전담의료기관 등과 연계 등으로 치료 효과 극대화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광역)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의심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치료 등 직접적인 아동보호 역할 강화

3) 추진 경과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 예산 확보('20년)
 - (인건비) 51명, 497백만원, (사업비) 17개소, 85백만원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 종사자 채용기준 마련 및 운영계획 안내('21.6)
-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 현장 모니터링('21.9~11월)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 신규 추진('22.4~)
 - *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 8개 시도, 8개 기관
-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 신설 1주년 주요성과·우수사례 공유회('22.7.22)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지원팀 인건비 증액 확보
 - ('22년) 1인당 46.5백만원 → ('23년) 1인당 47.2백만원(1.7%증)
- 학대피해아동 치료, 상담 등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 신규 추진 ('22년~, 8개소)
 - * 8개 시도(서울, 인천, 울산,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남)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시·도별 거점 아보전 내 심리지원팀 운영 체계화, 연계협업 및 기능 강화
 - 시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연계협업(계속)
 - 시도 내 아보전 심리치료 인력 교육·자문 뿐 아니라, 학대피해아동 외 시설·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제공 등 거점 기능 강화('23~)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7개소로 확대('22.8개→'23.17개소)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전국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성과 평가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 강화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 운영(계속)
- ('23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확대(8개소→17개소)

⑤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전화번호	044-202-3381,3382
담당자	사무관 나은정, 한지훈	이메일	yinjing1214@korea.kr all4u79@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라 '23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므로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을 통해 사례관리 내실화
-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쉼터를 적정 규모까지 확충하여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 강화
 - 의사 표현이 어려운 학대피해 영유아는 전문교육을 받는 가정에서 보호지원

3) 추진 경과

- ('06) 아동보호전문기관 42개소 운영
- ('08)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 ('15)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고보조사업 전환(50개소) 및 5개소 추가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 국고보조사업 개시(36개소) 및 10개소 신규 설치
- ('16) △아동보호전문기관 55개소 운영 및 4개소 추가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 46개소 운영 및 7개소 추가 설치
- ('18)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2개소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 설치
- ('19)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
 -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8개소 신규 설치

- ('20)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2개소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설치
- ('21)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8개소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4개소 설치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아동보호전문기관 14개소 확충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36개소 확충 추진(~연중)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 전문기관 전환을 위한 단계적 준비 진행 중
 - *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서비스를 위한 심리평가 척도 개발 등
- 원가정 보호 아동 대상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예산 확대('23년, 1200가정)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2023년 추진계획(안) 마련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사업 확대 실시('22 1,000가정 → '23 1,200가정)
 - 학대피해가정(1,200가정)을 방문하여 감정 대처방법, 양육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 회복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36개소 확충 추진(정부안 기준)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아보전 적정 규모 확충* 추진하여 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 강화
 - * ('20) 71개소 → ('21) 81개소 → ('22) 95개소 ⇒ ('25) 120개소 목표

⑤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전화번호	044-202-3382,3387
담당자	사무관 한지훈 주무관 이수정	이메일	all4u79@korea.kr leesuj72@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을 통해 학대 피해노인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 강화
- 노인학대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3) 추진 경과

- ('04) 노인학대예방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17개소)
- ('0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1개소)
- ('07) 노인학대 상담사업 통계DB개발,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운영
- ('1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16개소)
- ('14)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발표
- ('16) 제13차 사회장관회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발표
- ('1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법적 근거 마련,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인권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 ('22) 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중앙1, 지역3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9개*운영 중
* 지방비 100%운영 1개소 포함(전라남도)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추가 확충(경기, 성별분리)
-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하여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전국민 인식 제고 활동
* 보건복지부·경찰청 연계('22.6.15~7.15, 1달간)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확충
- 가정 및 시설 조사시 조사기법과 행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상담 기법등을 추가하여 종사자 역량 강화
- 경제적 학대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준비 및 시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6.)
- 학대신고의무자 18개 직군에 대한 교육 지속 실시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2~'26 노인학대의 발견·보호·예방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452 044-202-3453
담당자	정수아 사무관 이현지 주무관	이메일	suajung@korea.kr gracehj07@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 도모

2) 추진 내용

-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정책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3) 추진 경과

- '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무원·민간인) 의무교육기관 63,666개 기관 교육 완료
- '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무원·민간인) 의무교육기관 64,898개 기관 교육 완료
- '17.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
- '19. 1.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9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법정 의무화
- '19. 연중.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자료 신규 제작·배포 및 온라인 교육 기관과의 협업(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나라배움터 등)을 통한 교육 과정 운영
- '20.9~11. '20.10월 조사 공공화 출범에 따른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교육 시행(이론, 실습, 파견)
- '21. 연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신규자 입문 교육 강화(80시간→160시간 / 이론·실습·파견) 및 보수교육(40시간) 신설 등 전문성 강화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5개 직군 약 31만개 기관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콘텐츠 8종 현행화
 - 아동과 밀접히 접촉하는 6개 주요 직군*별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초중고등학교 종사자, 보육교사, 의료기관종사자, 사업부 및 법률분야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종사자
 - ※ '21년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87.2% 완료('22.9월말 조사실적)
-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신규자, 기배치자 교육 및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과정 내실화 및 대응인력별 교육과정 확대 추진
 -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인재원 등으로 분산된 교육과정을 '22년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 '22년에는 전문강사 양성과정, 관리자과정, 슈퍼바이저 보수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6개 과정 신설('21년, 10개 과정 1,591명 → '22년, 16개 과정 4,130명)
 -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확대('21년, 온라인교육 608명 → '22년, 합숙교육 735명)

③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직종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가 제작(6개 직종은 제작 완료) 및 교육자료 등록 기관 확대로 교육 수용성과 접근성 향상 도모
- '23.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와의 합동교육 과정(2박3일) 확대('22년, 2개 시도 → '23년, 17개 시도) 및 아보전의 사례관리 전문기관 전환을 위한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확대

④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전화번호	044-202-3446
담당자	서기관 박문수	이메일	ejlovems@korea.kr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① 그간 추진 성과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서비스 및 체불청산 지원('22.1~'22.12월)
 - * 법률지원 43,078건(61,757명), 대지급금 지원 5,369억원(107,444명)
-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 진로지도, 직업훈련상담 안내 등 고용서비스 지원
 - * '22.12월 기준 신규(상용) 구직건수 4,684,080건, 취업건수 1,630,371명, 취업률 34.8%
- 업무상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서비스 지원
 - * '22.12월 기준 산재 보험급여 지급 66,865억 원(391천 명), '22.12월 기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69.2%

②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 과제 현황

- 총 과제수 : 3개
- '23년 시행계획 반영 과제수 : ('22년) 1개 → ('23년) 1개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계	1	1	-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1-2-②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	○	-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5-1-①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	-
5-2. 정책기반 강화			
5-2-③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	-

3 2023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불합리·불공정 사례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선 목소리 확대

2) 2022년 주요 추진실적

가. 퇴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법률구조 지원
 - * '22년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법률지원 43,078건(61,757명)
- 체불청산 지원 현황

(단위 : 명, 억 원)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응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응자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20년 1~12월	14,006	1,100	96,171	4,697	5,344	192	-	-
2021년 1~12월	10,368	794	96,554	4,672	4,178	213	2,842	197
2022년 1~12월	5,291	366	102,153	5,003	2,678	143	3,080	189

* 체불근로자 생계비 응자: '21.6.9.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시행

- 실직자(전직희망자 포함)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상담·안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워크넷 취업지원 현황 〉

(단위 : 명, 건, %)

구분	신규 구인 인원	신규 구직 건수	취업 건수	취업률
2020년 1~12월	1,846,176	4,519,218	1,337,309	29.6
2021년 1~12월	2,829,040	5,138,533	1,794,859	34.9
2022년 1~12월	3,317,302	4,684,080	1,630,371	34.8

*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적은 산출되지 않아 워크넷 취업 실적으로 대체

나. 재직 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 노동자(노동조합) 권리구제 지원
 - * '22.12월 기준, 15,832건 구제신청 접수, 구제명령 1,681건, 화해·취하 종결 8,633건
- 업무상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보상)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수('22.12월): 391천 명, 지급액: 66,865억 원
 - (재활지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도모
 -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22.12월): 69.2%(요양종결자 115,345명 중 79,781명 직업 복귀)

3)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가. 임금체불 등 범죄피해 예방

- (사업장 감독)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 대상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 실시
 - * ('20년) 15,797개소 → ('21년) 22,252개소 → ('22.12월 기준) 27,180개소
 - ↳ '20, '21년은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감독 실시
- (상담을 통한 예방)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상담 및 인터넷 상담)와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령 안내 및 고용분야 상담 실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노동관계법 범죄피해 신고·상담 강화
 - * '22.12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실적 922,766건

나. 피해회복 지원

-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청산 지원 실시
- 실직자(전직 희망자 포함)에 대해 전국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 상담·안내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워크넷(Work-net) 및 직업훈련정보망(HRD-net) 등 온라인으로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정보 제공

- 업무상 재해자의 치료과정을 위한 지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대상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인정 및 휴업급여 지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직업복귀 도모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피해복구 지원

4 정책과제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1-1-2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1) 과제 개요

1) 추진목적

- 범죄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방안 마련

2) 추진내용

- 노동법 관련 피해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상담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으로 피해회복 지원 지속 추진
-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근로자의 형사절차 참여 및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근로자의 치료과정을 위한 휴가 보장방안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 범죄피해자 맞춤형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상담 등

3) 추진경과

- '15. 7. 사업장이 도산되지 않더라도 종국판결 등이 있으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시행('15. 7. 1.)
 - * 일반체당금 제도(파산 등 사유 발생시 대상)는 '98.7.1. 시행
- '19. 7.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인상(400만원 → 최대 1,000만원, '19. 7월)하여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
- '19.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 시행
- '20. 1.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최대 1,800만원 → 최대 2,100만원)
- '21. 2.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1년 → 3년)
- '21. 6. 체당금 수급계좌 제도 시행(압류방지 체당금 전용계좌)

- '21.10. 체당금 용어 변경,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및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 체당금 →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21.1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조치 마련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노동법 관련 범죄피해 신고·상담 등을 통한 피해 근로자 참여 보장 및 사업장 감독을 통한 범죄피해 예방 지속 추진
 - 노동관계법령 안내, 취업상담 및 노동법 관련 범죄피해 신고·상담 실시
 - * '22.12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실적 922,766건
 -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청원제도 운영 등 피해 근로자의 참여 확대
 - * '22.12월말 기준, 27,180개소를 점검하여 66,421건 법위반 적발, 시정 및 사법조치 등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후 피해 회복 지원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청산 지원 실시
 - * '22.12월말 기준, 무료법률구조지원 총 43,078건, 61,757명 지원
 - ** '22.12월말 기준, 대지급금 총 107,444명, 5,369억원 지원
 - 임금체불 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지급금(구, 체당금) 수급계좌 제도 시행(압류방지 대지급금 전용계좌) 및 지급 절차 간소화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 * '22.12월 기준, 15,832건 구제신청 접수, 구제명령 1,681건, 화해·취하 종결 8,633건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휴가 조치 등 피해 회복 방안 강화
 - 기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요청시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의무에 대한 법상 제재조치가 없었으나,
 - '21.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과태료) 마련을 통한 실효성 담보
- 업무상 재해자의 치료 과정을 위한 요양기간 인정 등 지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대상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인정 및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지급

* 산재 요양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6월 미만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22.12.	계	49,220	25,768	8,951	5,123	2,018	2,014	1,832	3,514
	입원	8,144	2,880	1,006	918	431	571	798	1,540
	통원	41,076	22,888	7,945	4,205	1,587	1,443	1,034	1,974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신속·공정한 보상 및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복귀 도모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수('22.12월): 391천 명, 지급액: 66,865억 원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22.12월): 69.2%(요양종결자 115,345명 중 79,781명 직업 복귀)

- 산재 피해 근로자 재취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21.2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실직자(전직희망자 포함)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상담·안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취업지원 현황〉

(단위 : 명, 건, %)

구분	신규 구인 인원	신규 구직 건수	취업 건수	취업률
2020년 1~12월	1,846,176	4,519,218	1,337,309	29.6
2021년 1~12월	2,829,040	5,138,533	1,794,859	34.9
2022년 1~12월	3,317,302	4,684,080	1,630,371	34.8

*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적은 산출되지 않아 워크넷 취업 실적으로 대체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연중 상담 및 사업장 감독으로 노동법 관련 범죄피해 예방 지속 추진
 -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상담 및 인터넷 상담)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노동관계법령 안내 및 고용분야 상담 실시

-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신용등급 하락 등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적 근로감독 강화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지원하여 사후 피해회복 지원 지속 추진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청산 지원 실시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등 피해 복구 지원
- 업무상 재해자의 치료과정을 위한 지원 지속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대상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인정 및 휴업급여 지속 지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직업복귀 도모
- 실직자(전직희망자 포함)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상담·안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4 향후 연도별 추진일정

- '22~'26. 상담 및 근로감독을 통한 노동법 관련 범죄피해 예방 추진
 -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적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노동관계법 준수 확산
- '23~'26. 체불임금 및 부당해고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후 피해회복 지원 지속 추진
- '23~'26. 업무상 재해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실직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직업복귀 도모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528
담당자	사무관 최충운	이메일	choi1974@korea.kr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① 기간 추진 성과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지역 특화상담소 운영을 통한 삭제지원 등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8~)
 - * 지원실적('18.4.~'22.12.) : 총 728,639건(삭제지원666,144건 포함)
 -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지정·운영('21~)
 - * ('21) 7개 → ('22) 10개 → ('23) 14개 지역으로 확대(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지원기관 활용)
- 성폭력 피해자의 맞춤형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권익 실현
 - 피해자 지원시설 인력충원, 휴일 수당 확보 등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만족도 : ('21년) 91.5점 → ('22년) 91.8점
 - 성폭력 피해자의 맞춤형 피해 회복을 지원
 - * 성폭력 상담소 상담 실적 : ('22.6월) 139,273건 / * 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실적 : ('22.6월) 76,276건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전문적인 상담·지원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인력 확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 무료 민사·가사 소송대리 등 치유·회복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
 -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 ('21년) 2,941백만원 → ('22년) 3,195백만원 (증 254백만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특례 및 온라인 그루밍 처벌

- 근거 신설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3.23. 개정, '21.9.24. 시행)
- 「성폭력방지법」개정('21.1월)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先삭제 지원 등 선제적 대응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등 선제적 삭제지원 총 95,401건('21~'22)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17개소 운영
 - * 지원사항('22.6월 기준) : 661명, 10,474건(상담, 아웃리치, 치료·회복, 자립·자활, 사후관리 지원 등)

2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 과제 현황

- 총 과제수 : 10개
- 시행계획 반영 과제 수 : ('22년) 8개 → ('23년) 8개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계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1-2-①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	○	
1-2-②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	○	
1-2-③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	○	
3-2.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3-2-③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4-1-②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	○	
4-1-③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	
4-3.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4-3-③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	
5-1.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5-1-①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5-2. 정책기반 강화			
5-2-①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	
5-2-③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	

③ 2023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디지털 기술 발달, 비대면 일상화 등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및 이에 대한 범부처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체계 강화 요구
- 서산 동문동 살인사건('22.10월),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18.10월) 등으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실효성 제고 등 정책 개선 요구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22.9월), 창원 살인사건('20.5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21.3월) 등으로 스토킹 방지 요구

2)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수사기관 협업 강화
 - *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22.11월)
 - 24시간 상담·수사·의료·법률 통합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 및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22.7월~)
 - *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
 -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도입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병행 개정
 - 가정폭력 피해자 독립적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확충 및 남성, 장애인 등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확대('22년~)

*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추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등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제고 및 지역특화상담소 확대('22 10개→'23 14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엘(L) 성착취 사건' 피해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긴급대응팀 구성 및 경찰청 핫라인 연계 신속 삭제 지원(삭제지원 건수(9~12월) : 4,223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 및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

* 방통위(주관), 여가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협의체 구성·운영('22.9월~)

- 피해촬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과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 지원 시스템 연계 추진('22.9월~)

●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22.9월 국회 상임위 상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스토킹 피해여부 평가도구 개발·보급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 추진('23년~)

* '23년 수사기관, 대학생 폭력예방 교육과정에 스토킹 방지교육 포함 추진

●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연구* 추진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17개소)'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 지원실적 : ('21년) 727명, 12,520건 → ('22년) 862명, 21,371건

- 성범죄자 알림e 공개대상자 사진 및 실거주지 현행화 추진으로 정확성 제고(연2회)

* △ 촬영기한 1년 이상 경과 또는 품질 저하 사진 재촬영 요청(여가부→경찰)

△ 신규·전입세대고지 실거주지 확인 요청(여가부→법무부,경찰) 및 지도 위치표시 전수 점검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자치경찰제 시행('21.7월) 계기, 지자체 중심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집결지 등 현장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 실시('22.1월~)

* 여성가족부(지침 마련·개선) ↔ 시도(점검총괄·지원) ↔ 시군구(점검계획 수립·실시)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6개소)을 통한 상담·구조·보호·자활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체계 구축·운영

* '22.12월 말 기준 전국 성매매 집결지 14개소 잔존(경찰청 자료) : 집결지 수 : ^{17년} 23개 → ^{18년} 22개 → ^{19년} 18개 → ^{20년} 15개 → ^{22년} 14개

● **인신매매 방지 추진기반 구축**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1.1.)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22.12월),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안) 마련 및 피해자 식별지표(안)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앙, 지자체,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및 지원시설 간 효율적 협력체계 마련

3)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확대(10개소 → 14개소)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등 스토킹피해자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신규 설치 운영('23년 예정)
-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시행 지원 등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를 중심으로, 5대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인신매매방지법('23.1월) 시행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간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인신매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등 홍보 강화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및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 홍보 강화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4 정책과제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1-1-1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
-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도모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심리치료가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연계체계 강화
 - 범죄피해자 심리치료가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발굴, 연계체계 구축 및 사후모니터링 체계 마련

3) 추진 경과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 장기 심리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 지속 확대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실적 〉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지원 인원 수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6월
성폭력 피해자 대상	2,503	2,170	2,752	2,544	2,029	855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4,709	4,126	4,326	4,117	3,950	2,248

〈의료비 운영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연도별 지원 인원 수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6월
성폭력 피해자 대상	11,720	12,415	12,725	12,076	12,816	6,516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10,624	11,521	11,706	9,374	8,996	5,097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안정적 지원(연중)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계속)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⑤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96 02-2100-6397
담당자	5급 서진희 6급 최은희	이메일	march0325@korea.kr bill1223@korea.kr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25 02-2100-6426
담당자	5급 김옥희 6급 박윤희	이메일	hoongh@korea.kr grodas1@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교육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2) 추진 내용

- 성폭력 피해자(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3) 추진 경과

- '1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의 원활한 자립 사전 준비를 위해 퇴소자립 지원금 지급 가능 기간 확대
 - * (중전) 퇴소 시 지원 → (변경) 퇴소 시점 전후 2개월 내에 지원
- '18.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자 확대
 - * ('17)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이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만 19세에 도달한 자 → ('18)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 '19.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20.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인천) 신규 개소
- '21.12.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장애) 공동생활시설(광주) 신규 개소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6개소) 운영 지원(연중)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계속)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6개소) 운영 지원(연중)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지속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 지속 추진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지원 지속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96 02-2100-6397
담당자	5급 서진희 6급 최은희	이메일	march0325@korea.kr bill1223@korea.kr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25 02-2100-6426
담당자	5급 김옥희 6급 박윤희	이메일	hoongh@korea.kr grodas1@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하여 피해자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2) 추진 내용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및 시설 확충
 - 상담소 및 시설을 성인, 장애인, 미성년자(특별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대상별 특화된 상담 및 보호 서비스 제공 지원
 - ※ 상담소 : 일반 81개·장애 23개, 보호시설 : 일반 20개·장애 10개·특별지원 4개
- 가정폭력·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남성보호시설 신규 확충
- 성폭력피해자 의료·간병·법률·돌봄 비용 지원 내실화
-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 등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제공

3) 추진 경과

- '95. 성폭력특례법 시행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 지원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 '04.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 ~'14.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신규 설치(34개) 및 3개 센터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0월)

- '18.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개소 신규 설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18.3월)
- '19. 전국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인력(1인) 추가배치 등 지원 강화
해바라기센터 신규 간호인력 충원(총 39명)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개소 추가 설치 추진
- '20.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인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제주) 신규 개소
- '21.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장애) 공동생활시설(광주) 신규 개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운영('18.4월~)
- 지역 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 운영('21~)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의료지원, 시설보호 및 숙식 제공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연중)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 및 치유를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연중)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234,560건 지원

('22.1 1.~'22.12.31, 건수)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연계
234,560	19,259	213,602	1,525	174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운영('21년 7개 → '22년 10개)을 통한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강화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여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피해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건강지원 지속 추진

- 가정폭력·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남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지역특화상담소 확대·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22) 10개소 → ('23) 14개소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성폭력 피해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설치·운영으로 피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계속)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등으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의료·법률·보호 등 서비스 제공(계속)
-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남성보호시설 운영 지원('23~)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연중)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96 02-2100-6397
담당자	5급 서진희 6급 최은희	이메일	march0325@korea.kr bill1223@korea.kr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25 02-2100-6426
담당자	5급 김옥희 6급 박윤호	이메일	hoongh@korea.kr grodas1@korea.kr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162
담당자	6급 강동근	이메일	ehdrms73@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2) 추진 내용

- 일반인 대상 안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시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3) 추진 경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운용

*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 발간('22.4월, 199개 언론사 배포)을 통해 언론 및 대중매체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조치 마련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인식 개선 시 관련 사안 포함하는 등 홍보 추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인식 개선 시 관련 사안 포함하는 등 홍보 추진(계속)

5) 담당자

소관부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05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이메일	hicha89@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원정보가 공개된 피해자 포함)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

2) 추진 내용

- (법률구조)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소송 지원
- (법률상담) 화해·조정, 법률구조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지원금액)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임료는 40만원 기준

3) 추진 경과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계속)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연중)

(단위 : 건)

연도별	연도별 지원 인원 수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6월
성폭력 피해자 대상	885	1,134	1,477	1,585	1,435	1,013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7,966	7,366	8,633	8,929	9,491	4,047
스토킹 피해자 대상	-	-	-	-	82	206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	-	-	-	2	7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등의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법률 구조, 상담)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등의 피해자 법률구조 및 상담 지원(계속)

⑤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96 02-2100-6397
담당자	5급 서진희 6급 최은희	이메일	march0325@korea.kr bill1223@korea.kr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25 02-2100-6426
담당자	5급 김옥희 6급 박윤희	이메일	hoongh@korea.kr grodas1@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차단·삭제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3) 추진 경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內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운영(‘18.4월~)
 -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경찰청·방통위·방심위 등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11월)
 -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분기별 운영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20.4월)
-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한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요청범위 확대(‘20년)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 신설 및 경찰의 위장수사 도입으로 감시체계 강화(‘21.3월)
-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삭제 근거 마련 및 선제적 모니터링 시행(‘21.6년)
- 언론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제작(‘21년)

- 지역 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 운영('21~)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22.1.1.~'22.12.31, 건수)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연계
234,560	19,259	213,602	1,525	174

-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제공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등에 대한 선제적 삭제지원 48,719건('22.1~12월)

-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을 위한 정규직 인력 단계적 확충 ('21년 17명 → '22년 21명)

-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21년 7개 → '22년 10개)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연구용역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지원 및 정규직 인력 단계적 확충('22년 21명 → '23년 24명)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22년 10개소 → '23년 14개소)를 통한 지역 내 피해자 지원 강화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연중)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선제적 삭제 지원(연중)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유관부처 협업 체계 강화
 - * 관계기관(방통위,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협의체 구성·운영('22.9~)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162
담당자	강동근 사무관	이메일	ehdrms73@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피해 실태의 추이,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범죄 피해 관련 통계 수집 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필요

2) 추진 내용

- 범죄 유형별* 세부 통계 및 성별 분리통계 수집 및 공표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범죄

3) 추진 경과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월)
 - 여성폭력통계 구축(제13조), 여성폭력실태조사(제12조) 근거 마련
- 여성폭력통계 지표 체계(안)* 마련('20년)
 - *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관련하여 수집·산출이 필요한 여성폭력 통계 범위·목록 분류
- 여성폭력실태조사 사전연구 실시('20년)
 -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본조사에 앞서 조사표 개발, 예비 조사 등 실시
- 여성폭력실태조사 사전연구 실시('21년)
 - 여성폭력통계 지표 체계(안) 및 운용지침 마련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개별법에서 누락된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 * 전반적인 여성폭력 피해 경험, 스토킹·데이트 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피해 경험 등 실태조사 (만19세 이상 여성, 표본 7천명)
- 여성폭력통계 지표 체계(안)에 따른 통계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여성폭력유형별* 범죄 통계 산출 가능하도록 범죄통계원표 개정 요청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아내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등

-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발간(12월)

* 여성폭력 지표별 통계정보, 최근 지표 동향을 다양한 도표·그래프, 알기 쉬운 설명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여성폭력통계 통계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계속)
-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발간에 따른 외부 요청사항 대응 등 후속조치

* 여성폭력통계 보고서는 3년마다 발간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추진(계속)
 - 새로운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한 여성폭력통계 지표 개발 및 수집·산출을 위한 연구, 기관별 여성폭력 관련 통계 가공 및 수집 등
 -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발간('25년)
- 여성폭력실태조사 본조사 실시('25년)
 -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참고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306
담당자	4급 양현순	이메일	grace11@korea.kr

1) 과제 개요**1) 추진 목적**

- 시설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전반적인 지원서비스의 수준 제고
- 피해자 특성별 지원매뉴얼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및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 전문화 유도

2) 추진 내용

- 종사자의 유형별, 경력별 맞춤형 보수교육 실시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시설평가 실시(3년 주기)

3) 추진 경과

- ~'21.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
- '19.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실시(3년 주기)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
- '22년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실시(3년 주기)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연중)
-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지속 실시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지속 실시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96 / 02-2100-6397
담당자	5급 서진희 6급 최은희	이 메 일	march0325@korea.kr / bill1223@korea.kr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25 / 02-2100-6426
담당자	5급 김옥희 6급 박윤희	이 메 일	hoongh@korea.kr / grodas1@korea.kr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 처

① 그간 추진 성과

- 증인지원실 설치 및 증인지원관에 의한 피해자 증인 보호
 -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12년부터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강력범죄 등 보복가능성 있는 범죄의 피해자 증인에게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여 증인을 보호 및 지원
 - 성폭력범죄 피해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 등의 특별증인뿐만 아니라 강력사건이나 보복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등 취약증인을 위하여도 특별증인지원제도 지속 실시
 - 위 특별(취약)증인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제도 지속적 확대(2023년 1월 전국 17개 지방법원 및 7개 지원에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 특별증인지원제도 안내(8면), 일반증인지원제도 안내(10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완료(2022. 12.)
 - 증인지원관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3. 1.	비고
증인지원관 인원	80	83	82	122	

- 증인지원실 구축현황

(단위: 법원)

구분	2019	2020	2021	2023. 1.	비고
특별증인지원실	58	58	58	59	- 2022. 3.개원한 남양주지원 설치 완료 - 의성지원제외 전국법원 설치 완료
일반증인지원실	17	19	20	22	- 2022년 하반기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설치 완료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모색
 - 상반기 법관인사 직후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 법관연수 실시
 - 상반기 증인지원관 기본연수 실시 및 하반기 증인지원관 워크숍 실시
 -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을 결성하여 아동·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시 재판실무상 참고사항 연구·검토 → 『2022년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 최종보고서』, 『성범죄사건 심리 참고사항』 등 연구성과물 전국 법관 및 각급 법원에 배포 완료(2022. 9.)

2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 법원행정처 과제 현황

- 총 과제수 : 13개
- '23년 시행계획 반영 과제 수 : ('22년) 9개 → ('23년) 9개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계	9	9	
2-2.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1	1	
2-2-①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2-2-②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	
3-1.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2	2	
3-1-①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	○	
3-1-②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	
3-1-③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	-	
3-2.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2	2	
3-2-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	
3-2-③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	
3-3.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1	1	
3-3-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	○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1	1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4-1-① 형사절차 이외 분야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정책의 확대	○	○	
4-2.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1	1	
4-2-①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	○	
4-3.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1	1	
4-3-①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	○	
4-3-②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방해 방지대책 마련	-	-	
5-2. 정책기반 강화	-	-	
5-2-①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	

③ 2023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피고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치료를 증시하는 회복적 사법이 증시됨에 따라,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피해자의 절차 참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 한편 사법절차 대내외적으로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신변 보호 필요성 역시 커짐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뿐 아니라 형사절차 외에서의 피해자의 개인 정보 및 신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2)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증인신문 외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제도 홍보(연중)
 - 피해자 진술권에 대하여 증인지원관, 안내문, 리플릿 등을 통하여 안내
- 증인지원관·증인지원제도 지속 실시
 - 모든 법원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 등의 특별증인 및 강력사건이나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의

- 피해자 등 취약증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제도 지속 실시
- 특별(취약)증인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제도 지속적 확대
- 2023. 1. 기준 전국 17개 지방법원 및 7개 지원에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 2022년 하반기 청주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추가 설치 완료
- 2021년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법원의 일반증인지원 건수는 월 평균 59건
- 2022년 1~8월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법원의 일반증인지원 건수는 월 평균 40건
- 2022년 10월 증인지원제도 안내동영상 USB 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 배부
- 특별증인지원제도 안내(8면), 일반증인지원제도 안내(10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완료(2022. 12.)
-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연중)
 - 피해자변호사·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등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과 동석
 - 비공개 증인신문·차폐시설·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 법원 청사 내 화상증언실 이용하여 영상증언 실시(연중)
 - ⇒ 법원 청사에 영상재판을 위해 설치·이용 중인 화상증언실 이용하여 영상증인 신문 시행 중, 특별증인지원 서비스 제공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연중)
 - ⇒ 법원 청사로 출석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출석하여 영상증언을 실시
 - ⇒ 2022. 4. 11. 시범사업 시행
 -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16개 시·도, 전국 34개소 해바라기센터로 전면 확대 실시
 - ⇒ 2023. 1. 1.부터 16개 시·도 전국 37개소 해바라기센터로 확대 실시
 - 찾아가는 영상법정(연중)
 - ⇒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활근거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희망하는 공간에 증인지원관·영상재판담당자가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찾아가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장비 구비 완료, 증인의 위치와 환경이 노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기능 보완

-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을 결성하여 아동·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시 재판실무상 참고사항 연구·검토 → 『2022년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 최종보고서』, 『성범죄사건 심리 참고사항』 등 연구성과물 전국 법관 및 각급 법원에 배포 완료(2022. 9.)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형사재판 관련 법원내부 전산망에서 피해자 증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하여 특수 제작된 접착식 메모지 및 비실명처리 프로그램 이용하여 2차 피해 방지(연중)
- 증인지원관 연수 교육(2023. 1.) 실시 및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 연수(2023. 3.)·증인지원관 워크숍(2023. 8.) 실시 예정
- 양형심리모델의 실시를 통해 피해자의 양형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2차 회의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양형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결정함 (2022. 9.)

3)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형사절차상 배상명령 활성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양형심리모델의 확대 실시
- 개정 공탁법 시행에 따른 형사 공탁특례제도 하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
 - 공탁사실에 대한 안내, 전산공증 등을 통한 동일인 증명 발급 절차 활성화 등
- 증인지원관 및 증인지원제도의 확대 및 강화
 - 증인으로 출석하는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 취약증인지원의 활성화

- 증인 일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확대
-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강화
 - 형사절차 이외 분야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정책 확대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예방

4 정책과제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2-2-1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2) 추진 내용

-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사건에 대한 현황 확인
 -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사건에 대한 분석 및 배상명령 운영 실태 확인

3) 추진 경과

- 각급 법원 별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인용, 기각, 취하 등) 현황 및 죄명별, 금액별 건수 통계 취합 및 「사법연감」 게재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사건에 대한 분석 및 배상명령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2022년 「사법연감」 게재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제도개선 방안 지속 검토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제도개선 방안 지속 검토

5 담당자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전화번호	02-3480-1612
담당자	권용환	이메일	kyh0516@scourt.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2) 추진 내용

- 형사절차 관련 정보 통지의 적시성 확보 및 내용 표준화
 - 범죄피해자의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욕구 및 신변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상 제공해야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 구체화 및 형사공탁 관련 정보 추가

3) 추진 경과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및 피고인명 입력 시 대민용 사건 검색 이용 가능
 - ⇒ 형사피해자도 법원단계 사건조회 서비스 활용 가능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피해자 등 증인신문 시 영상증인신문 진행에 대한 의견 확인 방안 마련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영상증인신문 실시 여부 및 출석장소에 관한 증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및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 형사공탁 시 피공탁자(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의사 확인 방안 마련
 - 재판 진행 시 피해자 변호사 및 형사공탁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대 방안 지속 검토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대방안 지속 검토

⑤ 담당자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전화번호	02-3480-1612
담당자	권용환	이메일	kyh0516@scourt.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2) 추진 내용

-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열람·복사권 확대
 - 수사·공판절차 내 피해자의 열람·복사권을 규정한 관련 지침 및 현황을 점검하여 피해자의 열람·복사권 개선 방안을 마련

3) 추진 경과

- 2007년 피해자 열람·복사권 규정(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신설 이후 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정비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피해자 열람·복사신청 대민용 사건검색에서 피해자 성명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열람·복사권 개선 방안 모색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열람·복사권 개선 방안 모색

5 담당자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전화번호	02-3480-1612
담당자	권용환	이 메 일	kyh0516@scourt.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2) 추진 내용

- 피해자변호사 공판절차상 권한 강화
 -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변호사에게 증인신문 과정에 대한 의견 진술 권한 및 증인신문 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피해자 변호사 공판절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판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및 각급 법원 배포
 -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 절차 단계별 통지 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 통지, 공판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
-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통해 피해자변호사의 공판절차상 역할 및 권한을 안내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위한 이의제기의 필요성을 밝힘과 동시에, 이의제기가 재판장에게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지휘권 행사 촉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지하도록 함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 절차상 역할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 연수 실시('22.3)

- 재판 진행 시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연수 실시(23년 연중)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피해자변호사 공판절차상 지원방안 검토

⑤ 담당자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전화번호	02-3480-1974
담당자	정수경	이메일	mirrdba@scourt.go.kr

1 과제 개요**1) 추진 목적**

-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2) 추진 내용

- 정부 부처, 민간단체,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조력제도(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논의, 검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 특별한 내용 없음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특별한 내용 없음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전문가 조력제도(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논의, 검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전문가 조력제도(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 검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5 담당자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전화번호	02-3480-1974
담당자	정수경	이메일	mirrdba@scourt.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2) 추진 내용

- 민사 손해배상절차에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 *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절차에서 피해자 신원이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소송기록 중 피해자 정보 열람 제한 등의 방안 검토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공시 제한 방안 마련

3) 추진 경과

-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방안 모색
 - 관련 규정의 정비·신설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방안 모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정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공시 제한 실시(2022. 1. 1. 시행)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민사소송법」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전화번호	02-3480-1771
담당자	이덕환	이 메 일	mizzaty7@scourt.go.kr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전화번호	02-3480-1416
담당자	박소윤	이 메 일	@scourt.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2) 추진 내용

- 신변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방안 연구
- 접근금지명령 대상 확대 방안 검토
-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신변보호조치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

3) 추진 경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안 제정에 따른 관련 예규 제정
- 범죄피해자 및 증인 보호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제정
 - 긴급 응급 조치 사후 승인·종류변경청구 및 잠정조치·취소·기간연장·종류변경신청·청구사건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절차 상세화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운영 실태 파악 및 후속조치
 - 긴급 응급 조치 사후 승인·종류변경청구 및 잠정조치·취소·기간연장·종류변경신청·

- 청구사건에 관한 원활한 법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Q&A 자료집 작성 및 배포(각급 법원)
-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등의 결정 시 경찰이 이러한 결정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와 분리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체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예정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체계적인 신변보호조치 제공 방안 모색

5 담당자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전화번호	02-3480-1612
담당자	권용환	이메일	kyh0516@scourt.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예방

2) 추진 내용

- 증인신문 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방안 마련
 - 성 이력 등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는 등 법관 대상 증인신문 매뉴얼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연수 내실화
- 국민참여재판 개시 및 증인신문 시 피해자 의사 존중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국민참여재판 개시 및 증인 출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법원의 결정 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안 검토

3) 추진 경과

- '16. 1.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발간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실시 및 해당 연수에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 사항 자료 배포
 - 피해자보호방안, 피해자를 위한 재판장의 배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 성인지감수성 강화 등 연수
- 12. 1. 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규정 마련
-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 등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관을 두고 증인지원실 운영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 등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관을 두고 증인지원실 운영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 외 일반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2차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취약증인으로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
- '22. 9.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에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시 재판실무상 참고 사항에 관한 최종보고서, 책받침 제작·배포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실시 및 해당 연수에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 사항 자료 배포
 - '23 연중.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 등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관을 두고 증인지원실 운영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 외 일반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2차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취약증인으로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연중.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실시
- '24~'25 연중.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 등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관을 두고 증인지원실 운영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 외 일반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2차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취약증인으로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

5 담당자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전화번호	02-3480-1974
담당자	정수경	이메일	mirrdba@scourt.go.kr

경찰청



경찰청

① 그간 추진 성과

〈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실적〉

구분	초기상담	지원·연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피해자 임시숙소	피해 현장정리	회복적 경찰활동	범죄피해평가
'22년	8,202	24,327	29,372	6,569	144	1,203	1,690

- **(안전조치 고도화)** △ 피해자 권고문 신설 △ 지능형 CCTV 도입 △ 신형 스마트위치 도입(+6,300대) 등 안전조치 고도화로 빈틈없는 피해자 안전 확보
- **(선제적 가해자 조치)** 보복·재범 위험이 큰 사건은 '신속·집중 수사 사건'으로 지정하여 가해자 체포·구속 등 신속 조치, 추가 피해 위험의 근본적 제거 도모
※ 「선제적·예방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운영계획」 수립·시행('22. 3월~)
- **(전문인력 확보)** △ 심리학 학위자 △ 심리상담 경력자 등을 '피해자심리 전문요원'으로 채용,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배치하여 긴급단계 피해자 지원 강화
※ 현재 132명 배치·운영 중이며 △ '23년 39명 △ '24년 35명 추가 배치 예정
- **(심리적·경제적 지원연계)**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 법무부(치료비·생계비·구조금) △ 지자체(상담·보호시설) △ 민간단체(심리치료 및 경제적 지원) 지원제도 연계
※ '22년 총 24,327건 : △ 경제적 지원 14,795건 △ 심리적 지원 7,934건 △ 기타지원 1,598건
- **(주요사건 피해자지원팀 운영)**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시도경찰청 주관 '피해자 지원팀' 설치·운영, 피해자·유가족 대상 심리상담·수사절차안내 등 밀착 지원
* △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22. 1월) △ 울진·삼척 산불('22. 3월) △ 대구 법조타운 방화('22. 6월) 등

2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 과제 현황

- 총 과제수 : 18개
- '23년 시행계획 반영 과제 수 : 16개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계	16	16	-
1-1.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2	2	-
1-1-①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	○	
1-1-②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	○	
1-2.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1	1	-
1-2-③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	○	
2-1.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1	1	-
2-1-②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	
2-2.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2	2	-
2-2-①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2-2-②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	
3-1.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2	2	-
3-1-①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	○	
3-1-②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	
3-2. 법률 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1	1	-
3-2-②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	○	
3-3.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1	1	-
3-3-②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	○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1	1	-
4-1-②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	○	
4-2.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2	2	-
4-2-①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	○	
4-2-②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	○	
4-3.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2	2	-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4-3-①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	○	
4-3-③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	
5-2. 정책기반 강화	1	1	-
5-2-①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	

3 2023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잇따른 범죄피해자 대상 보복범죄 사건으로 국민의 실효적 피해자 보호 대책 요구 증가



- 한편, 범죄피해자의 요구는 기존의 소극적인 안전보장에서 적극적인 회복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 안전조치부터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 주관, 경찰청 협조)

-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등

- 경찰청은 안전조치 고도화를 통해 가해자의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긴급단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추진

2)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추가피해 방지

〈'22년 안전조치 수단별 활용 현황〉

년도	총 계	ICT기술			인력		제도			시설	
		112 등록	스마트 워치	CCTV	순찰	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정보 변경	보호 시설	임시 숙소
'22	80,026	30,041	14,208	817	21,485	12	2,307	10,950	2	19	185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개념을 기존 피해자 대상 보호조치에서 선제적·예방적인 가해자 조치(체포·구속·접근금지 등)까지 확대, 추가피해 위험의 근본적 제거 도모
※ 선제적·예방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운영계획 수립·시행('22. 3. 10.)
- 가해자 성향 및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워치 제공 △임시숙소 지원 △CCTV 설치 등 맞춤형 보호 수단 제공,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 위치확인 성능 및 편의성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 도입(6,300대), 가해자의 위해 시도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 등 대응역량 강화
- △침입시도 △주변배회 △폭행 △비인가자 접근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피해자·경찰에 경고하는 '지능형 CCTV' 도입, 추가피해 예방효과 제고

-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으로 조속한 일상회복 도모

〈'22년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년도	합계	초기상담	지원활동			
			소계	경제적	심리적	기타
'22년	32,529	8,202	24,327	14,795	7,934	1,598

- 범죄 발생 직후 위기개입 모델에 따라 응급·초기개입(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관, 피해자보호관, 피해자전담경찰관 등) 실시, 심리 안정 및 요구사항 파악
- 범죄피해자에 특화된 '트라우마 척도'를 활용(경찰 자체 개발), 범죄 발생 초기 심리적 충격이 심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위기개입 서비스 강화

- 범죄로 인한 혈흔 등 현장 오염 시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피해현장정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 도모
※ '22년 총 144건
- 범죄 발생 시 관할 지자체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례회의'를 전개하는 등 일상회복 지원
※ '22년 총 275건

● **범죄피해자 형사 절차 참여 강화**

- 외부 전문가 주관 가·피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재발방지·관계회복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200→230개서)
- 전문가 면담을 통해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종합 평가하여 가해자 구속·양형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확대(208→230개서)

3)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안전조치 고도화 지속 추진**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 민간경호 지원사업 도입 △ 임시숙소 지원 확대(최대 5일 →10일) 등 안전조치 강화 추진
- 추가피해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고위험 사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객관화·점수화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개발 추진

● **관계부서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심리적·경제적 지원 강화**

- 심리전문인력을 활용한 범죄 발생 직후 초기지원 및 각종 심리적·경제적 지원제도 연계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관계단체 협업체계 구축, 원스톱 지원으로 피해자 편의성 제고

● **실질적 피해회복 및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지원**

-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확대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및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④ 정책과제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1-1-①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①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신속·정확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확립

2) 추진 내용

- 쏘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강력범죄 등 주요범죄 발생 시 신속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 심리 안정 도모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실시
- 관계기관 공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24시간 지원연계 체제 유지

3) 추진 경과

- '15. 쏘 경찰서 청문감사 기능에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 '16. 초기상담 및 지원·연계 실적
※ 초기상담 17,893건, 현장출동 2,328건, 지원·연계 16,847건
- '16. 연중, '피해자 보호 지원 매뉴얼' 정비, 범죄 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 '17. 연중,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연계
※ 초기상담 17,392건, 지원·연계 13,310건
- '18. 연중,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연계
※ 초기상담 25,523건, 지원·연계 18,417건
- '19. 연중,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연계
※ 초기상담 20,351건, 지원·연계 25,296건
- '19. 8.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배포

- '20. 연중.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연계
※ 초기상담 20,262건, 지원·연계 39,348건
- '21. 사이버 교육 등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21. 3. 피해자전담경찰관 39명 배치
- '21. 연중.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연계
※ 초기상담 9,263건, 지원·연계 20,839건
- '21. 범죄피해자 교육 강화를 위한 '피해자보호교육 표준 교안' 제작
- '21. 범죄피해자 '사이버 교육(보호·지원, 신변보호 등) 콘텐츠' 제작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연계
※ 초기상담 8,202건, 지원·연계 24,837건
- '22. 산불화재 등 주요 재난범죄 범죄피해자보호팀 운영(강원·경북)
- '22. 시도청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40명 배치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개정
- '23.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연계 강화를 위한 안내제도 개선
- 주요 재난사고 및 다수 인명 피해 발생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팀 적극 운영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지속.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증원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8
담당자	경위 홍재진	이메일	hongjj99@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응급위기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자 심리 충격 최소 및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도모

2) 추진 내용

- 강력범죄 발생 초기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응급심리지원 시스템 구축
-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전문성 및 현장 활동 강화를 위한 체계 정비

3) 추진 경과

- '07.~'21.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총 197명 경력채용
- '17. 5.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 개발
- '18. 4. 일반임기제공무원(위기개입상담관 45명) 채용 및 현장배치
- '19.10. 유족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사망통지 가이드' 시범운영 실시
- '20. 긴급 위기개입 상담 강화를 위한 '피해자보호 교육자료' 제작
- '21.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교안' 제작
- '21. 3. 피해자심리전문요원 경력채용 계획 수립
- '21. 피해자전담경찰관 신규 채용 인원, 경찰서 배치(39명)
- '21. 위기개입 상담관, 경찰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실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및 위기개입상담관(임기제) 활용, 스톱킹 범죄 피해자 긴급 위기개입 상담 활성화

- '22. 심리지원 확대를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교안' 개정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케어센터 3개소 추가 개소(총 3 → 6개소), 응급심리지원 강화
- '23. 상반기 전국 피해자전담경찰관 워크숍 개최
- '23. 연중 피해자심리 전담인력을 통한 응급심리지원 강화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피해자 지원 업무 지속 관리 운영

⑤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8
담당자	경위 홍재진	이메일	hongjj99@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성범죄, 가정폭력, 대형재난사고 등 범죄피해 유형별 체계적 보호·지원 정책추진

2) 추진 내용

-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자 지원 대응 능력 강화
- 긴급 위기개입 상담 등 심리지원 방안 강화
-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추진 경과

- '1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20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시 피해자보호팀 운영 지침 하달
- '20. 피해자지원 모바일 앱 '폴케어' 개발, 범죄 유형별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방안 소개
- '21. KICS 권리고지 안내서 외국어 번역본(중국어·일본어·몽골어·베트남어·필리핀어·태국어) 6개 추가, 외국인 보호지원제도 안내 강화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유형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보호 교육 표준 교안' 제작
- '22. 피해자지원용 모바일 앱 '폴케어' 지원 기관 연락처 등 확대·추가
- '22. 1.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시 '피해자보호팀' 운영, 재난 사고 피해자 유족 등 긴급심리지원체계 구축

- '22. 피해자지원용 모바일 앱 '플케어' 지원 기관 연락처 등 현행화
- '22. 경찰청·자치경찰위·지자체 협업,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지자체·민간단체 등 합동 사례회의 활성화
- '23.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및 모바일 앱 등 피해 유형별 지원 안내 강화
- '23.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네트워크 확립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8
담당자	경위 홍재진	이메일	hongjj99@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가해자로부터 신속한 배상을 통해 형사절차상 피해자 구제 활성화

2) 추진 내용

- 모든 범죄피해자 조사단계에서 배상명령 제도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개정
- 피해자지원제도 및 신변보호제도 안내를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보장 내용에 배상명령 홍보 자료제작 및 배포

3) 추진 경과

- '21. 연중. 배상명령제도가 기재된 피해자 안내서를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
- '21. 연중. 배상명령제도가 안내된 모바일 앱 내용 업데이트 및 배포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현장 경찰관 배상명령제도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업무 매뉴얼 및 피해자 보호·지원안내서 개정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배상명령제도 콘텐츠 개발
- '23. 연중. 대국민 배상명령제도 안내용 리플릿 등 제작
- '23. 연중. 배상명령제도가 안내된 모바일 앱 내용 업데이트 및 배포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사업 지속, 예산 확대에 따라 안내서 범위 및 제공 대상 확대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8
담당자	경위 홍재진	이메일	hongjj99@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가해자와 피해자 간 민사상 분쟁을 형사소송절차에서 보다 간이하게 해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지원

2) 추진 내용

- 피해자지원제도 및 신변보호제도 안내를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보장 내용에 형사재판상 화해제도 추가 제작 및 배포

3) 추진 경과

- '21. 형사재판상 화해제도가 소개된 피해자보호 교육용 동영상 제작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형사재판상 화해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설명자료 추가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형사 재판상 화해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리플릿) 등 제작·보급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 사업 지속, 예산 확대에 따라 안내서 범위 및 제공 대상 확대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8
담당자	경위 홍재진	이메일	hongjj99@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및 보호·지원 정보 및 안내 등을 철저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정보제공권을 실질화

2) 추진 내용

- 사건진행상황 정보제공 강화 및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대상 확대
- 피해자 권리고지 내용을 범죄유형 및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내용을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내부 교육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법령 등에 규칙화

3) 추진 경과

- '17. 2. 범죄피해자 단계별 권리고지 표준안내서 발간
- '17. 10. ‘사건진행상황 제공 서비스’ 확대 개선
 - 수사진행상황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수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 △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내 사건 검색 메뉴 신설’ △ 형사사법포털 상 사건진행상황 제공 정보 확대
 - △ SMS로 구체적 진행내용 발송가능한 ‘설명통지 기능’ 신설

	<p>• 귀하의 사건 피고소인(접수번호 2017-0001)을 2017. 05. 12. 조사하였습니다.</p> <p>• 사건 담당자가 경위 홍길동(강력1팀)로 변경(2017. 05. 12.)되었습니다.</p>	
내 사건 검색 메뉴	형사사법 포털 상 사건진행상황에 조사정보 및 담당자 변경사항 추가	설명통지 기능 신설

- '18. 10. ‘피해자권리 및 지원정보 맞춤형제공’ 기능 등 모바일 ‘앱’ 개발
- '19. 9. 경찰관 전용 모바일 앱 개발, 업무폰(폴리폰) 내 탑재 기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 내용보강(1쪽→2쪽) 등 개정
- '20. 시안성을 개선한 KICS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안내서 전면 개정

- '2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에 따른 KICS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안내서 개선
- '21.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경찰청 훈령)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제공 시기를 앞당김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형사사법기관 간 협의, 차세대 KICS '피해자 지원 토탈 서비스' 구축 모델 설계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피해자 정보제공 모바일 앱 업데이트 등 고도화 진행
- '23. 연중. 시각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안내서 제공 확대
- '23. 연중. 직원 인식 개선을 위한 내부 직원 순회교육 등 진행
- '23. 연중. 피해자 통지 적정 이행 여부 모니터링 강화
- '23. 연중. 차세대 KICS '피해자 지원 토탈 서비스' 개발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지속. 신규 권리고지 수단 발굴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교육·홍보 추진
- ~'24.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을 통해 사건조회서비스 및 사건진행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토탈 서비스' 오픈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8
담당자	경위 홍재진	이메일	hongjj99@police.go.kr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2-3150-0970
담당자	경감 이충국	이메일	fenderblue@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피해자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권 보장

2) 추진 내용

-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권 보장

3) 추진 경과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21.1.)
 -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근거를 대통령령에 명문화(제69조)
 - ※ 특히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우 열람·복사 신청 범위를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확대하여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경찰수사규칙」 시행('21.1.)
 - 수사서류 열람·복사 관련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명문화(제87조)
 - ※ 특히 조사 당일 본인 진술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는 지체없이 검토 후 제공하도록 규정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지침」 시행('21.5.) 및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21.8.)
 - 수사서류 열람·복사 관련 구체적인 업무 절차 등을 규정
 - ※ 특히 △경찰 결정서 △교통사고·의료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 △변사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 가능토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 확대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당일 조서 등 지체 없이 열람·복사 제공 관련 강조('22.9.)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시스템 도입('22.9.)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지침」 개편 검토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시스템 고도화 등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수사서류 열람·복사 제도 운영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지속 발굴 및 반영

⑤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3150-0859
담당자	경위 김준범	이메일	dutdu04@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진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술 조사에 적합한 피해자 중심 조사환경 구축

2) 추진 내용 및 경과

-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 운영
 - 진술 능력이 부족한 아동·장애인에게서 풍부한 진술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8년부터 아동·장애인 조사기법(NICHD) 교육 운영 중
-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 체계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에 여성 조사관을 배치,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는 피해자 조사를 전담 중
- 피해자 중심의 인권 친화형 조사환경 개선사업 추진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가 피의자와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진술할 수 있도록 '17년부터 △ 별도 조사·휴게 공간 마련 △ 가·피해자 동선 분리 △ 피해자 전용 지원 공간 마련 등 조사환경 개선 추진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 운영
 - 수사관의 조사 경험에 따라 초급·중급·고급·동료전문가 과정으로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2년 107명의 조사관을 상대로 교육
-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 체계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 아동·장애인이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33개소에 160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운영 중

- 인권 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 '17~'22년간 총 86억원의 예산으로 145개 경찰관서 조사환경 개선 완료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을 통한 전문 조사관 확대 양성
- 해바라기센터 내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 체계 지속 운영
- 인권 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하여 피해자 인권 적극 보호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 해바라기센터 전담조사, 조사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친화적 조사환경 적극 조성

⑤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전화번호	02-3150-0326
담당자	경위 박도현	이메일	sylvia0805@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확대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2) 추진 내용 및 경과

- 범죄피해평가 운영관서 지속 확대 및 이를 위한 △ 전문가 양성 △ 교육·홍보 등 추진
- '21. 2. 범죄피해평가 운영관서 208개서로 확대
- '21. 2. 범죄피해평가 전문가 148명 선발·위촉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한국법심리학회 협업으로 전문가 교육 실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 22명 양성
- 범죄피해평가 운영관서 '21년 208개서 → '22년 230개서로 확대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평가 외부 전문가 추가 양성 및 쏠 경찰서(258개서) 운영 확대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범죄피해평가 운영 지속 확대 등 제도 내실 운영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3
담당자	경위 정진우	이메일	sbuxx@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언론 및 대중매체의 피해자 공개 또는 보도에 의한 피해자 정보유출 방지
-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2) 추진 내용

-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정보공개 금지 및 정보공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준수
- 현장 수사관을 위한 수사사항 공보 및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 관련 사례 중심의 구체적 지침 마련

3) 추진 경과

- '14.4.26. 「경찰수사사건등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정
 - '21.11월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개정, 수사사항등 공보 요건·절차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 강화
- '15.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지침 수립
 - 성범죄 등 주요 피해자의 경우는 심리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반영, 무분별한 언론취재 차단 및 신원노출 예방 노력 전개
 - ※ 보도자료는「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규칙」준수여부 면밀히 확인
 - 언론 접촉시점·유의사항 등 언론취재 대응자료 적극 제공
- '16. 「수사사건 언론보도 시 사건관계인 보호 등 유의사항」하달
- '16. 「경찰 홍보매뉴얼」중「수사사건 홍보매뉴얼」개정
- '16.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상에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구제제도' 내용 반영
- '17. 연중. 피의자 신상공개 후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보호팀' 운영

- '19. 1.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피해자 명예 보호)
- '19. 3. 13. 경찰 수사사건 공보 체크리스트 및 설명자료 제작, 수사현장 시행
- '20.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교육 실시
- '21. 1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 수사준칙을 근거법령으로 추가, 예외적 공개사유 정비, 포토라인 규정 삭제, 출석정보 공개금지, 수사관 등의 개별 언론접촉 금지 규정 신설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금지원칙(예외적 공개)원칙 준수, 피해자 신원정보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노출방지 등을 엄격히 운영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 (원칙) 공개 금지 원칙(제4조) / 예외적으로 공개(제5조)
- (예외적 공개) ①유사범죄 재발방지, ②국민협조 필요(공개수배), ③급박한 위험이나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④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제5조 각호)
- (공개범위) 성명·얼굴, 신상·사생활 등 예외적 공개유형별 지정된 범위(제6조)
 - 'AOO', 'B주식회사'와 같이 익명 사용 원칙(제7조)
- (공보 유의사항) 유죄 단정표현 금지, 균등한 보도기회, 사생활 노출 금지, 영상제공 시 비식별조치, 피의자 혐의부인 사실 포함(13조)
 - 초상권 보호(14조), 출석정보 공개금지(15조), 수사과정 촬영금지(16조), 특강법·성폭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17조)
- (수사보안·개인정보 노출 시 조치) 보안조치(제18조), 개별언론 접촉금지(제19조), 진상 확인·오보대응(제20조),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노출시 조치(제22조), 공보교육(제24조)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2. 연중. 현장경찰관 대상 피해자 정보유출 방지 교육 강화
- 전국 수사경찰 대상 반복 교육 및 훈령·지침 강조 지시, 이행현황 지속 관리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 지속 발굴·반영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8
담당자	경위 홍재진	이메일	hongjj99@police.go.kr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1614
담당자	경감 박영진	이메일	pppjjang@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수단 고도화 및 안전조치 업무 절차 개선으로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 방지

2) 추진 내용

- 피해자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지원 등 안전조치 수단을 맞춤형 제공,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 수단 고도화 추진

3) 추진 경과

<피해자 임시숙소>

- '14~'15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 시작 및 관리 강화계획 수립
- '18~'19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지속 확대
- '22. 경찰서별로 관내 2개소 이상의 임시숙소를 지정하도록 관리 강화

(단위 : 개소)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임시숙소 보유현황	399	449	483	490	539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

- 신변보호 역량강화 종합계획 수립('15.4), 신변보호 추진체계 정비
-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운용 대수 지속 확대('16년 2,050대 → 22년 10,000대)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3월 스마트위치 긴급신고 시 112상황실에서 신속·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위치 위치확인시스템」 운영 개시, 위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 '22. 12월 기존 스마트위치보다 성능 및 편의성(부피·무게 감소)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위치 6,300대 도입('21년 3,700대 → '22. 10,000대로 확대)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대상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로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 방지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대상 임시숙소 지원 강화 (최대 5일 → 10일 이상)
-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감지·경고하는 '지능형 CCTV' 도입, 보복범죄 예방효과 제고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년~지속.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장비 고도화 및 신규사업 도입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전화번호	02-3150-0217
담당자	경감 이소진	이메일	juyoorin@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급증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 확보 및 신변보호 관련 현장경찰관 교육 강화

2) 추진 내용 및 경과

- 경찰서별 피해자전담경찰관 1~2명 배치, 신변보호 관리 및 지원 연계 수행
- 지구대·파출소, 수사부서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 피해자 보호조치 확인 및 타부서 연계 역할 부여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신변보호 신청이 많은 70개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1명씩 증원(+70명 / 총259명)
※ 189개 1·2급지 경찰서에 기본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신변보호 신청이 많은 70개 경찰서는 1명 추가 배치(69개 3급서는 수사지원팀 내 타 업무 담당자가 신변보호 업무 병행)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신변보호 강의(6차)를 지정학습으로 신규 등록하여 신변보호 담당자 대상 신변보호 고급과정 필수 수강 조치
- 피해자보호관 재정비 및 교육 실시
- 지구대·파출소,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등 범죄피해자 접촉부서 현장경찰관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신변보호 신청 증가 추이에 따라 관련 인력 증원 검토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7
담당자	경감 이소진	이메일	jyoorin@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강화

2) 추진 내용

- 보복범죄의 선제적·종합적 예방을 통하여 피해자보호 활동 강화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관리 과정에서 신상정보 노출 위험 방지 보완
- 경찰 대응과정 상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규칙·업무 매뉴얼 정비 및 현장 예방교육 강화

3) 추진 경과

- '19. 1. 수사경찰 표준 교안 배포(가명조서 내용 포함)
- '19. 연중 보복우려 등 피해자 조사 시 가명조서 작성 활성화 독려
- '20. 3.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관리계획 하달
- '20.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청 「2차 피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 '20. 경찰인재개발원 '2차 피해 예방 교육과정' 신설 및 사례형 교육자료 제작
- '2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규정한 2차 피해 관련 내용을 경찰 수사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경찰청 훈령(범죄수사규칙,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명문화
- '21. 지역경찰·여성청소년·사이버 수사 등 각 기능의 기존 업무 매뉴얼*에 2차 피해 개념·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반영,현장의 대응력 강화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여가부 협업, 2차피해 예방교육 강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하여 쏘 직원 대상 2차 피해 예방 직장교육 실시
- '22년 여성폭력 대응 관련 교육과정 커리큘럼 구성 시 경찰 대응 과정 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기관과 협조, '성·인권감수성 훈련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시간' 편성
 - ※ 교육안(PPT·영상 등) 제작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점검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교육기관에 공유·안내
- '범죄 피해자 권리 안내서'에 2차 피해 신고창구 안내 문구 추가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차 피해 개념 및 최근 언론보도 및 판례를 담은 교육자료를 제작·배부
- 교육기관 여성폭력 대응 관련 교육과정 지속 모니터링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 지속. 교육콘텐츠 지속 개발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전화번호	02-3150-0938
담당자	경감 이하나	이 메 일	hnlee309@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실효성 제고

2) 추진 내용

- **(부처간 협업)**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19년부터 유관기관(여가부-방심위-방통위)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관련 범정부 공동 대응 중

* 피해영상물 고유값(해시값 등)을 방심위와 공유하고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

3) 추진 경과

- '19.11.12. 디지털성범죄 유포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부처 간 협업 주요 사례 >

- ① (수사 지원) 피해자가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피해신고 과정에서 수사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서 방문 없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사 개시
- ② (삭제·차단 지원)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불법촬영물 등은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여타 사이트 등에 게시된 피해영상물 발견 시 방심위로 삭제·차단 요청
 - ※ 행안부 주관, 「'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 우수기관」으로 '경찰청'(사이버수사국, 디지털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유관기관 간 협업)이 선정('21.1.)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인공지능 안면인식)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 추가로, 담당 수사관이 확보한 영상물 중 동일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신고시스템 연계) 피해자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비대면)시 제출한 피해영상물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방심위로 삭제·차단 요청

- (협업기관 확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이 수집·공유하는 피해영상 정보(영상 DNA 등)를 지자체(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공유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영상물을 방심위에 상시 전달하여 차단하게 하는 등 불법촬영물 확산 방지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협업기관 확대) '추적시스템' 이용 협업 기관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피해계시물 검색기능을 제공, 방심위로 심의요청 할 수 있도록 기관 다각화

⑤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전화번호	02-3150-0240
담당자	경위 김문영	이메일	orezmoon@police.go.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등을 기반으로 보다 내실 있는 피해자지원제도 구축

2) 추진 내용 및 경과

- 피해자 관련 각종 통계자료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방안 마련
- '16~'18. 「피해자인권포털시스템」 신설 및 각종 지원 현황 개선
- 「피해자인권포털시스템」 스토킹 범죄 시행에 따른 자료 추가 수집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자문단 구성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피해자인권포털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 개선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계량화 연구 관련 개선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현장 배포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지속. 차세대 KICS와 피해자인권포털시스템 연동체제 구축
- '24.~지속. 연구 용역 결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적극 반영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감사관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전화번호	02-3150-0218
담당자	경위 홍재진	이메일	hongjj99@police.go.kr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① 그간 추진 성과

- 방송심의 위반사항에 대한 방심위 사후심의 및 방통위 행정처분과 방송사별 심의책임자 교육 실시
 - * 책임자 교육: 지상파 11회, 종편·보도 채널 8회, 전문편성채널 12회, 상품판매방송 3회 (2022. 12월 기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신원공개정보 심의 및 사업자 자율규제 실시
 - * 신원공개정보 심의 92건, 자율규제 8,183건(2022. 12월 기준)
- 유관기관 공조체계 및 협력 강화, 기관·단체 협력회의 개최
 - * 경찰 수사요청 9회, 유관기관 업무설명 등(3회), 협력회의 개최(6회)
- 모니터링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12월 완료 예정)
-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시 협력체계 및 분기별 실무협의체 운영·참석(2회)
- ‘공공 DNA DB’ 구축·운영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 관리·공조시스템 개발 완료(7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2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 과제 현황

- 총 과제수 : 3개
- '23년 시행계획 반영 과제 수 : ('22년) 3개 → ('23년) 3개

추진과제	시행계획 반영 여부		
	'22년	'23년	증감
계	3	3	-
4-1.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2	2	-
4-1-②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	○	-
4-1-③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	-
4-3.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1	1	-
4-3-③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	-

3 2023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 예방조치 마련과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 필요
-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필요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차단·삭제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분산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필요

2)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방송심의 위반사항에 대한 방심위 사후심의 및 방통위 행정처분

(단위 : 건)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위반 조항	2020		2021		2022		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제21조(인권보호)	1	11	-	2	-	3	1	16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	-	-	-	-	1	0	1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	8	-	1	-	2	0	11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	-	1	-	-	-	1	0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사 심의책임자 교육 실시 34회(지상파 11회, 중편·보도채널 8회, 전문편성채널 12회, 상품판매방송 3회)(2022년 기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신원공개정보 심의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실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시정요구 현황(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위 : 건)

구분	시정요구			합계
	2020년(6월~)	2021년	2022년	
피해자신원공개 정보	5	47	92	144

※ 디지털성범죄 신원공개정보 등 2차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심의대상 확대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2년	계
자율규제	6,021	18,144	8,183	32,348

- 피해자 지원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협력회의 개최(6회)
- 모니터링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
-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시 협력체계 및 분기별 실무협의체(2회) 운영·참석
- ‘공공 DNA DB’ 구축·운영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공 DNA DB 등 통합 관리·공조시스템’ 개발 완료(7월)

3)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방송심의 위반사항에 대한 방심위 사후심의 및 방통위 행정처분 실시(연중)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시정요구 및 자율조치 강화
- 디지털성범죄 신원공개 정보 등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심의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불법촬영물 신고 기관·단체 등 공조체계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별 신원공개 정보 피해분석 및 모니터링
- ‘공공 DNA DB 등 통합·관리 공조 시스템’ 관리 및 고도화
- ‘공공 DNA 필터링 시스템’ 오식별 대응 체계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강화(계속)

4 정책과제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4-1-2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 예방조치 마련
-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

2) 추진 내용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관련 방송심의 강화
 -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실시
- 방송사업자 자율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의사례 배포 및 교육 지원
 - 방송심의 사례집 배포 및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심의사례 전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정보 유출 신속심의·차단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상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서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까지 확대·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 실시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 :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 침해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공개하고 있는 바, 사례중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업무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이 곤란함.
 - 플랫폼 사업자 대상 신속한 자율규제 요청 및 협력회의를 통해 관련 법률 요건 등을 공유하여 자율적 예방조치 확대
-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21, '22 지정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상시 협력회의 실시

3) 추진 경과

- '20.12. 방송심의규정에 제21조의2(범죄사건의 피해자 등 보호),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 규정 신설
- '19. 9. 방송심의규정에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규정 신설
- 경찰청, 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확립(수시)
 - 불법공조시스템 운영, 공공 DNA DB 등록 및 운영 등
-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요청(수시)
-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협력회의 개최(상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방송심의 위반사항에 대한 방심위 사후심의 및 방통위 행정처분

(단위 : 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조항	2020		2021		2022		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제21조(인권보호)	1	11	-	2	-	3	1	16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	-	-	-	-	1	0	1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	8	-	1	-	2	0	11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	-	1	-	-	-	1	0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2. 12월 말 기준, 방송사 심의책임자 교육 실시 34회(지상파 11회, 종편·보도채널 8회, 전문편성채널 12회, 상품판매방송 3회)
 - 방송 심의규정 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신설 조항·규정별 주요 심의사례 설명 및 시청자 민원, 기타 방송심의 관련 유의사항 등 전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신원공개정보 심의현황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시정요구 현황(방송통신심위원회)〉

(단위 : 건)

구분	시정요구			합계
	2020년(6월~)	2021년	2022년	
피해자신원공개 정보	5	47	92	144

※ 디지털성범죄 신원공개정보 등 2차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심의대상 확대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자율규제	6,021	18,144	8,183	32,348

- 경찰 수사요청 등 공조체계 및 사업자 협력 강화
 - 주요 디지털성범죄정보 주요 유통 사이트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요청(총 11회)
 - 유관기관(경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상 DNA 관리시스템, 공조시스템, 심의업무 설명 등 공조체계 강화(총 3회)
 - 구글, 트위터 등 사업자 협력을 통해 악성디지털성범죄정보 자율규제 강화(상시)
- 피해자 지원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협력회의 개최(7회)
 -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등 모니터링 및 신고방법 안내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지상파, 종편pp, 보도pp 방송사업자 심의책임자 대상으로 관련 심의규정 및 주요심의·의결 사례 설명 등
- 〈2022 방송심의 사례집〉 배포('23.4.월 예정)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시정요구 및 자율조치 강화
- 디지털성범죄 신원공개 정보 등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심의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불법촬영물 신고 기관·단체 등 공조체계 강화
 -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 등과 24시간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방안 논의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방송사업자 자율심의 역량 강화 지원(계속)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시정요구 및 자율조치 강화
-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 공조체계 강화(계속)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유지·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전화번호	02-2110-1265 02-2110-15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212 02-3219-5813
담당자	박성철 사무관 김기호 사무관	이메일	tango2017@korea.kr hotblue@korea.kr
	최덕후 차장 이도한 차장		choidh@kocsc.or.kr dhlee@kocsc.or.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방송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피해자 지원

2) 추진 내용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관련 방송심의 강화
 -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실시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정보 유출 관련 통신심의 강화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상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서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까지 확대·강화
-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21, '22 지정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상시 협력회의 실시

3) 추진 경과

- '20. 12. 방송심의규정에 제21조의2(범죄사건의 피해자 등 보호),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 규정 신설
- '19. 9. 방송심의규정에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규정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심의 및 자율규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유통 방지

- 주요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시정요구 조치

-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협력회의 개최(상시)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방송심의 위반사항에 대한 방심위 사후심의 및 방통위 행정처분

(단위 : 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조항	2020		2021		2022		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법정제재	행정지도
제21조(인권보호)	1	11	-	2	-	3	1	16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	-	-	-	-	1	0	0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	8	-	1	-	2	0	11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	-	1	-	-	-	1	0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신원공개정보 심의현황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시정요구			합계
	2020년(6월~)	2021년	2022년	
피해자신원공개 정보	5	47	92	144

※ 디지털성범죄 신원공개정보 등 2차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심의대상 확대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자율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자율조치	6,021	18,144	8,183	32,3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 피해자 지원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협력회의 개최(6회)
 -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등 모니터링 및 신고방법 안내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방송심의 위반사항에 대한 방심위 사후심의 및 방통위 행정처분 실시(연중)
 - 언론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관련 이슈 발생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별 신원공개 정보 피해분석 및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시정요구 및 자율조치 강화
- 불법촬영물 신고 기관·단체 등 공조체계 강화
 -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 등과 24시간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방안 논의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방송심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심의 및 행정처분 실시(계속)
-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체계적 분석 및 대응 기준 마련
-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 공조 체계구축 및 신고요청 확대
-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 공조체계 강화(계속)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유지·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전화번호	02-2110-1265 02-2110-15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212 02-3219-5813
담당자	박성철 사무관 김기호 사무관	이 메 일	tango2017@korea.kr hotblue@korea.kr
	최덕후 차장 이도한 차장		choidh@kocsc.or.kr dhlee@kocsc.or.kr

1) 과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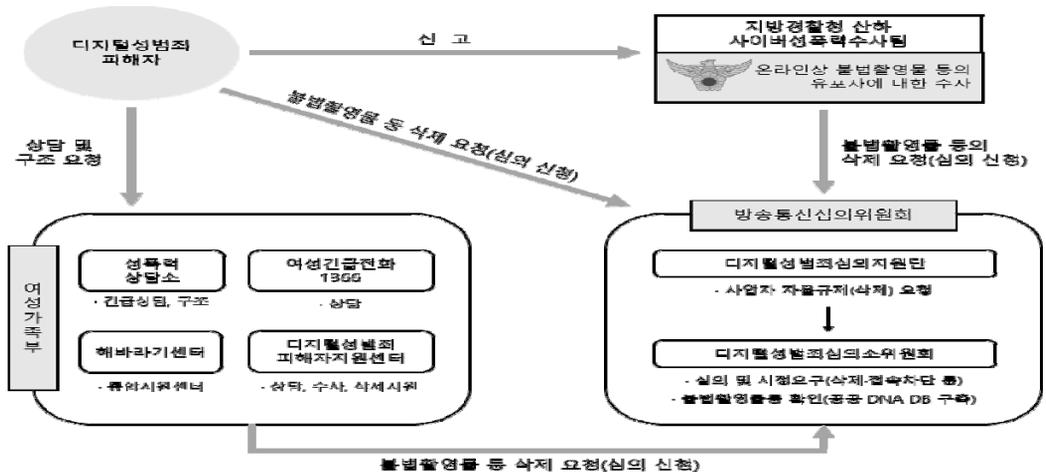
1) 추진 목적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차단·삭제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분산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

2) 추진 내용

-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유포차단·삭제 등 24시간 상시 심의체계 공고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24시간 이내 신속심의 운영
 -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모니터링 역량 제고
- 디지털성범죄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및 연계를 통한 공조체계 구축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종합적 대응 방안 모색
 -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통합 특징 값(DNA) DB '공공 DNA DB' 구축·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흐름도(유관기관 공조체계)



3) 추진 경과

- '19. 9.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담 소위원회 및 전담 조직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회소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심의회지원단' (4개팀) 신설
 - '전자심의회지원시스템' 구축, 24시간 교대근무제 도입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신속·상시 심의 기반 마련
- '19. 11.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유관기관 간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운영(상시)
 - 협력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공동 추진·협조 사항 등 논의를 위한 분기별(1회) 실무협의체 운영
 -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통합 특징값(DNA) DB '공공 DNA DB' 구축 협력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모니터링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
 - 주요 유포 사이트 상시·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
-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시 협력체계 및 분기별 실무협의체(2회) 운영·참석
 - 디지털성범죄 관련 공조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공동 추진·협조 사항 등 논의
- '공공 DNA DB' 구축·운영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공 DNA DB 등 통합 관리·공조시스템' 개발 완료(7월)
 - '기술지원 포털'을 통해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과 협력·개발한 라이선스 제약 없이 보급 가능한 형태의 '표준 특징기반(DNA) 필터링 기술' 등 보급*(9월~)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 지원을 위해 필터링 기술 및 특징값(DNA) DB 보급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 방통위 주관으로 법무부·여가부·검찰청·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22.8.)하고 과장급

실무협의회('22.9.) 및 고위급 협의회('22.12.)를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부처간 유기적 협업체계 강화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공공 DNA DB 등 통합·관리 공조 시스템' 관리 및 고도화
 - 해외 유관기관(NCMEC 등)과의 불법동영상 HASH 연계 자동화
- '공공 DNA 필터링 시스템' 오식별 대응 체계 마련
 - 오식별 신고 및 처리 절차 마련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강화(계속)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디지털성범죄정보 모니터링 강화(계속)
 -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전담 모니터링 인력 활용을 통한 디지털성범죄정보 모니터링 양적·질적 확대
-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계속)
 - '공공 DNA DB' 실효성 지속 제고 및 통합 관리·공조체계 강화
 - 분기별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공조체계 현황 점검 및 협력과제 발굴·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전화번호	02-2110-15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813
담당자	김기호 사무관	이 메 일	hotblue@korea.kr
	이도한 차장		dhlee@kocsc.or.kr

지방자치단체



① 서울특별시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

2) 추진 내용

- 공모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보조금 지원

3) 추진 경과

- '07.~'15.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행정과)
- '15. 1. 2.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정
- '15.1.14.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부서 변경(행정과→민관협력담당관→인권담당관)
- '16.~'20.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1개 단체)
- '21.~'22.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5개 단체)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선정 및 지원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예산 지원

- 서울특별시 : 125,000천원(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외 4개 단체)
(단위 : 천원)

단체명	보호·지원 분야	지원금액
(사)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환경개선, 치료부대 지원 등	40,000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00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
합계		125,000

- 자치구 : 1,131,000천원

(단위 : 천원)

센터명	자치구명	지원액	센터명	자치구명	지원금액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6개구)	소계	236,000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구)	소계	250,000
	종로구	36,000		양천구	50,000
	중구	30,000		강서구	50,000
	동작구	40,000		구로구	50,000
	관악구	40,000		금천구	50,000
	서초구	40,000		영등포구	50,000
	강남구	50,000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개구)	소계	200,000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개구)	소계	265,000
	성동구	50,000		성북구	60,000
	광진구	50,000		강북구	40,000
	송파구	50,000		노원구	40,000
	강동구	50,000		도봉구	40,000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개구)	소계	180,000		동대문구	40,000
	용산구	45,000		중랑구	45,000
	은평구	45,000			
	서대문구	45,000			
	마포구	45,000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3. ~2023. 11.
- 지원예산 : 125,000천원
-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보호·지원분야 : 치료비 지원, 각종 상담, 경제적 지원 등
- 추진일정(안)
 -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3. 1월 중
 - 사업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약정 체결 : '23. 2월, 3월
 -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후('23. 3월, 70%), 중간점검 후('23. 8월, 30%)
 - 보조금 집행 중간 점검 및 최종 사업 평가 : '23. 8월, 12월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02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지속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전화번호	02-2133-6378
담당자	7급 송이	이메일	songyi94@seoul.go.kr

② 부산광역시

5-1-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①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운영 활성화 지원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에 의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

3) 추진 경과

- '05. 1. ~ 부산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행·재정적 지원
- '16. 6.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7.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7.10. 사)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록 개소
- '17.12.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8. 1.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19. 4.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20.12.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②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센터명	계	부산시	자치구·군	관할지검
계	263,000	190,000	73,000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78,000	70,000	8,000	부산지검
(사)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85,000	60,000	25,000	부산동부지검
(사)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000	60,000	40,000	부산서부지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건수)

센터명	합계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생계비·의료비· 학자금·주거이전비)	상담활동	인권교육	신변보호	기타
	6,323	966	402	4,856	1	23	75
부산	3,645	839	170	2,612	1	23	-
동부	1,500	106	151	1,220	-	-	23
서부	1,178	21	81	1,024	-	-	52

③ 2023년 주요 추진계획

-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행정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지원 및 협력 강화 등
 - 재정지원 :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3개 센터 보조금 지원

〈 2023년 재정지원 계획 〉

(단위 : 천원)

센터명	계	부산시	자치구·군	관할지검
계	263,000	190,000	73,000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78,000	70,000	8,000	부산지검
(사)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85,000	60,000	25,000	부산동부지검
(사)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000	60,000	40,000	부산서부지검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포상 등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6.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재정지원 지속 추진
- '23.~'26.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신속한 지원체제 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51-888-6461
담당자	장동규	이메일	jdk0987@korea.kr

③ 대구광역시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 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에 기여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및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재정지원 등)에 의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경북, 대구·서부) 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경제적·법률적·심리적 피해회복 지원

3) 추진 경과

- 대구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매년)
*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05.~),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08.~)
- '16. 10.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17. 7. 21. 대구광역시 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17. 10. 30.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17. 11. 10.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8. 10. 1.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20. 7. 10.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 '20. 9. 21.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22. 12.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으로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긴급구호금 지원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 지속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센터명	계	시	구·군	비고
(사)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43,250	33,250	10,000 (중구)	민간경상보조
(사)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75,750	23,750	52,000 (달서구 25,000, 서구 7,000, 달성군 20,000)	민간경상보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실적('22. 1.1. ~ 12. 31.)

(단위 : 천원)

센터별	구분	합 계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대구·경북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05	33,250	51	14,453	44	14,897	6	1,600	4	2,300
(사)대구서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00	23,750	6	6,105	0	0	2	704	92	16,941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지속
 - 재정지원 규모(예정)

(단위 : 천원)

센터명	계	시비	자치구·군	비고
(사)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4,500	24,500	10,000 (중구)	민간경상보조
(사)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9,500	17,500	52,000 (달서구 25,000, 서구 7,000, 달성군 20,000)	민간경상보조

-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긴급 구호금 지원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멘토링, 문화활동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 지원
-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범죄발생 직후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해소와 고통 경감을 위한 무료 상담 실시 및 각종 법률정보 제공
- 피해자 신변 보호 및 현장지원, 법정 재판 모니터링 실시
 - 보복범죄 우려 없이 피해 회복과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 범죄피해자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강화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2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 확대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속 추진
- ('25.~'26.) 각종 유관기관,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대구광역시 행정국 행정과	전화번호	053-803-2845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이메일	kj21208@korea.kr

④ 인천광역시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구제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

2) 추진 내용

- 종합적·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 추진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3) 추진 경과

- '05. 01. 06. :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건립
- '06. ~ 현재 : 보조금 재정지원(시비)
- '14. 05. 26.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5. 04. 13.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16. 11. 14.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 03. 30.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사)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지원

(단위 : 천원)

센터명	계	운영비	사업비	비고
(사)인천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52,000	57,000	95,000	

- '22년 범죄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건)

사업내용	세부내용	지원건수	비고
법률지원	법률상담·자문·정보 제공, 재판모니터링 지원 등	5,953	
경제지원	생계비, 학자금, 직업훈련비, 간병비, 장례비 지원 등	1,106	
의료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치료비 부대비용지원 등	430	
상담지원	전문상담지원 등	7,847	
신변보호지원	법정동행, 피해자 보호 등	98	
프로그램지원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	14	
기타 지원	병원후송, 주거환경개선, 홍보, 교육 등	803	
계		16,251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1. / 7. : 보조금 지급(상·하반기)

(단위 : 천원)

센터명	계	운영비	사업비	비고
(사)인천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80,000	57,000	123,000	

- 범죄피해자 지원 추진

- 의료지원 : 응급조치, 검진, 수술, 치료비 지원 등
- 경제지원 :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 등
- 법률지원 : 법률자문,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지원 등
- 상담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복지 연계지원 등

- 동행지원 : 법정, 수사기관 동행 활동비
- 홍보비 : 교통·공공시설 안내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 종합안내서, 포스터 등
- 기타지원 : 피해자유족모임지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주거환경개선, 보안장비 임대
- 운영비 : 직원 및 관계기관 실무자 수시 교육, 관계기관 간담회, 자원봉사자 전문화과정 교육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市, 검찰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년 이후 :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속 지원

5 담당자

소관부서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32-440-1894
담당자	행정7급 민준기	이메일	21capjun@korea.kr

⑤ 광주광역시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상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 내용

-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는 원스톱 지원
-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
-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 경제지원 실시
- 외상 후 스트레스 등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트라우마 치료기관 ‘스마일센터(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연계 지원

3) 추진 경과

- '05.1.25.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법인설립 '06.5.2. 허가)
- '13.10.24. 사회복지 통합네트워크 간담회 및 협의체 구축
 -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수행기관 및 공익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함
- '15. 8.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15.10.~'16.6. 광주광역시 구청 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북구('15.10.), 서구('16.3.), 광산구('16.5.), 남구·동구('16.6.) 제정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경제적·비경제적 지원 상담 : 1,539건 실시
 - 면접·방문상담 96건, 전화상담 621건, 기타상담 822건
 - 경제적 지원(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 총 351건, 240,867천원
 - * 별도 구조금(유족, 중상해 등) 17건, 684,634천원
 - 비경제적 지원(현물 등)
 - 명절맞이(설/햐선물세트/55가구, 추석/프라이팬세트/110가구)
 - 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치유 프로그램 '제주도 2박3일 공감캠프' 진행(피해자 6명 참여)
 - 피해자 보안장치 cctv(캡스홈 도어가드) 피해가정 5가구 설치지원
 - '22년 '광주스마일센터'와 연계한 범죄피해자 전문 심리치료
 - 심리지원 934건, 사례지원 2,591건, 법률지원 423건, 생활관 입소 237건, 교육 및 홍보 223건 등 총 4,408건
 - '22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예산 지원(총 241,221천원)
 - 광주광역시 : 44,000천원 / 자치구(5) : 29,200천원
 - 전라남도 : 30,000천원 / 시군(6) : 80,000천원
 - 법 무 부 : 58,021천원
- ※ 2022년 자치단체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센터명	자치단체별	지원액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지역 : 광주광역시)	소계	29,200
	동구	4,000
	서구	7,000
	남구	4,000
	북구	6,000
	광산구	8,200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지역 : 전남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	소계	80,000
	나주	15,000
	곡성	10,000
	담양	10,000
	영광	15,000
	장성	10,000
화순	20,000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연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독자 추진 및 '광주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사업 추진
- '23. 연중. 범죄피해자 경제적·비경제적 지원 지속 추진
- '23. 연중. 피해자지원제도 및 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2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속 실시
- '23. 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여행프로그램 활성화
- '23. 보안장치 CCTV 지원 사업 활성화

④ 향후 연도별 추진일정

- '24.~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독자 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 사업 지속 추진
- '2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속 추진
- '24.~ 피해자지원제도 및 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⑤ 담당자

소관부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62-613-2932
담당자	김현용	이메일	hn101011@korea.kr

⑥ 대전광역시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지역 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활동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회복 촉진 도모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행정·재정적 지원
-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가 조속히 구제·회복 되도록 시스템 강화

3) 추진 경과

- (2004.~현재)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강화
- (2014. 4.)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2016.) 대전광역시 자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동구(12월), 중구(7월), 서구(5월), 유성구(4월), 대덕구(7월)
- 여성권익증진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 응급지원(2개소), 보호시설(12개소), 상담지원(11개소)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 긴급구호비 등 지원)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45,000천원(23명, 39건)
- (상담실적) 3,451건 / 면접 148건, 전화 2,327건, 이메일·인터넷·우편물 976건
- (상담내용) 안내(의료기관, 보호시설·상담전문가), 심리상담, 정보제공(형사절차, 법률절차, 배상명령절차, 피해자구조제도, 구조금 신청절차 등)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발생 시 회복을 위한 조속한 지원 추진
 -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 및 의료지원, 치료비, 생계비 및 취업지원비 지원 등
- (응급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운영으로 피해자 통합서비스 제공
- (보호시설) 피해여성의 생계, 주거, 의료, 법률 및 자활지원으로 회복 도모
-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치료회복 도모
- (자활지원) 여성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활성화, 성매매청소년 지원, 이주여성쉼터 일자리 제공 등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 및 재정지원 지속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긴밀한 협조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예방활동 전개

⑤ 담당자

소관부서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042-270-0544
담당자	곽진선	이메일	sum103@korea.kr

대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시설·상담소 현황

1. 범죄피해자 지원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둔산중로 78번길 15(대전지방검찰청 210호)	042)472-0082, 1295

2. 응급지원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	중구 대흥로 128, 2층(대흥동)	042)222-7042
대전해바라기센터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병원 2층(대사동)	042)280-8436

3. 보호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모자보호	루시모자원	중구 선화서로 23번길 63	042)256-2911
일시보호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서구 오량4길 61(정림동)	042)583-8875
미혼모공동생활	대전클로버	중구 천근로 70번길 36	042)583-4006
미혼모	아침들	중구 보문산로 329(문화동)	042)585-3004
	자모원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상서동)	042)934-6934
	햇살누리	서구 계룡로 318(갈마동)	042)524-3129
성매매	구세군정다운집	서구북수중로(북수동 271-1)	042)585-1141
	우리청소년여성쉼터	중구 대종로459-10(대흥동)	042)226-6300
피해이주여성	대전이주여성쉼터	서구 문정로(탄방동) 비공개	042)489-1366
가정폭력	대전YWCA가족쉼터	동구 비래서로(가양동) 비공개	042)637-9045
성폭력특별보호	나는봄쉼터	중구 테미로(대흥동) 비공개	042)253-1388
장애인성폭력	늘해랑장애인과	대덕구(대화동) 비공개	070-8808-1366

4. 상담지원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성매매피해 (2개소)	네티나무여성인권지원상담소	중구 대종로 553, 4층(선화동)	042)256-8297
	여성자활지원센터	중구 대종로 553, 4층(선화동)	042)223-8866
성폭력 상담소 (4개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구 월평서로 9, 3층(월평동)	042)223-8866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판암동)	042)637-1366
	위드유성인권상담센터	유성구 대학로 28, 614호(봉명동)	042)361-1004
	대전여민회부설성폭력상담소	중구 동서대로 1332번길 9-3(용두동)	042)257-3534
가정폭력 상담소 (5개소)	대전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	대덕구 신탄진로 63, 2층(연축동)	042)636-2033
	대전열린 가정폭력상담소	동구 계족로 368번길 81(성남동)	042)625-5441
	대전YWCA가정·성폭력상담소	중구 대흥로 128(대흥동)	042)254-3038
	들꽃 가정폭력상담소	서구 신갈마로211번안길 57(갈마동)	042)534-0477
	공감가정폭력상담소	유성구 계룡로18번길 51, 3층(지족동)	042)822-1366

⑦ 울산광역시

5-1-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①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에 의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3) 추진 경과

-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매년)
- '17. 9. 18.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022년도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법무부	울산시	양산시
합계	316,472	69,102	179,071	68,299
보조금	238,595	58,022	123,000	57,573
자부담	77,877	11,080	56,071	10,726

- 2022년도 연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지속 추진

〈2022년 12월 기준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피해자지원금 지원**	비 고
1,654건	71건 (시설안내포함)	771건	363건(156,08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 1,012건 • 양산 : 64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 66건 • 양산 :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 385건 • 양산 : 38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 292건(129,458천원) • 양산 : 71건(26,627천원) 	
비 고	* 의료지원 : 의료비 66건, 시설안내 5건 **피해자지원금 지원 363건 = 경제적 지원 297건(생계비 292건, 학자금 3건, 장례비 2건)+의료지원 66건			

〈피해자지원금 지원 상세내역〉

구분	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기타
지원건수(건)	363	292	66	3	2	0
금액(천 원)	156,085	109,131	40,905	1,800	4,249	0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023년 연중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지원, 우수사업 확대 지원 지속 추진
 -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행사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3명)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기관 사례공유 좌담회 개최(19회째)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123백만원)
 - 홍보지원 : 연중(상시)
 - 지자체 축제 행사장 홍보부스 설치 운영
 - 시 및 구군 전광판 활용, 구군 민원실 홍보 팸플릿 비치
 - 시내버스 정보안내시스템(BIS), 정류소 안내 단말기 홍보
 - 지자체 및 언론사 주관 마라톤 주자 등판 홍보
 - 우수사업 확대 지원
 - 유관기관(검찰, 경찰 등)과 연계한 피해자 방문 지원사업

(살인사건 유가족, 다문화 가정 등)

- 원격 수업 애로 피해가정 노트북 지원
 - 보복범죄 피해사건 보안방범장치 지원
 - 지역 내 유관기관 사례 나누기 좌담회 사업 지원
 - 상담봉사자 전문화 교육 지원
 - 피해자 힐링 프로그램 참여 지원
 - 피해자 가족 여행경비 지원(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지속 추진
 - 출생미신고 아동 소송비 지원
 - 사건 발생 현장 사례회의 소집 확대로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가구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대상 가구 확대
 - 생필품 지원 확대 및 혹한기 난방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범죄피해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행정기관과 유관단체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유관기관 업무 협약 체결 확대
 - 경찰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해당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울경 센터 상근자 워크숍 개최
 -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 7개사 대표 간담회 개최(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 S-OIL, 태광산업,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 범죄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전문봉사자 양성
 - 범죄분야별(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폭력, 학교폭력, 노동의료 분야) 전문 상담원 발굴 및 교육연수 지원
 -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지원 및 사후관리
 - 범죄피해지원 전문가 과정 연수
 - 피해자 상담자원봉사자 상시 운영 : 24시간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등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속 지원 : 연중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연중
- 범죄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확대 : 연중

5 담당자

소관부서	권익인권담당관	전화번호	052-229-3923
담당자	정수경	이메일	heroeun@korea.kr

⑧ 강원도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단체와 연계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인권보호 및 안정적 사회생활 영위기반 마련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에 의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내실 운영
 - (피해회복 지원) 생계, 학자금, 의료(치료)비, 심리치유 등 경제적 지원
 - (피해자 서비스) 상담,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범죄현장 정리 등
 - (기타 공익사업) 교육, 홍보, 피해자 가족화합, 유관기관·단체협력 등

3) 추진 경과

- 2005.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설치·운영(17개 시·군 관할)

센터명	주소	대표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춘천시 공지로 204(춘천지검 별관 204호)	이금선
원주·횡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주시 시청로 139(원주지청 206호)	조성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강릉지청 113호)	최기순
속초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속초시 법대로 17(속초지청 109호)	김기연
영월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월군 영월읍 향교 1길 34	엄오섭

- '20년부터 사업비 증액 지원 : 기존 60백만원 → 100백만원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022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567,000	100,000	467,000
춘천지역	95,000	20,000	75,000
원주·횡성지역	70,000	20,000	50,000
강릉지역	142,000	20,000	122,000
속초지역	115,000	20,000	95,000
영월지역	145,000	20,000	125,000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경제적 지원

구분	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기타
지원건수(건)	1,022	394	174	53	2	399
금액(천원)	495,395	244,459	114,447	38,831	8,000	89,658

- 범죄피해자 상담

구분	계	춘천지역	원주·횡성	강릉지역	속초지역	영월지역
지원건수(건)	3,905	595	1,082	337	1,089	802

※ 법률 구조절차, 의료기관, 피해자 구조제도 안내 등

- 강원권역 5개 센터 실무자 간담회 및 합동 홍보 캠페인
 - 센터 우수사례 및 사무처 행정사항 공유, 길거리 홍보 캠페인 전개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활동 추진
 - 지역별 행사장, 전통시장 오일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추진
 - 리플렛 및 홍보물품(고무장갑, USB 등) 배포, 거리 현수막 제작 설치
- 범죄피해자(가족) 명절 위로금·위문품 지원 및 고충상담 추진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법무부에 등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행정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지원 및 협력 강화 등

- 재정지원 : 5개 센터, 도비 100백만원(센터별 20백만원) 지원
- 연중 범죄예방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 모니터링 실시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 재정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33-249-2224
담당자	지방환경주사 황명운	이메일	hi96039@korea.kr

⑨ 경기도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의 활동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신속한 피해 회복 촉진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등 지원시스템 구축
-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단체 상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

3) 추진 경과

- 지역 내 9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매년)
- '09. 4.~'21. 12. 경기도 내 21개 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5. 11.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7.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법인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 보조를 내용으로 조례 일부 개정
- '21. 3.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 운영(기금 존속기한 : '23. 12. 31. / 목표액 : 5억원)
- '22. 5. 경기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신설(9개소 → 10개소)

〈 경기도 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정 현황 〉

연도	'09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년	'21년
시군명	군포시, 의왕시	여주시, 구리시, 시흥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성남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하남시	광명시, 안산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부천시	의정부시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1) 피해자 상담(전화, 방문, 면접 등)

(단위: 건)

계	살인 (미수)	강도	폭행/ 상해	성폭력	재산 범죄	방화	기타	비고
21,433	3,337	300	9,220	6,585	324	352	1,315	

2) 피해자 경제적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금액	비고
계	1,892	1,031,705	
직접지원비 (의료비, 생계비 등)	1,351	924,684	
간접지원비 (힐링행사, 홍보 등)	541	107,021	

* 도비 시군지원비 금액 실적 기준임

3) 홍보 및 교육

(단위 : 건, 명)

구분	홍보					교육 (워크샵, 세미나 등)	
	계	간행물 (팜플릿)	신문	온라인	캠페인	횟수	참석인원
홍보 및 교육	2,204	514	865	416	23	40	346

4) 2022년 경기도 자치단체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센터명	지자체	계	도비	시군비		비고
총계		1,189,535	180,000	1,009,535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시	129,200	20,000	109,200	39,200	
	용인시				30,000	
	화성시				25,000	
	오산시				15,000	
성남·광주·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남시	96,000	20,000	76,000	36,000	
	광주시				20,000	
	하남시				20,000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시	120,000	20,000	100,000	60,000	
	김포시				40,000	
안산·광명·시흥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시	205,000	20,000	185,000	100,000	
	광명시				35,000	
	시흥시				50,000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양시	69,387	20,000	49,387	30,000	
	의왕시				6,000	
	과천시				4,887	
	군포시				8,500	
평택·안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택시	75,000	20,000	55,000	20,000	
	안성시				35,000	
이천·여주·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천시	60,000	20,000	40,000	15,000	
	여주시				15,000	
	양평군				10,000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양시	190,000	20,000	170,000	120,000	
	파주시				50,000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양주시	205,224	20,000	185,224	25,000	
	의정부시				62,500	
	구리시				9,724	
	양주시				27,000	
	포천시				23,000	
	동두천시				22,000	
	가평군				5,000	
	연천군				11,000	
경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양주시	39,724	-	39,724	25,000	'22.5. 신설
	구리시				9,724	
	가평군				5,000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경기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예산 지원 : 1,227,450천원
 - 경기도 및 도 내 31개 시·군에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
- '23년 연중 지역 내 10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31개 시·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 보호 등 추진('22년 9개소 → '23년 10개소 지원)

〈 2023년 경기도 자치단체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예정) 〉

(단위 : 천원)

센터명	자치체	계	도비	시군비		비고
총계		1,227,450	200,000	1,027,450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시	136,000	20,000	116,000	46,000	
	용인시				30,000	
	화성시				25,000	
	오산시				15,000	
성남·광주·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남시	96,000	20,000	76,000	36,000	
	광주시				20,000	
	하남시				20,000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시	120,000	20,000	100,000	60,000	
	김포시				40,000	
안산·광명·시흥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시	205,000	20,000	185,000	100,000	
	광명시				35,000	
	시흥시				50,000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양시	70,500	20,000	50,500	30,000	
	의왕시				6,500	
	과천시				5,500	
	군포시				8,500	
평택·안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택시	75,000	20,000	55,000	20,000	
	안성시				35,000	
이천·여주·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천시	60,000	20,000	40,000	15,000	
	여주시				15,000	
	양평군				10,000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양시	200,000	20,000	180,000	120,000	
	파주시				60,000	

센터명	지자체	계	도비	시군비		비고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정부시	165,500	20,000	145,500	62,500	
	양주시				27,000	
	포천시				23,000	
	동두천시				22,000	
	연천군				11,000	
경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양주시	99,450	20,000	79,450	50,000	'22.5. 신설
	구리시				19,450	
	가평군				10,000	

4 향후 연도별 추진일정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
- 피해자 지원 공동네트워크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23.~'24. 안산시의 경우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하고자 2023년까지 5억원의 기금 조성 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연도별 기금조성액	100,000	200,000	200,000	500,000

5 담당자

소관부서	경기도 인권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3258
담당자	주무관 김모아	이메일	lovemoa@gg.go.kr

⑩ 경상남도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2) 추진 내용

-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민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적극 참여
 -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홍보 및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등

3) 추진 경과

- ('06. ~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개소 설치·운영(17개 시·군 관할)

센터명	대표자	관할지역	설립
(사)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영건	창원(진해 포함), 김해	2006. 6월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창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2006. 4월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 욱	통영, 거제, 고성	2006. 6월
(사)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은철	밀양, 창녕	2006. 5월
(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택섭	거창, 함양, 합천	2006. 5월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윤태석	마산, 함안, 의령	2011.10월

- ('14. 4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 진주경찰서, 경남해바라기센터 등 45개 기관·단체 참여
- ('16. 6월)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9. 4월) 진주사건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 추진
 - 범죄피해유족 및 관련기관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성금모금 협조 요청(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건의, 취업지원 등
- ('19. 12월) 창원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료전문기관) 개소·운영
- ('20. 2월)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경상남도 범죄피해보호지원 부서장 심의위원 위촉(도 자치행정국장)
- ('2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비 보조금 지원 확대('20년 1억원 → '21년 1.3억원)
- ('2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비 보조금 지원 확대('21년 1.3억원 → '22년 1.35억원)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사)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6개소에 도비 135백만원 교부
 -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상담 등 피해회복 지원

(단위 : 천원)

센터명	도비	관할지역
계	135,000	
(사)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52,500	창원(진해 포함), 김해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500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500	통영, 거제, 고성
(사)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000	밀양, 창녕
(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000	거창, 함양, 합천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23,500	마산, 함안, 의령

- 17개 시·군 강력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지속 추진
(단위 : 건)

센터명	계	법률 상담	학자금	생활 지원	의료 지원	홍보 활동	신변 보호	기타*
계	6,087	4,493	97	467	211	494	17	308
(사)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13	768	38	90	19	261	3	134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87	1,098	30	76	104	75	-	4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668	530	9	38	26	10	1	54
(사)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671	475	5	96	15	28	2	50
(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4	201	-	46	12	22	8	15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1,744	1,421	15	121	35	98	3	51

*(기타) 교육, 업무협약, 재판모니터링 등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연계 강화로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지원지속 실시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
- 범죄피해자지원 서비스 홍보를 위한 홍보캠페인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사례회의 개최
- 사후관리를 통한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명절맞이 사랑나누기 생필품 전달
- 피해자 경제적/상담 지원, 신변보호 및 법정 동행
- 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쉼터 위문
-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결의대회 개최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센터 업무 대도민 홍보 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상남도 도민봉사과	전화번호	055-211-3675
담당자	행정7급 김도경	이메일	pinpin@korea.kr

⑪ 경상북도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의 긴밀한 연계협력 강화 필요

2) 추진 내용

- 유관기관의 협약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의 역량 강화 및 확대
- 상담소, 보건소, 성폭력상담소,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3) 추진 경과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지역 검찰청, 의료기관, 법률관계자, 교육관계자, 상담전문가 등으로 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지지원센터 재정적 지원 및 센터별 피해자 지원

〈 '22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정적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센터명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시군비	도비	
계	583,500	503,500	80,000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영천, 경산, 청도, 칠곡)	53,500	40,000	13,500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고령, 성주)	23,000	18,000	5,000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000	90,000	10,000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000	47,000	7,000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0,000	130,000	10,000	
경북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동, 영주, 봉화)	76,000	66,500	9,500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1,500	52,000	9,000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000	30,000	8,000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8,000	30,000	8,000	

〈 '22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피해자 지원 현황〉

('22. 12. 31.기준)

센터명	상담지원(건)	직접지원(건)	지원금(원)	비고
계	13,304	4,816	1,042,248,448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영천, 경산, 청도, 칠곡)	2,749	771	251,759,200	
경북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동, 영주, 봉화)	1,345	916	129,507,312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11	434	62,988,390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609	480	195,618,010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69	188	34,843,290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41	160	36,492,600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고령, 성주)	999	516	86,122,477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105	722	157,524,990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776	629	87,392,179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통합네트워크 형성 강화 및 사회적인 영역 확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재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관 확대 및 연계지원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굴
- '23.~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수립 및 추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빨리 극복하고 주어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제공 및 민간범죄피해자단체 재정·행정 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개최
 - 관내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시,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및 체계, 범죄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신규 회원 / 대학봉사단, 유관기관 등)함으로써 기본 소양을 함양함.
- 경제적 지원
 -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자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생계비, 학자금 지원
- 의료지원
 - 의사, 한의사, 약사들에 의한 의료서비스 및 치료비 간병비 지원
- 상담지원
 - 전화상담 : 피해직후의 위기상담, 피해직후 정신적 안정을 우이한 개인상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법률, 의료, 상담)연계
 - 방문상담 : 피해자가 노약자이거나 어린자녀가 있어 직접 상담실로 오지 못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가 원하는 제3의 장소에서 상담지원
 -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멘토링(정서적 안정과 학습지원)
- 법률지원

- 형사절차, 피해자 구조제도 안내,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민간단체 연계지원 및 안내
- 법정모니터링(피해자를 대신하여 재판상황 모니터링)
- 현장지원
 -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등 위기개입,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 수사기관 법정동행
- 피해자 자조조직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피해자 가족모임 지원

3) 추진 경과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지역 검찰청, 의료기관, 법률관계자, 교육관계자, 상담전문가 등으로 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 및 지원으로 전문역량강화
 - 연중 범죄피해 예방교육 강화 및 홍보 활동 강화
 - 지역 내 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매년)
 - 범죄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지속 추진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연중 지역 내 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23개 시·군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지속 추진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개소에 대한 보조금 및 행정지원 강화
 -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및 정책 추진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개소에 대한 보조금 및 행정지원 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54-880-2837
담당자	행정6급 박세라	이메일	negacute@korea.kr

⑫ 전라남도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 의료지원 등 회복 시스템 구축
-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및 단체 협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홍보 및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등

3) 추진 경과

-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매 년)
- '15. 5.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5. 11.~'22. 12. 전남도 내 22개 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전남도 내 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제정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2년
	자치단체명	장성	진도, 함평, 순천, 광양, 해남, 영암	장흥, 화순, 영광, 강진, 곡성, 구례, 무안, 고흥, 완도	여수, 신안	목포	나주, 보성	담양

- '21. 3. 목포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료전문기관)개소·운영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정 지원 현황

(단위:천원)

센터명	자치단체별	지원액	센터명	자치단체별	지원액
광주전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라남도	30,000	전남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수시	30,000
	나주시	15,000		순천시	30,000
	곡성군	10,000		광양시	30,000
	담양군	10,000		고흥군	10,000
	영광군	15,000		보성군	10,000
	장성군	10,000		구례군	10,000
	화순군	20,000			
목포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목포시	20,000	해남·완도·진도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해남군	40,000
	신안군	15,000		완도군	30,000
	영암군	15,000		진도군	30,000
	무안군	15,000	장흥·강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강진군	30,000
	함평군	15,000		장흥군	30,000

● 22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피해자 지원 현황

('22. 12. 31.기준)

센터명	상담 및 법률지원 (건)	생계비 (건)	의료비 (건)	학자금 (건)	장례비 (건)	주거 지원 (건)	신변 보호 (건)	기타 (건)	지원금 (천원)	비고
계	4,512	533	158	124	14	21	6	340	775,313	
광주전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150	105	45	63	4	16	6	297	306,557	
목포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05	200	35	5	-	2	-	31	131,504	
전남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607	78	57	55	9	3		4	227,598	
장흥·강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40	95	10	-	-	-	-	6	33,298	
해남·완도·진도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10	55	11	1	1	-	-	2	76,356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MOU 업무협약식 진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활성화 및 피해자 발굴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 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치유 프로그램 진행
- 범죄피해자 보안장치 CCTV 지원 사업 실시(sk실터스 업무협약, 5가구)
- 지역봉사자 서포터활동 추진(강력범죄피해자 290명 대상 월 2~3회 상담 및 방문)
- 피해자 나눔운동 추진
 - 범죄피해자 가정 명절맞이 선물세트 전달 및 추석 제수용품 마련을 위한 지역 상품권 지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경제적·비경제적 지원 지속 추진
- 안정된 생활을 위한 방법 CCTV 지원 사업 추진
- 피해자지원제도 및 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프로그램 활성화 및 개별심리치료 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업무협조 체재 강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 부서 운영

구분	추진부서	추진내용
총괄	도민행복소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정책 전파 및 공유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민간활동 지원 • 시군의 추진실적 관리
협조	법무담당관 / 여성가족정책관 /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의 법률구조 안내(법무담당관) • 성·가정폭력(청소년)상담소 지원(여성가족정책관) • 범죄피해자 상담창구 개설(각 시군 담당부서) (수사기관과 연락체계 구축 등)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계층별 지원 네트워크(원스톱) 강화

5 담당자

소관부서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전화번호	061-286-2322
담당자	강인아	이메일	kia0909@korea.kr

⑬ 전라북도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목적

- 지역 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단체의 활동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 촉진 도모

2) 추진방향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시책 적극 홍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3) 추진경과

- 지역 내 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매년)

〈지역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센터명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	관할지역	설립일자
사)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병관)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11, 전주지검 121호 (연락처:063-277-1295)	전주, 김제 완주, 임실 무주, 진안	'06.6.21
사)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원요)	군산시 법원로 70, 군산지청 별관 103호 (연락처:063-452-1295)	군산, 익산	'06.9.14
사)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진태)	정읍시 수성6로 27 정읍지청 412호 (연락처:063-538-1295)	정읍, 고창 부안	'06.7. 4

센터명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	관할지역	설립일자
사)남원·순창·장수 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곽성주)	남원시 용성로 111 남원지청 별관 1층 (연락처:063-635-1295)	남원, 순창 장수	'07.2.22.

- '16. 1.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5. 11.~'17. 2. 전북지역내 14개 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지역내 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정 현황〉

제정연도	'15년	'16년	'17년
자치단체명	군산시, 무주군, 장수군	완주군,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별 주요 추진 활동
 - 전주센터 : 명절 맞이 생필품 및 한끼식사 꾸러미 지원, 피해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멘토링 사업단 활동, 범죄예방교육 등
 - 군산·익산센터 : 피해자 자조모임(이침, 업싸이클링, 문화관람 등)
 - 정읍센터 : 명절 맞이 사랑나눔 행사 등
 - 남원·순창·장수센터 : 장학생 선발 및 증서 수여식 등
- '22년 연중 전라북도 지역 내 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시·군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상담 및 신변 보호 등 지속적으로 추진
 - 피해자 상담(방문 및 전화, 온라인 상담 등) 3,571건
 - 피해자 및 가족 경제지원(생계비, 학자금, 물품지원 등) 667건/248,929,632원
 - 피해자 및 가족 치료비지원(수술,간병비, 심리상담비 등) 200건/256,484,370원
 - 피해자 및 가족 장례비지원 9건/27,366,000원
 - 피해자 및 가족 법률지원(신변보호, 법정모니터링 등) 340건/2,157,000원
 - 피해자 및 가족 주거지원(보증금, 주거이전비 등) 8건/2,289,910원

-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및 행사 139건/36,105,560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축소)
-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법무부 산하 전주스마일센터 위탁 운영
(※ 전주스마일센터 : 강력범죄 피해자 전문 심리치료 및 임시 숙소 제공)
-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호남·제주권 센터 연계 분기별 간담회의 및 세미나 구축
- 연계기관 사례회의를 통한 강력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 체계 마련
- 멘토활동 및 위원 재능기부 형식의 실질적 지원 추진
- 홍보물품 배포, 현수막 게시, 전광판 및 버스 후면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센터 홍보 활동

3 '23년도 추진계획

- '23년 연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 강구 및 감독체제 구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도 자치행정과, 시·군)간 범죄 피해자 지원업무 연계 및 협력 강화, 사업설명회 및 사례 회의 진행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보조금 증액하여 피해자 및 가족 취업 훈련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 노후 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을 위한 CCTV등 신변보호장치 설치 방안 검토
- '23년 연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및 홍보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민원실, 주민센터에 피해자보호제도 안내 리플렛, 책자 비치·배포
 - 시·군 연계한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상담 및 홍보 캠페인 진행
 - 우범지역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활동
 - 시내버스 광고 및 버스 승강장 광고를 통한 센터 홍보 효과 증대

- '23년 연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례연구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민간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계획 수립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관련 범죄피해자 상담기관의 사례연구 활성화 및 세미나 개최
 -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최적의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23년 보조금 지원 계획〉

(단위 : 천원)

센터명	도비	시·군비	합계
전주	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50,000 •김제시 30,000 •임실군 25,000 •완주군 20,000 •무주군 20,000 •진안군 20,000 	235,000
군산·익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50,000 •익산시 50,000 	100,000
정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읍시 30,000 •부안군 20,000 •고창군 20,000 	70,000
남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원시 24,000 •순창군 20,000 •장수군 20,000 	64,000
총계	70,000	399,000	449,000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인)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5 담당자

소관부서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63-280-2947
담당자	주무관 배병훈	이메일	kongteus@korea.kr

⑭ 충청남도

5-1-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①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지역 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단체의 활동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회복 촉진 도모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보호법」제34조 등에 의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

3) 추진 경과

- '06.~ :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비지원(24,300천원, 금산군 관할)
 - 도내 지청관할 5개 센터*는 시군에서 예산지원
 - * 천안·아산, 공주·청양, 서산지역, 논산·부여·계룡,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2. 12.~'18. 11. : 도내 11개 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7. 2. :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022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재정 지원 : 총 887,140천원
 - 충청남도 : 89,440천원(대전센터 19,440, 천안센터 70,000)
 - 15개 시군 : 797,700천원(시군 관할 5개 센터 및 대전센터)

〈 2022년 재정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센터명	기관명	지원액	센터명	기관명	지원액
대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충청남도	19,440	서산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서산시	70,000
	금산군	20,000		당진시	70,000
				태안군	50,000
천안아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충청남도	70,000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논산시	55,500
	천안시	100,000		계룡시	30,000
	아산시	67,200		부여군	40,000
공주청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공주시	55,000	홍성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령시	60,000
				서천군	50,000
	청양군	30,000		홍성군	50,000
			예산군	50,000	

〈 2022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추진 실적(6개 센터) 〉

(기준 : '22. 12)

내용	건수(건)	금액(천원)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및 안내	6,547	17,490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37	52,917
	생계비 및 물품 지원	1,187	992,847
	의료비 및 간병비	309	222,711
	장례비 지원	18	65,640
	학자금 및 취업 지원	190	131,537
법적 지원	형사절차, 법률구조절차 등 법률지원	2,502	0
	신변보호(법적동행)	188	3,122
홍보·교육활동	홍보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2,318	30,931
기타 지원	청소년 범죄피해자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지원	337	49,448

지방자치단체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협력 강화 등(6개 센터)
- 피해자 지원 강화

- 지정기탁금, 수행자 작업 장려금, 사랑의 성금 확보
- 피해자 사후관리 프로그램(멘토활동, 동행체험, 문화공연 등) 강화
- 피해회복 지원활동 자조모임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운영
- 통합지원 체계 구축
 -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법률전문 상담서비스 강화
 - 관할지역 경찰관서 등 협력 시스템 확립
 - 추진업무실적 보고대회 개최
- 상담위원(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 시군 전광판 활용, 소식지 발간, 사랑의 저금통 배부 등 다양한 홍보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4.~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지속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1-635-2332
담당자	이철강	이메일	goote333@korea.kr

⑮ 충청북도

5-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족)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원스톱서비스 강화
- 범죄피해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긴급구호, 신변보호, 경제적지원, 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범죄피해자(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3) 추진 경과

-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매년)

〈 2022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

(단위 : 천원)

센터명	도비	시·군비	합계
	65.000	323,500	388,500
청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48,500 • 보은군 6,000 • 증평군 5,000 • 진천군 15,000 • 괴산군 8,000 	112,500

센터명	도비	시·군비	합계
충주·음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5,000	• 충주시 70,000 • 음성군 35,000	120,000
제천·단양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0,000	• 제천시 59,000 • 단양군 37,000	106,000
영동·옥천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0,000	• 영동군 20,000 • 옥천군 20,000	50,000

- '06.~ 현재 범죄피해자보호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
⇒ 5개 법인·단체('06년 1개소, '18년 4개소, '19년 5개소 확대 지원)
- '16. 3.~'21. 12. 충청북도 내 10개 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17. 7. 7.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18. 12. 청주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전문기관)설립·운영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현황 : 도비 65,000천원 , 시·군비 323,500천원
- 2022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

구분	합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기타	비고
2022년	108건 65,000천원	72건 31,608천원	25건 23,592천원	9건 4,800천원	1건 4,000천원	1건 1,000천원	
2021년	109건 65,000천원	68건 42,928천원	23건 12,448천원	17건 8,400천원	1건 1,224천원		

- 연중 범죄피해자 상담지원 창구 상설 운영 및 실무 지원
- 청소년상담 추진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외 12개소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독자적인 프로그램(힐캠프, 프라이드업, 반찬나눔, 김장나눔, 자조모임 등) 개발 독려
- 강력 범죄피해자(가족) 경제적 지원 지속 지원(도, 11개 시군)

- 범죄피해자(가족) 심리적 상담치료 지속 추진(5개소)
- 피해자 지원제도 및 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전광판 등 활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2023. 3월중)

〈 2023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안) 〉

(단위 : 천원)

센터명	도비	시·군비	합계
	65.000	323,500	388,500
청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48,500 • 보은군 6,000 • 증평군 5,000 • 진천군 15,000 • 괴산군 8,000 	112,500
충주·음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시 70,000 • 음성군 35,000 	120,000
제천·단양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 59,000 • 단양군 37,000 	106,000
영동·옥천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군 20,000 • 옥천군 20,000 	50,000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23~'26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 추진
- '23~'26 강력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속 추진
- '23~'26 피해자 지원 제도 및 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23~'26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도민소통과	전화번호	043-220-2625
담당자	행정7급 류택열	이메일	kobs2323@korea.kr

⑩ 제주특별자치도

1-1-2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2) 추진 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접수 및 긴급 상담, 관련 기관·시설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으로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하여 3~7일간 보호

3) 추진 경과

- '98. 1. 1 : 제주여민회부설여성상담소 위탁 운영 : 자체운영
- '01. 8.10 : 「1366」상근상담원 9명 공개채용(도지사 위탁)
- '01.10.26 : 「1366」현판식(여성부 주관)
- '03. 2.27 : 「1366」사무실 이전(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 '03. 4. 1 : 운영주체 변경(제주도 직영)
- '05. 1.15~'09.1.14. : 운영주체 변경(재단법인 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위탁 운영
- '09.1.15~현재 : 운영주체 변경(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위탁 운영

- '15. 추경~현재 : 여성폭력 Hot-Line 대응시스템 운영 지원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비 지원(661,866천원)
 - 운영실적 : 상담지원 7,111건
(가정폭력 5,344, 성폭력 235, 성매매 33, 데이트폭력 209, 기타 1,290)
 - 지원내용 : 기관연계 8,546건
(심리정서 507, 수사법적지원 2,360, 기관연계 5,204, 의료지원 410, 기타 65)
- '22. 연중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운영(20,000천원) : 79건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2. 연중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 및 보호 지원 지속 추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681,586천원)
 - 여성폭력 발생 현장 경찰 동행 긴급출동 핫라인 대응시스템 지속 운영(20,000천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 보강(30,000천원)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핫라인 운영 등 피해자 보호 지속 지원 추진

⑤ 담당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전화번호	064-710-2861 (064-710-2864)
담당자	5급 고미경 (7급 한성욱)	이메일	suheemo@korea.kr (dnarum@korea.kr)

1 과제 개요**1) 추진 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육 및 보육,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생계비, 교육지원비 등 지원

2) 추진 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등 지원 내실화

3) 추진 경과

- '02.~현재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운영 지원
- '14.~현재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추가 운영 지원
- '21.3.2.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개소·운영지원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연중.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숙식 및 보호 지원(비공개시설, 3개소 16명 보호)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2. 연중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3개소) 지속 운영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지속 보호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속 운영, 비수급자 생계비 및 입소아동에 대한 수당, 심리치료비 지속 지원 추진

5 담당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전화번호	064-710-2861 (064-710-2864)
담당자	5급 고미경 (7급 한성욱)	이메일	suheemo@korea.kr (dnarum@korea.kr)

1 과제 개요**1) 추진 목적**

-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종사자 사명감 고취 및 역량 강화 도모

2) 추진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1366제주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3) 추진 경과

- '15. 4.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제정
- '15.~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30,990천원)
- '22. 연중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347,712천원)

3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1366제주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속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도모

4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속 지원

5 담당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전화번호	064-710-2861 (064-710-2864)
담당자	5급 고미경 (7급 한성옥)	이메일	suheemo@korea.kr (dnarum@korea.kr)

1)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지역사회 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 민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원봉사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조기 일상 회복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직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3) 추진 경과

- 2005. 1.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 2005. 10.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 2005.~현재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020. 10. :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2) '22년 주요 추진실적

- '22.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36,070천원), 상근직원(2명)
- '22.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추진

구분	합계	상담	법정동행	경제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보조금 지원액
계	693	531	48	85	113	0	100,235
2022년(~9월)	242	188	13	20	21	-	24,235
2021년	276	192	13	29	42	-	40,000
2020년	175	151	22	36	50	-	36,000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23.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및 간담회 추진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37.870천원)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지원(50,000천원)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간담회 실시(분기별 1회)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속 지원

⑤ 담당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64-710-3661 (064-710-3664)
담당자	5급 양순화 (9급 고용준)	이메일	shyang69@korea.kr (sg2008@korea.kr)

⑰ 세종특별자치시

5-1-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① 과제 개요

1) 추진 목적

-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통한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2) 추진 내용

- 범죄피해 지원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시민서비스 강화 및 지역 안정망 구축
 - 지역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등 지원
 -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감시 사업 지원

3) 추진 경과

- '10. 대전지검 검사장 주관, 4개 시·도·군(대전·충남·연기 → 세종·금산) 부단체장 참석하에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협의
 -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실시(매년 20,000천원)
- '16. 8.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12. 7.~현재. 관내 범죄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활동 사업 추진

② '22년 주요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20,000천원)
 - (내용)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 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비용 등 지원
 - (실적)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22.9월 말 기준 / 계속 사업)
 - ↳ 생계비(6명 / 10,600천원), 치료비(3명 / 1,347천원),
-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사업 전개(14,000천원)
 - 4대악 청소년 범죄예방캠페인(연중), 결연가정지원사업(밀반찬, 생필품 지원 등)

③ '23년 주요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속 추진
 -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원을 통해 관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법률상담 및 주거안정 등 제공
 - ※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20,000천원)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결연가정 지원 등으로 관내 범죄예방 추진
 -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세종시지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20,000천원)

④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세종시지구위원회 지속 지원을 통한 지역 범죄피해·예방 적극 지원
- 피해자지원제도 및 센터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⑤ 담당자

소관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4-300-3164
담당자	임지원	이메일	jiwon3@korea.kr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2022~2026)

2023년도 시행계획

인쇄일 : 2023년 7월

발행일 : 2023년 7월

발행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연락처 : T. 02,2110,3263 F. 02,2110,0354

디자인·인쇄 :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

